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6. 2

경 찰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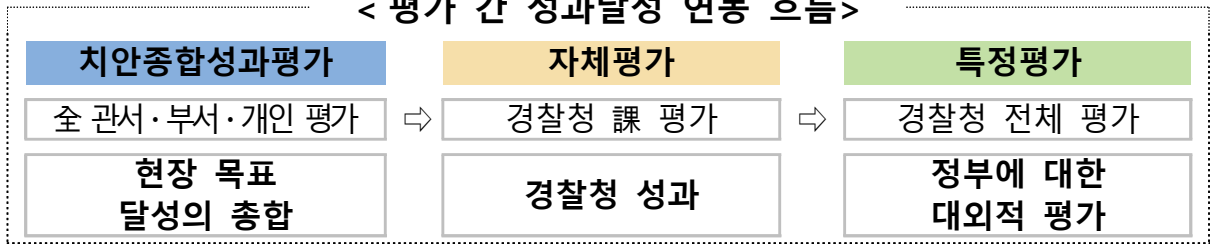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 간 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성과 창출 뒷받침

- 자체평가(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정책과제)를 매개로 특정평가(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및 치안종합성과평가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설계
 - ※ 50개 관리과제 전체를 국정과제 및 경찰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

< 평가 간 성과달성 연동 흐름 >



- 현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경찰 전체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성과에도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평가항목 배점 조정, 내실있는 성과 창출 지원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목표 달성도’ 항목 배점 상향(55점 → 60점), 평가의 합리성 도모
 - ※ (운영지침)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최소 60%로 설정

< '24년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10
2. 정책 추진의 노력도 (30)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10
	2-2.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20
3. 목표 달성도 (55)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15
	3-2.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5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5
4. 정책 홍보 (5)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



< '25년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10
2. 정책 추진의 노력도 (25)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10
	2-2.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5
3. 목표 달성도 (60)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20
	3-2.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5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5
4. 정책 홍보 (5)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정책과제 ‘설계-추진-평가-환류’ 전 과정*에 자체평가위원 참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합리적 평가 유도

* 정책과제 컨설팅(3월)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4월) → 중간점검(7월) → 본평가(11월) → 추가평가(26.1월) 등 5회 실시

- (평가단 구성) 폭넓은 내·외부 평가단 구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
 - － (외부) 교수·법조인 등 27명으로 구성,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
 - － (내부) 치안정책 과제를 직접 추진하는 경찰청 계장급(56명)을 내부평가단으로 구성,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

※ 평가자 소속 국·관의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한 평가 유도

□ 평가방법

- (사전 컨설팅) 정책과제 수립 단계부터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해 성과지표의 대표성·적절성 등 확보, 정책 효과성 제고(3월)
- (중간점검) 정책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7월)
- (본 평가) 내·외부 평가단 구성, △성과지표 설계 적절성 △정책 과제 수행 노력 △목표 달성도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11월)
 - ※ 과제별 최종점수는 외부평가단 50% + 내부평가단 50%로 반영
 - － 과제별 평가점수는 평균(85)·표준편차(5) 보정, 평가자·평가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의 합리성 제고
- (추가평가) 우리청 정책과제 본평가(1~10월)와 자체평가 기간(1~12월)의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해 11~12월 추진실적 등을 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25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50개
※ 본청 각 과별 1개 과제 / TF·직접수사부서 등 10개 부서는 유관도 평가 진행
- (평가지표) 4개 항목·7개 지표로 구성

< '25년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10
2. 정책 추진의 노력도 (25)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10
	2-2.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5
3. 목표 달성도 (60)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20
	3-2.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5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5
4. 정책 홍보(5)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

2. 평가결과

[1] 총 평

□ '25년도 총 5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5%), 우수 8개(15%), 다소 우수 8개(15%), 보통 15개(30%), 다소 미흡 7개(15%), 미흡 7개(15%), 부진 2개(5%)로 나타남

우수 이상
(11개, 20%)

- 정책추진 프로세스 관리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이미지 확립
-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 국민 안전을 위한 과학치안 추진
-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수사시스템 구축
- AI-Digital 도입을 통한 첨단 과학수사로 도약
-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미흡 이하
(9개, 20%)

-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
-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치안산업 기반 마련으로 과학치안 실현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치안 활동 활성화
- 지역경찰 역량 개발 고도화
-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재난·안전사고·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 치안외교로 확장·발전을 위한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
- 안보정보 역량 고도화 및 국내외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

□ **총 50개 관리과제 152개 성과지표 중 000개 달성(평균 달성률 00.0%)**

- 0개 지표는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전체 지표의 평균 달성률은 00.0%

구분 \ 연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4.7%	96.5%	
총 성과지표 개수	152	146	152
총 성과관리 과제수	52	49	50

- 성과목표치 미달 지표는 주로 △ 정성평가 요소인 만족도 분야
△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지표 등이 대부분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예산확보수준	54.3%	54.0%	99.4%	○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및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쏠 부처 지출구조 조정 및 사회복지·교육 분야 지출 확대가 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분석됨 - 다만, 정부 기조에도 전년대비 5,373억원 (↑4.1%)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둠
경찰장비 만족도	90.6점	89.2점	98.5%	경찰장비 만족도는 최근 3년간 지속 상승세(84.5 → 86.6 → 88.8)인 점을 감안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90.6)하였으나 목표치 달성에 다소 미흡 다만, 경찰장비에 대한 내부 만족도가 지속 상승한 점을 감안할 필요
인사직무만족도	80.8점	72.9점	90%	조직원의 주관이 반영된 설문조사인 인사직무 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80.3→72.9, 7.4점↓) 하였으나, 경찰청 전체 직무만족도가 전년 대비 8.1점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 하락 국면인 상황을 감안 필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6.2%	-1.1%	18%	△ 교통량·인구이동 지속 증가 △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수준의 △ 과거 사망자 감소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사유로 인해 목표치 달성 미흡 *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23년 4.95명)는 이미 OECD 평균('21년 5.3명) 하회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90.5점	89.6점	99%	목표치는 가이드라인상 '상' 기준으로 높게 설정하고 최근 3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소폭 미달한 것으로(99% 달성), * '21년 87.2 → '22년 88.1 → '23년 89.4 → '24년 89.6 '24년 효율적 지역경찰 운영 기반 조성(중심지역관서 근무체계개편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25년 이후 시간차를 두고 반영,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2] 주요성과

□ 민생 중심으로 경찰 인력 재배치, 경찰 수사 역량 제고

- (인력 재배치) 정부 출범 후, 기동대 등 여타 인력 감축, 실 수사 1,907명 보강
 - － △ 보이스피싱·마약범죄(+520명) △ 초국가범죄 및 외사정보 복원(+514명)
△ 지구대·파출소 및 피해자 보호(+587명) 등 민생치안 현장 부서로 조정
 - － 과거 폐지·축소되었던, △ 국제공조기능 확대(국제협력관 → 국제치안 협력국) 및 △ 경찰서 단위 안전·민생정보 기능 복원
- (수사역량) △ 사건 지휘·관리 강화 △ 우수 인력을 수사부서에 배치하는 인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 개선
 - * (사건처리기간) '20년 55.6일 → '21년 64.2일 → '22년 67.7일 → '23년 63일 → '24년 56.2일 → '25년 54.5일
(검사 요구·요청 건수·비율) '22년 120,840건(10.1%) → '25년 125,059건(8.6%)
 - － 경찰 수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작동 중
 - *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 검사·사건관계인에 의한 경찰수사 10종 통제

□ 민생범죄 총력 대응 기반 마련

-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9. 29. / 135명), △ 시도청 전담수사팀 보강(+392명) 등 예방~수사까지 전담대응체계 구축
 - * 범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8.30.), 통합대응단 운영계획(9.15.) 수립·시행
 - ⇒ 출범 후 전년 대비(10~12월) △ 발생 25.5% ↓ △ 피해금액 19.6% ↓
- (마약) △ 마약 전담 수사체계 확대(378→942명) △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재편(17개청, 82명) △ 가상자산 이용 마약 전담수사팀 신설(41명) 등
 - ⇒ 전년 대비 △ 온라인 마약 사범 검거 25% ↑ △ 주요 클럽마약 3종 압수량 4.4배 ↑

- (관계성 범죄) '25.1~7월 발생한 70건의 관계성범죄 살인사건을 전수조사·분석하여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시행(8.25.)

* 총 11개 정책과제 발굴, 매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 점검 중

⇒ 대책 시행 後^{8월 이후} △전자발찌 신청 324.3%↑ △유치 신청 93.4%↑

- (아동 약취·유인) 최근 3년('23~'2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672건 분석,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시행(11.11.)

* 5개 부·처·청(행안부·경찰청·교육부·복지부·법무부) 24개 과제 추진

⇒ 대책 시행 後 약취·유인 검거율 5.9%p↑ (94.1% → 100.0%)

□ 초국가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초국가범죄 대응) △ 캄 코리아전담반('25.11월), 경찰협력관·주재관 확대 △ 조직·인력 확충 △ 국제협력·공조 역량 결집 등 총력 대응

* 주요 국외도피사범 역대 최다 송환('25. 12월 말 기준 828명, 20%↑)

조직·인력	△ 해외 파견 확대 : 경찰협력관 +14명, 경찰주재관 +11명 △ 국제협력관(경무관, 2과) ⇒ 국제치안협력국(치안감, 3과)
국제협력 국제공조	△ 코리안 전담반 MOU 체결 및 개소식(11. 10.), 총 7명 파견 △ APEC 한중 정상회의 계기,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MOU」 체결 △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주요국과 '국제공조협약체' 발족(10월, 9개국·2기구) 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11월, 16개국·3기구) 추진 △ 인터폴(11월)·아세아나폴(11월) 총회,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 결의안」 발표 △ UNODC MOU(5월) △ 아세아나폴 펀딩 추진(10월~) △ 국제경찰청장회의(10.20.~24. / 27개국·기관 참여) △ 필리핀 전세기 송환(9월, 49명) / 캄보디아 전세기 송환(10월, 64명)

- (치안 AI) 국정과제에 '치안 AI 혁신'이 반영되고, △ 민생 AI 10대 과제선정(모두의 경찰관) 등 범정부 AI 전환에 적극 동참

* △모두의 경찰관(150억) △AI 반도체를 이용한 스마트헬멧·드론용 카메라(60억) 등

- (재해·재난) △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25.7월) △ 재난 정보 사전 공유(정보 공유 8%↑) △ 공동대응(경찰-소방 상호협력관 파견) 등 협업체계 고도화

[3] 개선·보완 사항

□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전국적 통합수사 강화 필요

- 금융사기 전국 통합수사 관련, 범행단서를 중심으로 동일한 사건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체계* 구축

*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주요 금융사기의 범행단서를 토대로 연관성 분석한 후 시·도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체계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발생 사건 및 신고내역 자료 등 분석,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 수사지휘하는 등 전국적 통합수사 강화

□ 경찰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지속 강화 필요

- 경찰 수사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통제장치 촘촘히 설계

▶ (형소법) 형소법상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이의신청 시 의무적 송치 등 수사단계별로 통제장치를 마련

▶ (내·외부 통제장치)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외부기관 통제와 함께, △사건 관계인 수사심의신청제도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

* '25.8.11.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도청 위원 인력풀 확대 등 포함한 예규 개정 완료

-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 지휘체계 구축하여 독립성 확보

▶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가 가능하도록 규정(경찰법 제14조 제6항)

▶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보장, 국회 탄핵소추 등 중립성·독립성 확보 장치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휘관 배치 노력 필요

- 사이버수사팀장으로 사이버분야 책임수사관을 1순위 선발, 사이버분야 전문수사관을 2순위로 선발하도록 「수사경찰 인사지침」 개정('25년.7월), 사이버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휘관 배치 노력

(4) 평가결과 종합

연 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강화	다소우수
2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근절 및 수사역량 강화	보통
3	마약·조직폭력·외국인·피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보통
4	민생침해 사이버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강화	보통
5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재범방지 강화	보통
6	소년범죄·실종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보통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체계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보통
8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인권 역량강화	다소미흡
9	선제적 예방활동 및 공동체 협업을 통한 안전한 일상 확보	보통
10	재난·안전사고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미흡
11	112치안상황실 중심 상황관리 역량 제고	보통
12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 개선·확산	다소미흡
13	국민 안전을 위한 과학치안 추진	우수
14	치안산업 기반 마련으로 과학치안 실현	미흡
15	데이터 기반 과학적 치안 활동 활성화	미흡
16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다소우수
17	AI-Digital 도입을 통한 첨단 과학수사로 도약	매우우수
18	치안외교로 확장·발전을 위한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	미흡
19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다소미흡
20	인권·안전에 유의한 안정적 집회·시위 대응	다소우수
21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우수
22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다소우수
23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수사시스템 구축	우수
24	수사의 완결성·공정성 등 제고 및 국민을 위한 수사시스템 구축	보통
25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보통
26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우수
27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보통
28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역량 강화 및 선제적 안보상황 관리	다소미흡
29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우수
30	안보정보 역량 고도화 및 국내외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	부진

연 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31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안보환경 구축	보통
32	대테러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	다소우수
33	빈틈없는 경호 행사를 통해 국가 안전 확보	다소우수
34	정책추진 프로세스 관리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매우우수
35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구현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우수
36	현장 법집행 지원기반 확충으로 국민안전 확보	다소우수
37	인사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 중심의 인사운영 체계 구축	다소미흡
38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	미흡
39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보통
40	실효성 높은 현장중심 경찰장비 보급 및 운영	다소미흡
41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우수
42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우수
43	문제해결형 지역경찰 활동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	보통
44	지역경찰 역량 개발 고도화	부진
45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미흡
46	실질적 감사 활동으로 조직관리의 건전성 제고	다소우수
47	감찰 혁신 내실화를 통한 조직관리의 건전성 제고	보통
48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미흡
49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이미지 확립	매우우수
50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 경찰 구현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불법사금융’ 등 각종 경제범죄 엄단
 - － (검거성과) '25년 수사관 1인당 기획수사 검거인원은 16.1명으로 (총 82,062명), 최근 3년 평균 대비 11.0% 증가
- ▶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25년 1년 동안 총 11,355건·4,534명 검거(구속 1,018), 전년 동 기간 대비 검거건수 70%, 검거인원 49% 증가, 발생건수 4% 감소
 - ▶ (노쇼사기·팀미션사기) 신종수법을 단속 대상으로 추가, '25년 1,851건·970명 검거
 - ▶ (불법사금융) △법제도 변화 △범행수법 변화 등을 반영한 특별단속 추진하여 총 3,366건·3,396명 검거, 전년 동 기간 대비 검거건수 70% 검거인원 35% 증가
- － (검거율 제고)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계획 수립 △사건병합 활성화 등 각종 시책 추진, 최근 3년 평균 대비 사기범죄 검거율 1.4% 증가
 - ⇒ 경제범죄 근절지수 24점으로, 목표치 20% 초과 달성
 - 본청·시도청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보전을 통해 총 3,400건·8,500억 원 보전(법원 인용결정문 기준), 범행동기 박탈
 - ⇒ 전년 동기 대비 보전건수 15% 증가, 목표치 5%p 초과 달성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을 통한 통합대응체계 구축
 - － (협력강화) 통신·금융 분야의 신속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11명 파견, 부처 간 실시간 협력·현장조치
- * △금융위·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통신 분야 유기적 연계) △금융감독원(금융권 업무협조)
△금보원(의심 계좌정보 제공) △방미심위(유해정보 등 차단) △KISA(악성앱 탐지·스팸차단)
- － (상시 대응체계) 신고대응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365일 확대, '25년 326,661건 신고·제보 상담 상담건수50.8%·응대율26%p 증가
 - － (범행수단 차단) 범죄 이용 의심 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10분내) 하는 ‘긴급차단’ 제도 도입, 통합대응단 개소 후 △전화번호 차단 건수 433% △메신저 차단건수 53% △악성앱 차단건수 347% 증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결과) 경제범죄 근절 성과 우수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나, 근본적인 범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존재
- － (원인분석) △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홍보전략 부재 △ 정보통신 서비스(SNS 등) 상 방지 조치 근거의 부재 등 금융·통신 발달에 따라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 발생

- ▶ (홍보전략 부재) 다중피해사기 등 신종수법에 대한 범죄유형별 특성 및 주요 피해연령층, 악용 플랫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
- ▶ (정보통신서비스 차단근거 부재)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는 전화·문자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
※ 카카오톡은 자체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이용정지 또는 계정 삭제 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맞춤형 홍보) 피해층별 분석 체계를 구축, 신종 수법이 지속 홍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주기적인 콘텐츠 제작·배포
※ 경찰에 접수되는 다중피해사기 사건 전건 데이터수집 체계 구축('25.10.), △ 연령대 △ 직업군 △ 기망내용 △ 유입경로 등 취약요인 분석하여 맞춤형 홍보방안 추진
- (법제도 지속 정비) △ 투자리딩방 사기 △ 노쇼사기 등 각종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통합대응 및 방지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지속 추진
- － 민주당 보이스포싱 T/F*에서 신종사기를 포괄하는 방지체계 필요성에 공감하여 경찰청안을 先 발의**, 행안위 상정 및 의견조회 중(1.6.~20.)
* 9. 25. 발족, 한정에 정책위의장 / ** 행안위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12.29.)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각 기획수사 단속 성과 분석 및 포상실시	11월	○ '25.11.21. 공적 마일리지 특진·승급 추천 대상자 선정, 12.22. 경제범죄 수사분야 유공자 포상	정상추진
○ 연간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우수사례 공유	12월	○ '25.1.~12. 월간 범죄수익 보전 우수관서 및 우수사례 선발, 폴넷공지	정상추진
○ 「통합분석대응시스템 및 전화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12월	○ 국정원 보안성검토 지연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 수행 일정 지연, '26년 5월경 사업 완료 예정 * 신고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법위반 소지가 있어 KISA를 통해 수신하는 연계개발 과업 추가	지연

(1) 평가 결과

□ 주요성과

- (광역·조직성 범죄 집중 수사)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최종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피싱·조폭·마약·중대재해 등 중요 사건 수사,
 - 살인·강도 등 경찰서에 접수된 강력 사건 범인 추적 등 공조를 통해 치안 불안 요인 신속히 제거, 광역화된 조직적 범죄 대응력 향상
- ▶ (수사 성과) 총 25,051건 수사, 35,588명 송치(구속 2,840명) / 창설 1년 10개월 만에 47,695명 검거
- ▶ (공조 성과) 경찰서에 접수된 중요 사건 8,325건 이관받아 수사, 살인 등 강력 사건 517건 추적 공조
-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강절도·생활주변폭력·홀덤펍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 집중단속과 시기별 특별형사활동* 등 추진
 - * 특별형사활동 기간 근무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강력범죄 피의자 64,760명 검거(구속 1,435)
 - 이를 통해 국민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살인·강도·절도·폭력·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 향상 등 안정적 치안 유지
- ▶ (집중단속 성과) △강절도(41,202명 검거) △폭력(68,912명 검거) △홀덤펍(1,442명 검거, 90억 원 몰수·추징)
- ▶ (피해자 보호) 피해품 35,868건(362억 원) 회수하여 피해 회복,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조치 698건
- ▶ (검거율)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검거율 1.7% 향상('24년 81.3% → '25년 83.0% / 역대 최고)
- (안전사고 수사 전문성 강화) 17개 청에 설치·운영하던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의 인력을 증원하여 '중대재해 수사 전담팀'으로 확대 개편
 - 이 외에도 고용부와의 수사협업체 정례 운영, 경력경쟁채용 확대, 교육과정 증설, 근로감독관 합동교육 추진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 ▶ 중대재해 수사전담팀(총 59명 → 143명 / 총 20개 팀 편성 / 근로감독관 파견)으로 확대 개편
- ▶ 산업재해 유발 구조적 원인(불법하도급, 뇌물, 리베이트 등)까지 규명 / 8월부터 834건 수사
- (실종수사 대응체계 개선)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장기 실종 집중점검 등 실종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체계적 업무 수행
 - ▶ 실종아동등 △12시간 이내 발견율 1.5%↑('24년 80.5% → '25년 82%) △1일 이내 발견율 1.7%↑('24년 88.8% → '25년 90.5%) 등 향상 / '25. 1월~10월 장기실종자 총 55명 발견
- (고위험 교통 범죄 대응 강화) 시도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 △ 인피 뺑소니 △ 상습음주운전 △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 강력 대응

- ▶ (단속 성과) △ 음주 차량 압수 실적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24년 250대 → '25년 999대), 음주운전자 1,844명, 방조범 37명 검거 △ 보험사기 총 2,612건 수사, 1,122명 검거(구속 20명)
- ▶ (대응체계 구축) △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대비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공동 협의체 구성 △ 보험사기 관련 금감원·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공동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 (주요 범죄 강력 대응) 살인·안전사고 등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본청에서 수사 초기부터 종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 지도·관리

- △ 서산 강도살인·시체유기 △ 화천 군무원 살인·시체유기 △ 캄보디아 내 대학생 사망 사건 △ 미아역·시흥 흥기 난동 살인 △ 오산 웅벽 붕괴사고 △ 서대문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등 주요 사건 수사 지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업무 협업도)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중이나, 타 부서에 비해 협업 기관·규모·사례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확인
- (목표치) '형사기동대 첩보수집 건수',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현장 지원 건수' 등 일부 목표치가 다소 낮게 산정되어 있는 등 개선 필요
- (정책 홍보) 주요 강력 사건 해결에 대한 경찰의 실질적, 종합적 기여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홍보 다각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업 강화) △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피싱범죄 대응 △ 출소자 등 정보 공유를 통한 범죄예방 등 협업 활성화 추진
- (목표치 수정) 형사기동대 첩보 수집 건수 증가에 맞춰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중대재해수사팀 확대·개편에 따라 지표 수정 등 개선
- (홍보 다각화) 집중단속 등의 성과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기획보도 등 홍보 다각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형사기동대 활동 성과 분석·평가	11월	○ '25년 치안종합성과평가 '형사기동대 활동 성과' 평가 / 11월 형사기동대 성과 취합·분석	정상 추진
○ 강·절도 및 악성폭력, 주요 교통범죄 평가·포상	12월	○ 평가·포상 계획 수립·하달, 마일리지 특진 등	정상 추진
○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실시	12월	○ 연말연시 형사 활동 강화 계획 수립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5 / 10	▶ 4대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목표 설정이 적절 ▶ 성과지표가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높고, 적정하게 설정 ▶ 국민 안전 관련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3 / 7	▶ 형사기동대 집중수사 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 및 공조 강화,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예년보다 우수한 실적 달성 ▶ 시기별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2.9 / 3	▶ 일부 항목이 계획보다 지연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4 / 15	▶ 협업을 통한 성과, 정량적 변화 제시 필요 ▶ 부서 나름의 협업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평가 대상인 타부서들에 비해 협업의 규모, 횟수 등 상대적으로 부족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1 / 20	▶ 합리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 목표치 설정이 적정하고 성과 달성 여부는 문제 없음 ▶ 첩보수집건수 목표치 산정 의문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4.3 / 25	▶ 높은 검거율 달성과 압도적인 정량적 성과를 통해 국민의 치안 불안 해소에 직접 기여 ▶ 중대재해 현장 실효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돋보이며 우수 ▶ 정책수혜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 구체적 명시 필요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9 / 15	▶ 고위급과 현장실무진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등이 명확 ▶ 대내외 기관 선정 및 업무 협의 적정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5 / 5	▶ 대상 사건, 피해자 및 주요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 ▶ 정책 홍보 노력 우수 ▶ 사건 해결에 대한 경찰의 실질적, 종합적 기여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②	○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협업도	○ 해외 수사기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과의 협업을 통한 피싱범죄 대응(연중)
		○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개정(1월), 범죄예방 부서와 정보 공유
	○ 목표치의 적극성	○ 형사기동대 첩보수집 건수 목표치 현실화(2월)
		○ 중대재해수사팀 확대 개편 이후 실적 분석, '현장 지원 건수'를 대체 지표 신설(2월)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 중앙일보 기획보도 '베테랑 경찰의 인생 사건' 연재 참여 모집 공고(1월), 순차 보도 예정 ○ 강철도·생활주변폭력 등 집중단속 계획 및 결과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 사건 언론 대응(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과지표 4개 모두 달성

- (마약범죄) '25년 마약류 범죄 사범 13,353명(공급사범 5,177명) 검거

⇒ 목표치 14,240점 대비 1.0% 초과(공급사범 * 1.2 + 일반사범) 달성

-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대금 차단에 수사력 집중, 하반기 집중단속 집중 추진 중('25. 8월~'26. 1월)
- 전국 형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인력 2.5배(378→942명) 임시 확대,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 신설(41명 증원)
-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개최, 한국 경찰청 주도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등 국내외 공조체제 강화

- (조직폭력 범죄) '25년 조직폭력 범죄 사범 2,058명 검거

⇒ 목표치 2,009명 대비 2.4% 초과, 목표치 달성

- 범죄조직의 민생침해 범죄 개입 차단을 위해 시도청 형사기동대 중심으로 신종 조직폭력 범죄 중심 특별단속 실시
- 조폭 콘텐츠 유튜버 집중 모니터링, 조직원 경조사 등 모임시 우발상황에 선제적 대응 위한 첩보수집 등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

- (외국인 범죄) '25년 국제범죄 사범 1,995명 검거

⇒ 목표치 1,978명 대비 0.9% 초과, 목표치 달성

- 외국인 범죄 세력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 주요 강폭력범죄 △ 경제범죄 △ 마약범죄 등 국제범죄 집중수사
- 인터폴 공조 국내 도피 적색수배 외국인 검거, 법무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 등 종합대응

- (피싱 범죄) '25년 피싱범죄 29,607건 발생

⇒ 목표치 31,928건 대비 7.3% 감소, 발생건수 감소 목표치 달성

- △국내외 범죄조직 검거 △피싱 범행수단 차단 △대국민 예방·홍보
△피해구제·회복 유관기관 협업, 제도개선·기술개발 등 전방위 대응
- 범정부 TF 등 금융·통신사와 협업체계 기반, 정보공유·차단기술
고도화 등 「검거-차단-예방-구제」 대응체계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으나, 법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정책개발을 통해
환류하여 정책 효과성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내 위장수사 제도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와 협업 확대,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피싱범죄 대응 유공자 포상	11월	○ '은행연합회', 'KB 국민', '신한금융그룹' 등과 협업, 피싱범죄 대응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시행	완료
○ 마약·조직·국제범죄 등 주요 단속 결과 성과·동향 분석 및 포상	12월	○ 하반기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26. 1월까지 시행함에 따라 단속종료 후 추진 ※ 하반기 집중단속 계획서 첨부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333	▶ 가장 심각한 범죄들의 근절을 위한 적절한 정책과제 설정, 국정과제와 관련성 인정되고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게 설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583	▶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노력이 높게 나타나고,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노력이 인정됨 /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한 가중치 부여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정책과제 추진 일정 기한 내에 모두 완료, 최근 범죄 동향에 맞춰 마약·조폭·외국인·피싱범죄 모두 최근 범죄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집중단속을 전개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917	▶ 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우수하며, 특히 마약·피싱 범죄에 대한 노력도가 우수 / 위장수사 법개정까지 연결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083	▶ 성과목표 적극성 '상'에 해당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며 모두 초과달성 / 지표의 등락이 반복하는 경향에 대한 보완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417	▶ 다양한 노력을 통한 정책 효과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기대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보임 / 피싱범죄 통신사 협업과 가상자산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 구축은 우수 하나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 효과는 보완 필요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667	▶ 전국 현장수사관과 국무조정실, 국제기관 등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노력도가 우수 / 정책개발과 환류 노력 보완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375	▶ 정책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가 돋보임 /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SNS 등 맞춤형 홍보 보완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위장수사 제도 도입 추진	○ 위장수사 제도 도입 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 계류 중으로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상임위 소속 의원실 방문 등 추진(연중)
2	○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홍보 시행	○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 이용 마약류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집중단속을 통한 민생침해 사이버범죄 척결]

- (사이버성폭력)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집중, 총 3,282건^{전년대비28.5%↑} 3,425명^{전년대비27.7%↑} 검거,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 지원 연계 72,644건 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해 역량 집중, 총 1,380건·1,375명 검거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이버도박) 해외 기반 도박 카르텔 발본색원(운영자·개발자·홍보책)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은 유관기관 협업 통해 적극 치유, 총 3,344건 4,870명 검거 하는 등 사이버도박 운영자·행위자 적극 검거
- (사이버금융범죄) 단순 가담자뿐만 아니라 해외 총책까지 추적, 총 505건·554명 검거하는 등 국민치안만족도 제고

[역량 강화]

- (삭제·차단 요청 전담팀 구축) 경찰청에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전담팀’을 설치('25.5월~)하여 24시간 대응체계 확립, 방미심위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총 19,661건 삭제·차단 요청
- (딥페이크 탐지 S/W 고도화) 탐지율 향상^{80%→90%} 및 파생기술 범죄까지 탐지하도록 개선, '24.3. ~ '25.12.까지 832건 탐지
- (공조 네트워크 확충) 텔레그램·왓츠앱·메타 등과 상시 협력 회의로 공조 범위 확대하고, 보안메신저, 가상자산거래소 등 공조 관계 개척
※ '25년 기준 공조 대상 기업 172개('22년 53개 → '23년 85개 → '24년 119개)

[조직 · 예산 확대]

- (2차가해범죄수사팀 신설)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일상적 2차가해 범죄 대상 △ 직접수사 △ 수사지휘 △ 제도개선 등을 담당할 2차가해범죄수사팀 신설(지휘계·수사팀으로 구성, 총경급 팀장으로 총 19명)
- (사업예산 증액)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일반} 148.8억 확보(전년 대비 1.8% 증액) 및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사업^{정보화} 122.3억 확보(전년 대비 7.0%증액) 성공, 주요 과제 추진 동력 확보
-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증원)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 소요정원 요청하여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5명 증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이나, △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활동 미흡 △ 목표치가 보수적 △ 정책 환류 불분명 등의 평이 있음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도전적 목표치 설정) 금년도 성과 달성도(전 목표 초과달성)고려*, '26년도 정책과제 성과지표 설정시에는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검거성과 18.2% 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49.8%초과, 국제공조 효율성 27% 초과
-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성폭력 재피해 방지 방안 마련,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강화, 청소년 도박 방지 등 사이버예방 활동 강화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해외 법집행기관 직접 공조 사건 논의	연중	○ 프랑스 경찰청(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건, 6월) ○ 카자흐스탄 현지 압수수색, 등(랜섬웨어, 7월) ○ 일본 경찰청(변호사사칭 테러협박 사건, 9월)	정상 추진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절차 세부 단계별 추진	연중	○ 관계부처 회의 적극 참석 및 의견개진(6, 9월)	정상 추진
○ 사이버국제공조 시스템 고도화	연중	○ 쉐 수사부서로 지원 확대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및 통계 정비(4. 2.) ○ 데이터 백업(VTL, PTL)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상 추진
○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회의 개최	연중	○ 1분기(3. 31.) / 2분기(6. 24.) / 3분기(9. 26.) / 4분기(12월 예정) 개최 완료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792	▶ (평정근거)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성폭력·스미싱 검거활동 강화는 민생 보호의 핵심요소이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국제공조 강화도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 ▶ (제언) 검거성과, 보호조치, 국제공조 효율성 등 성과지표는 사이버공간 치안확보라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833	▶ (평정근거) 사이버성폭력·도박·금융범죄(스미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삭제·차단 요청 전담팀 신설 등 제도 개선 ▶ (제언) 민생 침해형 사이버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양적 성과가 뛰어나고, 새로운 기술(AI)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위장수사, 전담팀 구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2.833	▶ (평정근거) 모든 추진계획 정상 추진 ▶ (제언) 시행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 시행일이 명시된 온나라 시행문이 필요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4.375	▶ (평정근거) 국제협력관실·대변인실·생활안전 교통국 등과 tf 등 통해 유기적으로 협업, 해외 법집행 기관 등과도 협력강화 ▶ (제언) 국제공조네트워크 확충 등 성과 우수합니다.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75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 사이버범죄 사범 검거성과(40%)</td><td>6,324(명)</td><td><1~10월> 7,477명</td></tr> <tr> <td>▶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30%)</td><td>33,811(건)</td><td><1~10월> 50,636건</td></tr> <tr> <td>▶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30%)</td><td>172.55(점)</td><td><1~10월> 177.27점</td></tr> </tbody> </table> ▶ (제언) 세 지표 모두에서 과거 3년 실적치부터 올해 달성치까지 모두 증가추세인만큼 목표치 상향 설정 필요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사이버범죄 사범 검거성과(40%)	6,324(명)	<1~10월> 7,477명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30%)	33,811(건)	<1~10월> 50,636건	▶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30%)	172.55(점)	<1~10월> 177.27점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사이버범죄 사범 검거성과(40%)	6,324(명)	<1~10월> 7,477명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30%)	33,811(건)	<1~10월> 50,636건												
▶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30%)	172.55(점)	<1~10월> 177.27점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23.75	▶ (평정근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증원·사이버수사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사이버수사관 역량 강화 기대 ▶ (제언) 수사대 증원 등은 우수, 사이버범죄 증가 및 고도화를 고려할 때 예방 정책 효과를 강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평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4.125	▶ (평정근거) 현장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간담회 뿐 아니라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등 통해 대외 의견 까지 청취 ▶ (제언) 성폭력처벌법 등 법제전문가 개최 등 대내외 의견 수렴을 활발하게 한 점을 고려함. 다만, 환류 부분에서 정량/정성적 성과가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708	▶ (평정근거) 과기부·방통위 등과 협업해 범죄예방(스미싱) 보도 자료 배포, 사이버성폭력·도박 집중단속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 (제언) 예방도 중요한 영역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사이버피해 예방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경찰청은 검거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	○ 정책과제 성과지표 목표치가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됨	○ '26년 정책과제 설정 시, 금년도 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도전적 목표치 설정 예정 ('26.2월)
4	○ 사이버범죄 증가 및 고도화를 고려할 때 예방 정책 효과를 강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평가	○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재피해 방지 방안 마련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추진하고,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청소년 도박 방지 대책 추진('26. 1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70건을 전수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추진

▶ 자체·협업·입법과제 등 총 11개 정책과제 수행,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
 ▶ 스토킹 접근금지 대상자 2,984명 전수점검, 가해자 격리 등 추가 조치
 ▶ 고위험 접근금지 대상자의 거주지 등에 기동순찰대 집중배치, 재범방지
 ▶ 엄정대응 지시 이후 △전자장치 부착 324.3%↑ △유치 93.4%↑ 실적 급증
 ▶ 피해자 대상 △스마트워치 25.5%↑ △신변경호 118.4%↑ △CCTV 46.5%↑

- (법령 제·개정) 교제폭력 입법 등 법안 관련 의원실 방문·설명 및 토론회 참석 등 입법활동 실시, 법안 65건* 발의·계류 중

*('25. 12. 31. 기준) △교제폭력 관련 법안 15건 △스토킹처벌법 25건 △가정폭력 처벌법 14건 △아동학대처벌법 7건 △스토킹방지법 2건 △가정폭력방지법 2건

- 「범죄수사규칙」의 △미성년 피해자 통지규정 △스토킹·가정폭력 통합 판단조사표 △긴급응급·임시조치 고지서 등 개정

- (시스템 개발·개선) 현재 6개 시스템에 분산 관리 중인 사회적 약자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 개발(~'26년)

-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위치정보를 경찰에 실시간 공유되도록 112시스템 연계,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 출동으로 피해자 안전확보(~'26년)

- (암수범죄 발굴)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 [↑]1,403개소·[↓]1,374개소 방문·점검, 범죄피해 26건 발견하여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실시

- △전국 대학생 대상 캠퍼스 안심소식지 △스토킹·교제폭력 교육 영상물 제작 △우유팩 공익광고 등 지속적인 신고 독려 홍보활동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중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율」 미달성(98.3% 달성)
 - － 폭력 등 여타 Code로 접수된 112신고를 재검토하여 관계성 범죄로 관리하기 위해 스토킹 등 관련 Code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때문에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2.8% 급증하여 보호조치율 상승에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제폭력은 신고건수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 － 가칭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통해 △교제폭력 범죄의 정의 △사건 처리 절차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규정 마련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ISP 추진	1월	추진 완료(7월)	정상 추진
○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개선 연구용역 추진	3월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개선”으로 주제를 확대하여 추진(5월 계약 → 10월 완료)	정상 추진
○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시행	3월	전국 확대 운영 계획 수립·하달(3월)	정상 추진
○ 재신고율 통계 관련 APO시스템·KICS 연계 기능 개발	3월	재신고 통계 기능 개발(2월)	정상 추진
○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 개시	4월	사업 계약, 착수(5월)	정상 추진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서식 개선	4월	개선 서식 운용계획 하달(4월)	정상 추진
○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 조사표 정식 시행	4월	전국 정식 시행 중(4월)	정상 추진
○ 상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실태 지도점검	5월	전국 시행 완료(3. 31.-5.2.)	정상 추진
○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 활동	5월	전국 시행 완료(5-6월)	정상 추진
○ 피해자보호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 위탁교육 실시	5월	교육 완료(3월 계약 / 5-7월 교육 진행)	정상 추진
○ 관계성범죄 모니터링 장비 구매·배포	7월	계약, 배포 완료(9월)	정상 추진
○ 하계기간 불법촬영 등 성범죄	8월	전국 시행 완료(7-8월)	정상

집중 예방 기간			추진
○ 회복적 경찰활동 진행자 양성교육	8월	교육 완료(6월)	정상 추진
○ 하반기 성폭력 예방 담당 교육 실시	9월	하반기 인사이동(10월) 이후 11월 추진	정상 추진
○ 사회적약자 보호 역량 강화과정 국외 위탁교육 실시	9월	교육 완료(9월, 4주간)	정상 추진
○ 개선 플케어 앱 운영 개시	9월	사전테스트 진행 후 배포(9월)	정상 추진
○ 하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실태 지도점검	10월	전국 시행 완료(10.22.-11.21.)	정상 추진
○ KICS 전자문서화 시행 후 보호 조치 자동산출 기능 배포	10월	법원 서식 연계 관련 세부사항 협의 중 ※ 법원 측 보호조치 연계 등 기능 개발 지연 으로 인해 내년 중 추진 예정	지연 추진
○ 범죄피해평가제도 전문가 양성교육	10월	교육 완료(2월)	정상 추진
○ 하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 활동	11월	전국 시행 완료(11-12월)	정상 추진
○ 종합플랫폼 1단계(APO·피해자 CARE포털 등 6개 시스템 통합) 완료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로 인한 서버 할당 지연, '26년 3월 통합시스템 오픈 예정	지연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417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명확하며 성과지표도 적정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625	법안 발의, 규칙 개정 등 과제 수행 노력도가 돋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2.833	일부 이행실적 근거자료 보완 필요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667	국회 및 대내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인정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117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율 외 성과목표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583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석·고도화 필요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4.25	대내외 기관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통한 환류가 확인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833	피해자 보호 관련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5	○관계성 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 교제폭력 입법 △ 스톱킹·가정폭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면책규정 입법)	○현재 계류 중인 61건의 발의안에 대해 입법 필요성 설명 등 입법활동 추진('26년 연중)
5	○ 사회적약자 관련 시스템 개발·도입	○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오픈('26.3월) ○ 스톱킹 전자장치 통합 연계 시스템 배포('26.1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제적 대응) 신종 소년범죄 이슈 발생 시 신속히 교육자료 제작, 학생·학부모 대상 전파 및 SPO의 예방교육 실시로 경각심 제고

- ▶ (교육자료 제작) △ 학부모용 △ 학교·가정밖 청소년용 △ 다문화 가정 학생·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SPO 예방교육 시 활용
- ▶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최근 증가 유형 소년범죄 추이를 반영한 범죄예방교육 실시(총 23,771회 359만명 대상 실시, 전년 대비 예방교육횟수 22.2% ↑)
- ▶ (카드뉴스 제작) △ 인스타 룰렛사기(4월) △ 청소년 도박(5월) △ 사이버폭력(6월) △ 공중 협박죄(8월) 등 카드뉴스 제작, 가정통신문·알림e앱 등을 통해 배포

- △ 前日 소년사건 전수 점검 △ 재범·재피해 우려 청소년 면담·관리 △ 맞춤형 선도조치 등으로 재범률 4.0%p 감소(24.6%→20.6%)

- (역량 강화) △ SPO 대상 전문기관 위탁 교육과정 운영 △ 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경찰청 자체·교육부 합동 워크숍 개최 △ 대상·방법·단계별 면담 방법을 수록한 ‘SPO 면담 가이드북’ 제작·배포

- ▶ (전문기관 위탁교육) △ 강의역량 향상과정(3~4월, 80명) △ SPO 전문화 과정(7~8월, 80명) △ SPO팀장 역량 향상과정(8월, 40명) △ 예치원 협업, 도박예방전문강사 양성교육(6월~7월, 100명)
- ▶ (워크숍) △ 전국 SPO 워크숍(2월) △ 신임 SPO 워크숍(5월) △ 경찰청-교육부 합동 워크숍(7월)

- (현장 지원) 저연령 소년범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및 현장 활동 활성화를 위한 SPO 활동지원비 증액(2.7억원 → 5.2억원)

- ▶ (법률 개정) 촉법소년 선별송치 도입 및 선도제도 근거 마련 추진 → 의원실 방문, 「소년법」 개정 필요성 등 설명 → 서영교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9.12.)

- △ 차세대 실종정보시스템 △ 실종정보문자 시스템 구축 △ 안전드림 앱 고도화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으로 실종아동 등 48시간 이내 해제율 1.2%p 증가(94.9%^{'24년} → 96.1%^{'25년}) 등 효과 거양

- ▶ (차세대 시스템) AI기술 도입, 실종자 자동추적 시스템 개발 예산 확보(4.6억 / ~'29년)
- ▶ (실종정보문자) △ 모바일 오피스 앱 연계 △ 송출지역 세분화(시·군·구 → 읍·면·동) 등
- ▶ (안전드림앱) △ 지문 특징점 추출 개선 △ 오류·장애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 등

- (협업 강화) 유관부처·단체·민간기업 협업, 사이버폭력·공중협박·도박 등 신종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경각심 고취

- ▶ (부처 협업) △교육부 협업 신종유형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홍보 △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업, SPO 대상 도박예방 강사 양성교육 및 실무협의체 운영
- ▶ (공모전 개최) 푸른나무재단과 협업,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공모전(그림·에세이) 개최 및 출품작을 모아 우수사례집 'SPO 활동이야기' 발간(12월)
- ▶ (언론홍보) 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청소년 도박을 뿌리뽑자' 연중 기획보도(6회)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경찰의 활동사항 홍보
- ▶ (RCS 공익 캠페인) KT 협업, 학생·학부모 15만명 대상 △공중협박죄 △사이버도박 △PM 무면허 운전, 픽시자전거 등 교통범죄 예방 공익문자 3회 전송(10월~12월)

- － 국민 참여가 필수적인 △실종경보문자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의 효과적 홍보·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 홍보콘텐츠 제작

- ▶ (단편영화 제작) 경찰청-BGF리테일 공동으로 실종정책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및 당선작(소설, 4건)을 각색하여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 제작·상영(11월)
- ▶ (공익광고) 현대해상 협업 국민 참여 독려를 위한 실종경보문자 홍보 공익광고 제작·송출(10월)
- ▶ (유튜브 홍보) 두호코퍼레이션 협업, 실종예방 홍보 영상 '48시간안에 실종자 찾기' 제작·송출(조회수 46만회)을 통한 정책 인지도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외부의 유관부처·민간기업과의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부·현장 의견 수렴은 다소 부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임 SPO 화상회의(11.14.)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위원회·정책 세미나(11.27.) △마약범죄TF 회의(11.27.)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 － 현장 의견을 토대로 △‘청소년 참여정책 개선 가이드라인^①’ 배포(11.13.) △SPO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기법 연수’ 등 전문역량 강화^② 추진

① (가이드라인) 청소년 참여 정책에 대한 현장 부담 및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한 **개편 필요성 제기**
→ 명예경찰소년단·정책자문단 통합 △명칭 변경(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타 기관 청소년 참여 정책(청소년참여위원회, 어린이 국회 등)과 연계 강화 등

② (마약류 예방교육)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협업, 시·도별 교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연수 시 SPO 330여 명 참여('26.1~2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117 상담요원 역량 강화 교육	11월	○ 교육부·푸른나무재단 합동, 117 상담요원 연수 실시(6.4.~7.11.)	정상추진
○ 실종경보문자·안전드림앱 고도화 완료	12월	○ △ 실종경보문자 기능개선 사업 완료(12.22.) △ 모바일 안전드림앱 고도화 완료(12.22.)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0	▶ <근거·제언>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대표성 있는 정책과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와 과제가 잘 연계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계획 준수도	9.083	▶ <근거·제언> △ 촉법소년 선별송치 도입 법안 발의 △ 선제적 대응 강화 △ 현장 역량 제고 △ 인프라 확대 △ 실종자 발견 기술 고도화 등 정책과제 수행 전반 대한 노력 우수
2-2. 업무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333	▶ <근거·제언> 계획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여 차질없이 준수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7.75	▶ <근거·제언>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고, 모두 초과 달성* * ('25년 실적치/ 목표치) △ 소년범죄예방활동지수 132.6 /129.4) △ 범죄소년 재범률 20.6% /22.0%) △ 48시간 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율 96.1% /96.0%)
3-2.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517	▶ <근거> 사회적 이슈범죄 예방 및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였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효과 기대 ▶ <제언> 학교폭력 자체에 관련된 정책과제 설정 제언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노력도	13.25	▶ <근거> 대내외 기관과의 다양한 의견수렴 실적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제언 발굴, 협업방안 공유 인정 ▶ <제언> 주요 내용 대비 환류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작성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한 사항 포함 필요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4	▶ <근거·제언> 다양한 매체와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 활동이 돋보이며, 학부모·학생 대상 정책홍보 적절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 현장 의견 수렴·환류를 위한 워크숍·전문교육 개최 추진	○ △ 청소년경찰학교 성과보고회('26.1월) △ SPO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26.1~2월) △ 전국 SPO 워크숍('26.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관계성 범죄 전방위적 대응) 처벌불원 및 1회 폭행신고에도 구속·유치·잠정·임시조치 등 가용수단 적극 검토하여 가해자 격리 조치
 - ※ '25년 6~11월까지 전년 동기간 비교하여 △전자발찌 336.4%↑(55건→240건)
△관계성범죄 구속 33.8%↑(707명→946명) △잠정·임시조치 30.1%↑(8,603건→11,189건) △관계성범죄 검거 19.5%↑(46,270명→55,283명)
 - － 특히, △교제폭력 매뉴얼 신규 제작 △국회세미나 개최 통한 관련 입법 마련 촉구 △중간관리자(과장급) 중심의 집중 보호기간 운영 등 노력
- (아동·청소년 보호) 위장수사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딥페이크 집중단속과 신고독려 홍보활동을 통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근절 노력
 - ※ 단속기간 동안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검거인원 5,248명으로 전년 대비 11.8%↑
 - － 또한, 어린이집 CCTV 등 긴 영상 속 학대행위를 찾아내는 아동학대 분석 프로그램 신규 도입(6대) 등 아동학대 수사 지원
- (사건관리) 매월 △현장점검 △화상회의를 통해 미흡사례 점검·공유
 - － △반복신고 △불입건 종결 전수조사* 등 통해 현장 미흡사례 방지
 - * 6회이상 반복신고 22,111건, 불입건 15,356건 전수조사 및 1,379건 시정조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관계성범죄 △딥페이크 △출생미신고 아동 등 사회적 관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에 따른 가시적 성과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계성범죄 △딥페이크 △시설 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및 엄정 대응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우수 여청수사관 및 여청수사팀 선발	11월	○ 특별승진·승급 마일리지(우수 여청수사팀) 관련 30팀 선정 및 포상	정상추진
○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개정 추진	12월	○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개정 T/F팀 구성(5월) 및 작업 끝에 최종본 완성(책자 발간 중)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6	▶ 과제에 대한 지표가 적절히 설계된 것으로 평가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	▶ 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2.9	▶ 일부 미달성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4.2	▶ 민감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교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7	▶ 목표치를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도로 설정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6	▶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모두 우수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4.3	▶ 정책환류 노력 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6	▶ 적절히 홍보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7	○ △ 딥페이크 △ 온라인 그루밍 등 엄정대응	○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엄정대응(연중)
	○ 아동학대 분석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프로그램 추가배치(12대) 및 우수활용사례 발굴 (‘26. 10월)

(1) 평가결과 (1~2페이지)

□ 주요성과

- (예방적 점검·진단 강화) 수사분야 전반에 걸친 선제적 인권취약 요소 진단 및 책임수사 특별점검 추진
 - － 수사현장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 (수사 인권진단) 인권진단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총 187건 발굴 → 149건 개선 완료(79.7%), 우수사례 125건 공유
- ▶ (장기사건) '25.3월 1,835건 → 5월 1,367건(25.7% ↓)
- ▶ (장기 요구요청 사건) '24년 2,090 건 → '25.9월 1,016건(51.4% ↓)
- ▶ (사건통지절차 준수) 통지 등 미이행 82.0% 시정·보완조치
※ 사건종결 등으로 중간통지 불가능한 경우 제외 전건 조치)
- ▶ (수사분야 인권위 권고) '23년 23건 → '24년 17건(26.1% ↓) → '25년 6건(64.7% ↓)
- ▶ (수사인권 설문조사) 수사절차 준수 및 권리보장 관련 설문조사 추진, 긍정답변 90.03% 도출, 주관식 응답 결과를 각 경찰관서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개선필요 사항 상시 점검 추진, 하반기 현재 긍정 답변 0.47% 상승(90.5%)

- (수사권 남용 차단) 강압수사·뇌물수수·권한남용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조치 뿐 아니라
 - － 수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인 진단·분석 후 제도개선 도출 등 완결성 있는 감찰활동 전개

- ▶ (엄정조치) △ 화성동탄서 교제폭력 살인사건 △ 의정부서 뇌물수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주목된 주요 수사비위에 엄정 대응, 수사절차 위반 등 비위 대상자 273명에 대한 감찰조사 (전년 동기간 대비 13명 ↑)
- ▶ (제도·시스템 개선) △ 사건관리 소홀 △ 사건배당 시스템 미비 △ 부적절한 장구 사용 △ 관계성 범죄 대응 등 조사·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담당 기능 제도개선 요구 → 종합대책 수립·지침 마련 등 미비점 개선
- ▶ (부적격자 선별·진단) 징계·감찰 이력 등을 활용, 수사부서 부적격자 선별 및 심층진단을 통해 수사경과 해제 근거로 활용하도록 인사지침 등 반영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수사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도입과 함께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

사관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정비

- ▶ **(유치장 환경개선)** 밀폐형 화장실 등 유치장 환경개선('25년 5개소, 15억)을 추진하는 한편, 위험물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전자영상 신체검사기(30개소) 도입,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19개소)도 병행 추진
- ▶ **(영상녹화 전자화 송부 개선)** 기존 CD 제출 → KICS 서버와 연계하여 전자적 송부 및 통합 저장·관리, 영상녹화 파일 진본성 확인 기능 도입 등 수사자료 객관성 확보 및 영상녹화 활성화 기여
- ▶ **(AI 음성인식조사)** 피조사자와 수사관의 음성을 텍스트로 현출, 자연스러운 대화 환경 조성 및 조서작성 편의 증진
- ▶ **(원격화상조사)** 간단한 진술을 위한 수사기관 출석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 및 사용기기의 제약 없이 조사 가능한 원격화상조사 시스템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5년 자체평가 최종평가시 평가위원 평가 반영

- **(대내외 협업 성과 부족)** '25년 대내외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일부 성과는 거두었으나 일상업무와 구별되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음
 - － 현장점검 및 진단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외협력 분야 성과가 다소 부족
- **(지표 및 목표치 재검토)** 세부지표 활용률 및 목표치 설정 등에 대한 성과난이도가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적 업무협업 추진)** '26년 상반기부터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을 위한 유관기관·시민단체 간담회 등 적극 추진
 - － 추진과제 도출 및 유기적 협업을 통한 우수한 성과 창출 도모
- **(효과성 있는 지표 설정)**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표 및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준수 여부 확인되도록 간략히 기재)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국가수사본부 주요 정책 현장안착 관련 노력도 평가 위원회 개최	11월	○ 국가수사본부 주요 인권정책 등에 대한 시도청의 정책 추진 실효성 여부 등 평가 ※ 11. 13 위원회 개최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페이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6	▶ 인권보호 중심의 정책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법제 및 수사절차와의 연계성은 긴밀하나 영성녹화·진술녹음 활용 증가율은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이 부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5.7	▶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관례적인 정책 추진이 많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계획대로 정상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2.6	▶ 대내외 협업은 인정되나 대내 협업의 경우 일상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점이 아쉬움. 단, 적극행정 노력은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7.7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는 매우 우수하나 성과난이도 다소 부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1.8	▶ 다양한 방식의 수사지표 개선이 인상적으로 향후 긍정적 효과 기대, 단 기대효과가 다소 불분명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2.6	▶ 대외 환류노력 우수, 대내적으로 현장 및 유관기능과의 협업 확산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3.7	▶ 보다 적극적인 대외홍보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8	○ 정책과제 및 지표설계가 국정과제 등 정책 추진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적극적 대내외 홍보 추진	○ 국정과제 등 연계,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선('26.3월) ○ 정책 및 성과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대내외 홍보 활성화 추진('26.6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시적 순찰 강화)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통해 △취약요소 진단 △검거·단속 △주요 상황발생시 능동적 대응 등 안정적 치안 유지
 - ※ '25년 기동순찰대 연 72,130개소·464,947명(일평균 217개소·1,396명) 배치, △방법 진단 37,660건 △수배자 검거 14,116건 △기초질서위반 단속 95,460건 등
- － 관서별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월 1회)를 통해 맞춤형 치안활동 및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실시, 전 기능 총력 대응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25.12.22.~'26.1.4.)]

- ✓ 총 343,173명(일 평균 24,512)을 민생치안 현장 투입, (일 18,501명), 기동순찰대 (1,020명) 외 '경찰관 기동대' 적극 활용(1,003명), 범죄예방·질서유지활동 전개
- ✓ 해돋이·해넘이 등 지역별 인파 밀집 예상 축제·행사장 대상 가용 경력 총 동원, 범죄·사고 예방 활동 및 상황실 중심으로 중요 상황발생시 총력대응

- (주요 범죄 예방) 서민 생활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현장경찰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강화 대책」 수립('25.11.12.)
 - －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접수시 현장 대응 체계화·교육 강화·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현재까지 총 193억·397건 예방 및 47명 검거
 - ※ 체크리스트 제작, 112·지역경찰·기동순찰대 전수교육, 우수사례 포상, 금융기관 MOU 등
- (생활 주변 불안요인 해소)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죄·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생활 속 위험요소·치안문제 선제적 해결
 - － 정신질환자·주취자 관리를 위한 시설·제도 개선 등 인프라 확충

- ✓ 정신질환자 : '24년 대비 △경찰대응팀 9→10개소 △합동대응팀 9→10개소
△정신응급 병상 174→186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1→13개소 등 확충

- ✓ 주취자 : '24년 대비 △주취자 센터 21→24개소 △주취자 보호 관련 조례 3개 시도청 → 8개 시도청* △「주취자 범죄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25.11)

* 서울('24.9)·부산('23.7)·대구('25.10)·울산('24.4)·경기('25.5)·전북('25.7)·전남('25.4) 제정 완

- 교육부 등과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하반기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등 생활 주변 불법행위 관리

* 상반기 도심권(5월), 하반기 농어촌·외국인 지역(11월) 대상 총 875건(1,061명) 단속

- 총기 등 무기류 안전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점검결과 분석을 통한 ‘선수용 실탄 관리지침’ 수립 및 영업용 사격장 점검

✓ 위험물 점검: 위험물을 취급하는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교류점검 실시(11.3.~12.26.)
→ 취급업소 1,619개소 점검, 총 71건 적발(형사입건1, 행정처분2, 시정명령55, 보수보강14)
✓ 영업용 사격장 점검: 영업용사격장(41개소)의 안전수칙 준수 점검 및 시설 개선(12.24.~1.14.)

- (범죄취약계층 보호) 지방정부 등과 협업, 조례정비·예산확보 등으로 여성 소상공인·1인가구 등 비상벨·CCTV 등 방법 인프라 확대 추진

✓ 여성 소상공인 : 경찰서와 지방정부 협업, 추진 중인 범죄예방 물품 시설 지원 사업 총 27건(약 2억원, 지원 대상 1,694명) / 1인 점포(1,319개) 대상 112신고 앱 홍보, 476명 가입
✓ 1인 가구 : 여성 1인가구 수 및 취약 환경 등 종합, △1인가구 밀집 강화구역 재정비 (179→178개소) △CPTED 106건 추진 △지역경찰·기동순찰대 순찰(6,368회) 등 예방활동 집중
✓ 제도적 기반 : 지방정부와 협조, 조례 17건(소상공인 8, CPTED 9) 개정 추진 중

- 경찰청-경비업체(SK셀더스) MOU 체결(12.22.), 민간경비 할인 지원사업 병행

※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대상 실내 CCTV, SOS 비상버튼, 긴급출동서비스 할인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범죄예방업무의 특성상 △순찰 등 예방활동 성과 분석·평가체계 마련의 어려움 △순찰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차이* 등 보완 요

* 국민들은 순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반면, 현장경찰들은 112신고 위주의 대응에 집중,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가볍게 보는 경향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사회 경찰활동·문제해결적 순찰 관련 현장의 참여·수용도 확대를 위해 효과분석·내부 소통·제도 개선 등 추진, 현장 공감 유도
- 현장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범죄예방정책·활동 등에 대한 법적 담보력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 제정 등 인프라 확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범죄예방경진대회	11월	○ 11. 20. 경찰청 참수리홀 개최, 총 10개 우수 관서 선발, 특별승급·포상 등 특전 부여	정상추진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11월	○ 10. 28. 제10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총 31개 지방정부, 단체 등 선정·포상	정상추진
○ 하반기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11월	○ 11.24. ~ 12. 12.(3주간), '25년 하반기 사행성 불법 게임장 대상 총 875건(1,061명) 단속	정상추진
○ 연말연시 특별방범 대책	12월	○ 12. 22. ~ 1. 4., 연말연시 특별방범 대책 시행	정상추진
○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2월	○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경비업 외 업무종사 예외적 허용 등)	정상추진
○ '25년 하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최고 자율방범대원 선발	12월	○ 베스트 자율방범대 단체 10개, 대원 10명 선발	정상추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9	○ 범죄예방순찰 활성화	○ 지역경찰 등 능동적·자발적 순찰 활성화를 위한 포상·특진 체계 개선('26.3월)
	○ 범죄예방 관련 법적 인프라 구축	○ 현재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연내 제정 완료 추진(연내)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안전) 시기·이슈별 착안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의 방향성 제시,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응에 기여
 - － 「시도청 자문위」(총 18개, 177명)을 지속 운영·활용함으로써 재해·재난 안전 전문성 보완(총 63회 자문)
- (범죄철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등 철폐수집에 집중, 국수본 특별단속기간에 맞추어 「특정범죄 집중 단속기간」 운영
 - － 철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죄철폐 표준서식’을 수시 정비 하는 등 범죄 특성에 따라 수사 기능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이 반영되도록 보완(본청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철폐 분석·코칭)
- (준법활동) 정치 관여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부당한 민원·청탁 전달, 정보 누설 등 위법 정보활동 미발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통령령*에 따라 목적 달성 이후 수집·작성한 정보를 폐기, 업무 관련 증빙이 불가하거나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 이에, 그간 치안정보분석과는 정책자료 업무성과기술서 제출 시 양해를 구하고 증빙자료 공개를 최소화하였음
- 외부 평가위원들은 대면 평가과정에서 증빙자료 미첨부 사유와 업무내용에 대한 구두 설명을 통해 업무 이해도가 제고됐으나
 - － 일부 내부 평가위원들은 ‘증빙자료 부족’을 들어 ‘업무성과기술서 내용 신빙성이 떨어지고, 평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평가 절하

- 보안상 이유로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정보업무 특성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미흡하다는 평도 산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통령령에 따라 폐기되는 정보는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지만
 - － △워크숍·교육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우수사례 등 업무의 경우 ‘공문’, ‘폴넷 게시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노력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착안사항을 카드뉴스로 정기 안내하고, 우수사례는 경찰청 SNS·언론 등을 통해 노출해 대내·외 적극 홍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우수 정보 수집 정보관 선발	매월	○ 1~12월 선발 완료	정상추진
○ 재난·안전사고 예방정보 착안사항 하달	매월	○ 1~12월 지역안전 착안사항 전파 완료	정상추진
○ 정책·범죄정보 월간 착안사항	매월	○ 1~12월 착안사항 전파 완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4	▶ 대면 컨설팅 과정에서 지표를 유연하게 수정한 점은 우수 ▶ 전체적으로 지표설계가 적절하나,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3	▶ 치안환경변화에도 정책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워크숍 등은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2.8	▶ 우수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5	▶ 자문위원 운영, 지자체 협업 등 우수하나, 마찬가지로 관련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9	▶ △재난·안전사고 우수사례 질적 향상 △준법제고 노력도의 경우 목표치 수준이 적극적이고 달성도도 유의미함(우수)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	▶ 선제적인 위험발굴을 통한 예방·대응 효과는 인정하나, 평가를 위해 보안상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공개가 필요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8	▶ 전국 시·도청 정보관리자와 실무자와의 소통 노력 준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5	▶ 정보업무 특성상 홍보활동에 제한이 있음을 이해함 ▶ 지역안전 등 일부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0	○ 공개가능한 업무사안 증빙자료 첨부	○ 워크숍·화상회의·교육 등 계획 공문화(수시) ○ 폴넷 게시물(우수사례) 증빙자료 제출(수시)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홍보 강화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배포유지 및 우수사례 SNS 홍보(매 분기)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치안상황 보고·지휘체계 확립) 구두보고 우선의 상황 보고체계와 지휘관 및 상급부서에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조기경보” 체계 구축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
 - ※ 보고 소요시간(본청 1보 접수기준) : △1시간40분^{3.13} → 1시간12분^{5.15} → 51분^{7.25} → 47분^{9.28}
- (소방공동대응 강화) 경찰-소방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한 본청 협력관 4명 파견('23. 5월)에 이어 兩 기관 시도청 및 시도소방본부에 각 72명을 추가 파견, 공동대응 등 협력 강화
 - ※ 경찰-소방 간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초동조치 및 현장 대응력 향상 / <공동대응 건수('25.3.24. ~ 10.27.)> 경찰→소방 222,579건, 소방→경찰 273,538건
- (현장 모니터링 정교화) 112상황실에서 순찰차 캠을 통해 사건사고 및 재난 등 중요신고 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266만건 / 25.1.1. ~ 현재)
- (외국인 신고대응 강화) 112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및 확대 운영(24시간), 외부기관(다누리, 한국관광공사, 외국어종합안내센터, BBB 등) 통역센터를 활용, 체류 외국인의 신고 접근성 향상과 즉각적인 통역 서비스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제고 등 외국인 안전 확보
 - ※ △경찰청 통역센터(英 8,952건 / 中 8,355건) △다누리 2,505건 △한국관광공사 825건 △BBB 570건
-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 대응강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민·형사상 제재 강화, 예방 및 홍보를 통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로, 폭발물 등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근절 추진
 - ※ △공중협박 93건(90명) 검거(3.18~9.30) △거짓신고 3,191건(형사입건 694, 즉심 2,369, 과태료 128) 검거(1.1~8.31) △손해배상 청구 6명(서울 4, 부산 1, 경기남부 1)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112신고앱 서비스 시행, 바른 112신고 공모전, '112의 날' 기념행사, 우수사례집(7집) 발간 등을 통해 '112'를 경찰 대표 브랜드로 확립

- (복합위치 측위 도입) 기존 측위(기지국·GPS·Wi-Fi)보다 정확도(오차 20미터↓)와 성공률(90% ↑)이 높은 측위를 도입, 총 38,164건 구조
- (정밀탐색기 확대보급) Wi-Fi신호를 이용해 신고자 긴급구조 시 정밀한 위치(오차 3m ↓) 탐색 가능, 서울청 소 경찰서에서 실증하여 감금 의심, 실종 사건 등 다수 인명 구조 실적(2,117건)
- (신속상황전파앱) 긴급·중요 상황 발생 시 先 구두보고 후 그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현장에서 본청까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고(총 5,219건)
- (112사건전파앱) 현장경찰관의 112신고 수신을 문자에서 「112 사건 전파앱」으로 대체, 사건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문자 전송 예산도 절감(총 4,600만건, 11억 8,900백만원 절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5년도 치안상황과는 정책과제(정성, 5개 세부항목) 및 성과지표(정량, 2개)를 설계하여 정상 추진

정책과제 (정성, 5개)	▶112상황실의 조기경보 역할 수행을 위해 신속 상황보고체계 구축 ▶ 상황실 중심으로 내·외부 공조체계 강화로 완벽한 상황관리 ▶ 상시 교육·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상황관리 능력 강화 ▶ 112·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112요원 선발을 통해 전문성 제고 ▶ 축적된 빅데이터로 실제적 피드백이 가능한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설계
성과지표 (정량, 2개)	▶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범죄 및 재해·재난 등 112신고의 접수·지령·현장 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조치의 적정성이 반영된 성과지표를 설정, 목표 달성

구분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목표치	달성도	목표치	달성도
지표	343초	334초(102.69%)	91.9점	92.2점(100.3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상황관리 역량을 내실화 하기 위해 '26년도

자체평가 정책 수립 시 정책과제·성과지표 등을 선정·관리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① 112의 날 기념식	11월	○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계획	정상추진
② 순찰차캠 영상저장시스템 구축 완료		○ 순찰차캠 영상저장시스템 구축 완료	
③ 경찰서 112상황실 상황판 구축		○ '25년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통합관제 상황판 교체 완료	
④ 치안상황과 소관 매뉴얼 개정 완료	12월	○ '26년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제작 완료	정상추진
⑤ '26년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 조달청, 장기계속계약(2차) 체결 완료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167	▶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이 확보되었고 지표가 적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8.809	▶ 시도청-소방본부간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관(72명) 추가 파견하여 양 기관 협업체계를 마련한 노력도가 인정됩니다. ▶ 추진계획대로 정상 이행 완료
2-2.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667	▶ 치안환경 변화에 맞춰 재해·재난 대응 및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는 등 10년만에 '사건종별'을 대폭 개편(59→61종), 현장 대응 체계 강화한 노력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917	▶ 112신고 후 현장도착하는데 골든타임(5분) 확보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나, 지역별 / 사고유형별 골든타임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보임
3-2.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458	▶ 정량적, 정성적 효과가 훌륭하며 기대효과 역시 잘 서술되었습니다.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667	▶ 112접근성 개선 및 신뢰도 회복에 관한 국민의 체감,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임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92	▶ 공모전, 112신고처리법 시행등 홍보노력 및 성과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1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평가 정책 수립 시 정책과제·성과지표 등을 선정·관리 필요	○ '26년도 자체평가 정책과제 수립 및 컨설팅을 통해 정책과제·성과지표 등 재설계 검토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25년 국정과제 확정,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 ▶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 국정과제 전담부서로 ‘자치경찰기획단’ 설치·운영('25. 9.), 원활한 과제 수행
 - 12명 규모의 기존 자치경찰과를 20명 규모의 기획단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원화 전면 시행 예정인 '28년 7월까지 운영할 예정
- 국가 치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자치경찰제도’ 담당부서로,
 - 법령·예산·조직·인력 등 다방면에 걸쳐 BH·국정기획위·행안부 등 법정부 부처,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고도의 협업 추진
 -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력 활성화 및 공감대 확보

△ 경찰청-시도자경위원장協 정책협의체(1회) △ 원탁회의(2회) △ 시·도자경위 현장간담회(11개 지역) △ 의원실 방문(3회) △ 권역별 간담회(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4개 권역) 900여명, 11.10.~20.) △ 현장자문단 간담회(12.15.) △ 시·도 자치사무 담당 토론회(12.18.~19.) 등
- 지역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R&D 추진, 정책 연계성 제고 및 지역확산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 △ 범예·여청·교통 외에도 조직·인사·감사 등 쏠 기능 협업을 통해 치안실정에 맞는 도입(안) 구체화 △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 ※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자치경찰사무(범예·여청·교통 등) 및 행정사무(경무·감사 등) 관련 세부사무별 수행인력 전수조사 및 이관 가능 범위 검토 등
 -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R&D 사업 추진('25~'27년 29억), 과학치안 역량 확보 및 지역 주도의 과학치안 선진화 기반 구축

[자치경찰제 내실화 및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제도운영 기반 구축 및 사무국 운영 내실화
 -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등 총 9개 법령(법률2, 대령6, 부령1) 대상 자경위·시도청 등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제공, 원활한 제도 운영 지원
 - － 자경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수 인력이 자경위로 유입토록 유도, 자경위 사무국의 전문성 제고 등 내실화 도모
 - ※ △경찰관 정원 확대 추진(행안부) △특별승급(3명) △특별승진(2명) 등
- 제도 도입 초기의 냉소와 낮은 인지도를 극복, 시행 5년 동안 △안정적 치안지표 △자치경찰사무 예산 증가 △국민 인식평가 개선 등 성과 거양

'20년 대비 '24년 체감안전도 78.1(0.4↑) 치안만족도 84.9(1.0↑), '25년 대비 '26년 예산 2,117억원(4.5%↑) 상승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정감사·예결위 등 각종 현안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게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12.9.)

제21조(자치경찰 정책협의체) ①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 총 6건의 안건(경찰청 2, 자경위 4) 상정, △현행 제도운영 경과, 국정과제 추진현황 공유 △경찰청·자경위 공동 협력방안 논의 등
 - ※ 정책협의체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지속 논의 예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컨설팅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 정책과제 성과지표 설정('26.3월)
 - － '26년 경찰청 자체평가 계획수립 시 정책과제의 대표성·적절성·연계성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평가위원 컨설팅 참여, 성과지표 수정·보완
- 관계기관 실무 TF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운영 방안 △추진 로드맵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

①범정부 협의체 구성 → ②시범운영 방안 마련 → ③시범운영 「특별법」 개정 → ④시범 운영 결과분석, 제도적 보완 및 재원 강구 → ⑤전국 실시 방안 마련 → ⑥「경찰법」 등 개정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개최	11월	○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소통·협의 창구인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 공식 개최(12.9.)	정상추진 (12월)
○ '26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의견회신	11월	○ 각 시·도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시 일정 수준의 균질성 확보를 위해 전 자경위 예산 요구안 검토 후 경찰청 의견 개선·회보	정상추진
○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홍보 (국정과제)	4/4분기	○ △ 권역별 간담회(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11.10.~20.) △ 현장자문단 간담회(12.15.) △ 시·도 자치사무 담당 토론회(12.18.~19.) 등	정상추진
○ 범정부협의체 구성 및 논의 참여 (국정과제)	4/4분기	○ 관계기관 실무TF 회의 참여(1~3차), '범정부 협의체' 등 관계기관 논의에 적극 참여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583	▶ 자치경찰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가 적절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5.833	▶ 정책과제 수행 실적이 '25년 하반기에 편중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모든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417	▶ 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단계에서 나아가 실질적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542	▶ 세부지표의 추세, 비중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개발 예정인 자치경찰사무 성과지표나 치안고객만족도 등 기대이터를 활용한 추가 또는 대체 성과지표 발굴 고려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0	▶ 자치경찰 예산 증액이나 지자체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등 정책효과 우수함. 향후 기대효과의 구체성은 부족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2.917	▶ 대내 의견 수렴이나 환류에 노력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5	▶ 다양한 정책홍보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활동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2	○ 자치경찰 정책과제 성과지표 수정·보완	○ '26년 경찰청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컨설팅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성과지표 설정('26.3월)
	○ 국정과제(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관련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	○ 관계기관 TF 논의를 거쳐 범정부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I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국정과제에 “치안 AI 혁신(74-6, 치안 AI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을 반영, 범정부·장기적 시각에서 정책과제가 수행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치안 AI 대전환 지원’ 지표 신설, 적극성 기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로 설정, 목표치 초과 달성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치안 AI 대전환 지원 (①AI 훈령 수립/ ②AI교육 수료 / ③AI프로젝트 반영)	수립	200명	30건	- ①AI 훈령 수립 완료 / ② AI 252명 수료 / ③정책반영 30건 프로젝트 달성
○ 과학치안 R&D 신규과제 발굴 노력 및 정책 반영도	281			- 과학치안 R&D 신규과제 발굴 건수 총 396건 접수, 목표 달성
○ 과학기술 활용 현장문제 해결 및 미래치안 외연확대 노력도	42			- 총 5회 발굴 예정으로, 현재 3회차(28건) 진행 완료
○ 관리자(총경급) 과학치안 전문교육 이수 및 역량 향상·업무 활용도	11.5			- 교육 전·후 과학치안 역량향상도 40%이상 향상으로 목표치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경찰 업무 특성상 현안 중심의 대응 구조로, 과학기술 활용 현장문제 해결 및 미래치안 외연 확대를 위한 ‘시도청 우수사례·과학치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 시도청이하 현장에서는 아직 AI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미흡하여 정책 효과를 시도청까지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홍보·교육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직원들의 AI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AI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미래치안 공감대 확보를 위한 시도청 우수사례 발굴	연5회	○ 총 5회 중 5회 진행 우수사례 53건 발굴 ※ 1회 7건·2회 10건 발굴·3회 11건·4회 12건·5회 13건 발굴	정상추진
○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 전문 기관 위탁교육 운영	연7회	○ 과학치안 역량강화 전문교육 운영(KAIST) ※ 총 7회(300명) 중 7회(320명) 진행 완료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955	▶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지표설계 / 치안 AI 혁신을 중심으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컨설팅 의견을 전면 수용 확정하였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55	▶ 현장체감 과학치안 R&D 사업발굴 등 노력 우수 / 치안 AI 대 혁신을 위한 노력 인정
2-1-2. 추진계획 준수도	3	▶ 모두 준수, 잘 이행됨
2-2. 업무 추진과정의 적극 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13.682	▶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545	▶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으며 100% 달성으로 우수 AI 기술 발전에 맞춰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	▶ AI·과학치안에 대해 대내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안전 연결 노력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909	▶ 자칫 어려울 수 있는 a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 반영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545	▶ 언론보도, 시민참여 컨퍼런스/간담회 등 적절하게 수행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3	○ 시도청 AI 역량향상을 위한 소통창구 강화	○ 현장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AI 전문가 강연 추진"(26. 2월) ○ 현장 소통을 위한, 미래국 주요정책 홍보 '별도 창구' 개설('26. 2월)
	○ 치안 AI 대혁신을 위한 '치안 AI 혁신 종합계획' 수립·시행	○ 경찰청 각 국·관 의견수렴 및 협의 등('26.1월) ○ 분기별 이행점검 ○ 반기별 주요 추진내용, 성과점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펀드 조성) 치안산업은 시장규모가 작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민간 펀드의 ‘치안산업 분야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 치안산업 실태조사 결과('23년 기준) : △14,189개 기업 △매출액 38조원 △종사자 66만명

- 기업들의 치안산업 분야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기업들의 기술개발·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펀드’를 조성 예산 확보(연간 100억원 규모)

- (국내외 판로확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보 및 기술 정보 공유 등 지원을 위해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19년~)

- 올해는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행사기간 중(10.22~25.) 역대 최대 금액인 633만 달러(91억 원) 수출계약 체결('24년, 530만 달러)

▶ △216개 기업 참여 △컨퍼런스 등 37개 동시행사 진행 △참관객 17,000여명 등 성과

- (국가통계 승인) 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법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 특수분류* 기반의 국가통계 승인('25.11월, 데이터처 고시)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지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치안산업 활동 부문을 재구성한 것으로 대분류(5), 중분류(15), 소분류(34), 세분류(55)로 구성

-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치안산업 진흥과 관련한 법률 제정 필요성 설명(국정과제에 포함)

▶ 신정훈·윤재옥 의원이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2건, '24.12월), 행안위 계류 중

- 국회법에 따라 행안위 주관으로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성과('25.12월), 올해 內 법률 제정 목표 추진

- (치안현장 맞춤형 R&D) 전담부서(과학기술개발진흥과)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관리한 결과, 현장도입 성과가 2개(~'24년 / 14억원)에서 '25년 8개(54억원)로 대폭 증가

구분	사업 내용	예산(억원)	수량(대)
'22~'24년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 시스템	3.2	1 (시스템)
	스마트폰 지문식별·신원확인 시스템	10.98	4,300
'25년~	접친지문 분리시스템	1.2	6
	AI 기반 아동학대 영상분석·요약 시스템	6	6
	현장 경찰관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가상훈련 프로그램(VR)	4.8	20
	경찰, 내충격성 경찰부대용 안전방패	5.02	1,300
	방검성능이 부여된 차세대 경찰 외근조끼	8	2,500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탐색 기술	6.6	3,050
	신고자 맞춤형 112 신고 시스템(보이는 182)	1.68	1 (시스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21	19
	합 계	68.48	

- (현장실증 강화) 실증관서를 확대하여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현장적합성 제고(참여 관서 대상 가점 부여)

▶ ('24년) 17개 과제 52개 관서 → ('25년) 18개 과제 75개 관서

- (R&D 국제협력 체계 강화) 독일 NRW주 범죄수사청과 국제공동연구 2건에 착수하고,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 과학기술청 대표단 초청 간담회(10.22) △ 미래국장-과학기술청장 협력회의(10.29)

- 또한, 인력교류를 통해 현지 수사·R&D 부서 업무과정에 참여하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초국경 수사역량' 향상 도모

* △ 과학기술청 대표단 초청 간담회(10.22) △ 미래국장-과학기술청장 협력회의(10.29)

※ (독일 → 한국) 11. 24. ~ 12. 21.(4주) 3명을 경찰청 등에서 교육
(한국 → 독일) 11. 17. ~ 12. 21.(5주) 4명을 쾰른경찰청 등에서 교육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시, 기업들의 참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참관객은 제자리 수준으로 참관객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연구성과물의 현장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 참여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최지 변경 등을 통한 **참관객 확대 방안 마련**
- 현장 실증을 통한 시제품의 성능검증과 현장 적용성 강화 필요한 만큼 담당 국·관과 협력하여 실증대상 과제 및 실증관서 확대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독일 위탁교육생 선발	11월	○ 위탁교육생 선발 완료함	정상추진
○ 혁신제품 시범도입	12월	○ 혁신제품 시범도입 완료함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55	▶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연계성 및 성과지표 설계 적정성 인정됨 ▶ 목표와 성과지표 연계는 적정하나, 치안산업박람회에서의 편중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음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67	▶ 경찰청 최초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치안산업대전 예산 증액 노력함 ▶ 과학치안 산업이 확대되어 긍정적
2-1-2. 추진계획 준수도	3.0	▶ 해당사항 없음
2-2. 업무 추진과정의 적극 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14.17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 적극행정 노력도 등 인정, 실질적 협업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19.55	▶ 혁신제품 현장 도입을 신규 기준으로 설정 ▶ 설정된 목표치의 상향률 및 성취도 비율 적정함
3-2. 정책효과성	19.07	▶ 연구개발물의 사업화 지원이 잘 되었음 ▶ 혁신제품 현장보급에 성과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함
3-3. 향후 기대효과	4.62	▶ 현장에 바로 쓰여질 수 있는 장비들로서, 효과성과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3-4.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3.72	▶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 의견수렴을 한 점이 바람직함 ▶ 카드뉴스 활용, 치안산업협의체 구성 등 정책환류 노력 좋음
4-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62	▶ 추진정책에 대한 적극적 언론보도 활동 인정됨 ▶ 국제치안산업대전 등 대국민 홍보 긍정적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4	○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관객 확대방안 마련	○ 개최지 변경 등 방안 마련('26.6월)
	○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구협력 지속 확대	○ '25년 2건 → '26년 4건으로 확대('26.11월)

(1) 평가결과 (1~2페이지)

□ 주요성과

-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해지는 AI 환경에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지속적 개선 추진
 - ※ △표준용어(12,861개) △표준단어(4,869개) △표준도메인(1,264개)
- AI·치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산시켜 과학적 치안활동 활성화에 기여
 - ※ △주거 및 공용 공간 내 이상행동 영상 데이터 등 3종 비정형 데이터 연계
- 경찰 법무·지식정보(법령, 매뉴얼 등)를 신뢰 가능한 출처에 근거한 검색·요약을 제공하는 AI 기반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 ※ 지식마당-지식Q&A △단문(1,400개) △중문,장문(500개) 구성 Q·A set 활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25년 5월 부, 경찰청의 AI TF창설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던 인원이 타 부서에 재배치 됨(11명 중 3명 전출)
 - － 이에 따라, 연초에 설정한 성과지표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으나, 타 부서로 재배치된 인원과 임무를 재분배 하여 성과달성 추진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 국관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연계 추진이 필요하나,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부재로 한계
 - ※ '25년 IRM 기준 82개 중 53개 연계 완료
- 현재 정형데이터 위주의 품질관리체계 확립으로 비정형·AI 학습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치안 데이터에 대한 품질 기준 확립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데이터팀을 미래과로 통합해 치안 AI 혁신(AX)를 강력히 추진하

고, 데이터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미래치안정책국이 AI 정책·사업·데이터 인프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①AI 및 데이터 정책 총괄 ②AI 사업 및 대외협력 ③AI 인프라·보안을 담당하는 3과 체계로 재편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준수 여부 확인되도록 간략히 기재)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AI·데이터분석 경진대회 개최	11월	○ 특진 1명, 승급 5명, 표창 2명 최종 8건 선발 완료 ('25년 5월 계 분리로 AI TF에서 실시함)	정상추진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결과 보고	12월	○ '25년 행안부 품질관리 정책에 따른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표에 맞춰 신규 추가 및 기능 개선(신규 6개, 기능개선 15개 완료)	정상추진
○ '25년 데이터분석 교육 성과 보고	12월	○ 데이터 분석 교육 성과 결과보고 완료 (AI·데이터 기반 범죄예방 기능특화 위탁교육등)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페이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2-2. 추진계획 준수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5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치안 활동 활성화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26.3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 수립('26.3월)

(1) 평가결과 (1~2페이지)

□ 주요성과

- **전 경력 주기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으로 과학수사 인적 전문성 강화**
 - － (채용) 현장감식^{25명}, 범죄분석^{5명}, 뇌파분석^{2명} 등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영입
 - － (교육) 과학수사 인재양성 교육·훈련계획 수립, 맞춤형 석사과정 (계약학과) 등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15개} 운영
 - － (자격) 경찰 내부 과학수사 분야 전문수사관 자격 인증에 더하여 해외 국제자격 취득^{현장감식(10명), 폴리그래프(2명)}까지 지원
 - － (평가) 시도청 과학수사 부서 평가 및 ^{현장감식·검시조사} 팀장 업무평가 제도 구축으로 과학수사 분야 전문성 및 현장 리더 역할 제고
- **첨단 시설·장비 보급 및 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수사 물적 인프라 강화**
 - － (시설) 과학수사관 팀워크 강화 등을 위한 실습 중심 모의 범죄현장(Mock Scene) 훈련시설 구축^{경북청}
 - － (장비) 과학적 증거 분석을 위한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
 - ※ △비파괴 검사장비(3대) △화학물질 성분분석기(1대) △신속 DNA 분석기(2대) 등
 - － (시스템 고도화)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고도화로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재난희생자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 (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과학수사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25년 대비 23억 원^{4.4%} 증액하여 정부 예산안 편성^{547억 4,100만 원}

- ▶ (과학수사역량강화) 과학수사 장비 첨단화 및 기법 다양화 등 인프라 확충<504억 300만 원>
 - ▶ (과학수사시스템구축) IT 등 기반 지능형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41억 2,600만 원>
- **효율적 현장 대응을 위한 ‘광역의 광역화’ 등 과학수사 운영체계 고도화**
 - － (중점 시도청) 특수감식 분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점청

지정·운영, 인력·장비 등 총력 대응체계 구축^{'26년 예산 5.14억 원 편성}

※ 중대재해 사고 전문 감식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과학수사팀 신설(경기남부청)

- (화재감식 전문화) 화재감식 분야 전문화를 위해 '화재감식팀' 전국 확대^{세종청 제외} 및 '전기차 화재 전담팀' 신규 발족
- (광역 범죄분석) 이상동기범죄 면밀 분석을 위한 광역회의·전문가 훈련 및 전조증후 대응 강화^{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운영}
- (항공기 사고대응) 항공기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항공대와 협약(MOU) 체결, 위탁교육^{항공기 사고조사} 및 학술행사^{공동세미나} 개최

○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체계 강화

- (관계기관 협업) 과학수사 관계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회 및 K-DVI 합동훈련 개최를 통한 유기적·실질적 협업체계 구축
- (전문가 협업) 과학수사 주요 정책·활동에 대한 자문위원 참여 확대 및 학계·법조계와 네트워크 강화

▶ (과학수사 자문위원) △법의학 등 5개 분과/107명, △사건 자문 12건, 정책 자문 30건 실시
▶ (로스쿨 특강 등) 한양·충북·충남·부산·고려대 특강(증거법과 과학수사) 및 법전원장 등 간담회

- (국제협력) 국제적 과학수사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해외에 한국 경찰의 첨단 과학수사 기법·장비 전수

▶ (국제 학회 참가·발표) △인터폴 DVI 컨퍼런스^{5월*} △미국 국제감식협회^{11월} △아시아법과학네트워크^{AFSN 8월} 등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사례 발표로 해외 각국의 정보 공유·교류 요청 및 협력제안 등 문의 쇄도」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초청연수^{UAE} △견학실습^{우즈베크·몽골·캄보디아 등} △착수조사^{페루·베트남} △자체추진^{페루} 등

- (컨퍼런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인 「제11회 국제 CSI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총 29개국, 4,916명^{역대 최대인원} 참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관계기관 등 대외에 비해 대내적인 적극적 의견수렴 및 환류는 미흡
※ 개선 방안 논의, 사기진작 등 이외 대내 의견수렴 및 환류 부각 내역 기재가 미흡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획득(4.345점/5점)
※ 수사기법 등 노출 등 우려로 소극적인 과학수사 정책홍보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내 환류) 워크숍·합동훈련 등 진행 시 일선 과학수사관 등의

현장 참여 활동 및 애로사항 등 적극 청취·반영 노력 부각 필요

- (정책 홍보)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한국 경찰 과학수사, KCSI 브랜드의 가치 향상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일정)	준수여부
○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을 위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1월	2025년도 과학수사 물품수급관리 계획 수립(1. 24.)	정상추진
○ 전기차 화재 전문감식팀 발대식 개최	2월	전기차 화재 전문감식팀 및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2. 5.)	정상추진
○ 현장감식 정기 업무능력 평가 계획 수립	3월	'25년 현장감식분야 정기업무 평가 계획(3. 11.)	정상추진
○ 과학수사관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	3월	'25년 과학수사관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3. 20.)	정상추진
○ 항공사고 관련 대응 역량 강화 MOU 체결	3월	경찰청-한국항공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3. 17.)	정상추진
○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운영	4월	제7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 심사 실시(4. 22.)	정상추진
○ 과학수사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4월	'25년 「경찰-국과수-해경 업무협의회」 개최(4. 24.)	정상추진
○ 인터폴 DVI 컨퍼런스(워킹그룹) 참가	5월	인터폴 DVI 컨퍼런스(프랑스) 참석 및 발표(5. 19.)	정상추진
○ 과학수사 교육 종합계획 수립	5월	2025년 과학수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4. 21.)	정상추진
○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6월	2025년 현장감식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계획(6. 20.) 등	정상추진
○ 과학수사 소식지(KCSI 매거진) 발간	7월	과학수사 소식지 'KCSI MAGAZINE' 제25호 발간(4. 30.)	정상추진
○ 상반기 현장감식 활동성과 분석	8월	'25년 상반기 현장감식 활동성과 분석(8. 18.)	정상추진
○ 국제감식협회(IAI) 컨퍼런스 참가	8월	제109회 국제감식협회(IAI) 컨퍼런스 참가(8. 10.~15, 美 올랜도)	정상추진
○ 과학수사 맞춤형 석사과정(계약학과) 운영	9월	2025년도 과학수사 맞춤형 석사과정(계약학과) 운영계획 수립(5. 15.)	정상추진
○ 범죄분석관 직무 전문화 교육계획 수립	9월	2025년 범죄분석관 전문화 교육 운영 계획 수립(9. 1.)	정상추진
○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11월	제11회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11. 18. ~ 19.)	정상추진
○ 「과학수사대상」 선발·포상	11월	제21회 과학수사대상 수상자 선발(10. 15.) 및 수여(11. 4.)	정상추진
○ 경북청 모의 범죄현장 구축	12월	경북청 모의 범죄실습장 구축 완료(9. 1.)	정상추진
○ BEST 과학수사팀 선발	12월	2025년 BEST 과학수사팀 선발(12. 1.)	정상추진
○ 중점 시도청 운영 세미나 개최	12월	2025년 중점시도청 추진사항 발표(12. 23.)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총점 91.399점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10점)	9.145	▶ 과제 선정 및 이를 위한 전략체계 구성이 긍정적 ▶ 정책과제 지표 설계가 적절함 ▶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가 적정하다 평가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7점)	6.327	▶ 인적, 물적, 운영체계 차원이라는 수사체계의 고도화 노력 인정 ▶ 시스템 고도화와 로스쿨 특강 등 전문가 협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과제 추진 과정에서 문제 인식과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기에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추진 노력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2-2. 추진계획 준수도(3점)	3.0	▶ 계획대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15점)	13.873	▶ KCSI 고도화를 위한 노력 인정. 특히 새로운 과제 추진의 연계성 인정 ▶ 현안 해결을 위해 형식적 매뉴얼에 그치지 않고, 제도 및 절차 개선방안 검토, 현장 요구 반영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적극행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줌 ▶ 업무 특성상 업무추진 과정 대외 협업도 우수하고, K-DVI 고도화 등 적극행정 추진 사항도 노력도 인정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20점)	18.373	▶ 설정된 목표치에 대한 상당 부분이 긍정적으로 달성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목표치를 초과하는 성과가 확인되기에, 성과지표와 연계된 추진활동이 체계적으로 과제의 실효성과 정책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평가함 ▶ 추세치를 통해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근소한 차이로 달성/미달성이 발생하였으나 긍정적으로 평가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25점)	22.945	▶ 과학수사를 위한 체계화 노력 인정되며 향후 효과 역시 기대 ▶ 정책효과성 및 기대효과 매우우수로 평가함 ▶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효과성이 드러남 ▶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제도 정착을 통해 정책 효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데이터 축적과 후속 조치를 통해 지속적, 누적적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 필요성이 평가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효율성, 편익 증대 면에서 모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한 정책과제들로 평가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15점)	13.391	▶ 다양한 국내외 지식 및 경험 교류를 통한 활동의 선진성 확보는 긍정적 ▶ 협력강화, 논의, 협업강화, 협력기반 마련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 보다 구체화, 객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음 ▶ 대외의 경우 매우 우수하나 대내의 경우 방안 논의, 사기진작 등만 있어 정책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환류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타 기관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정책 및 의견수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5점)	4.345	▶ 행사 이외에 성과에 대한 보도실적이 조금 아쉬움 ▶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대국민 안내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 관련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하였으면 하는 평가 ▶ 추진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등 홍보 성과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6	○ 대외와 더불어 대내적인 의견수렴 및 환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내부 행사 과학수사 지휘부 워크숍 등 및 훈련 등 진행 시 내부 의견수렴 시간 마련 및 반영내역 환류(연중)
	○ 과학수사 기법 노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홍보 필요	○ 과학수사 성과(객관지표 증거채취율 등 향상,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보도자료 등 배포(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과학수사시스템 고도화

- (GeoProx) AI 도입 및 최근 이슈범죄 유형별(피싱·마약·실종) 특화 기능 확대 등 「'25년 GeoPros 고도화 사업」 추진

▶(목표) △AI 도입, △지난해 '피싱'에 이어, '마약·실종' 등 주요 이슈 범죄 분석에 특화된 전용 기능 추가
 ⇨ 경찰 부서별 일상 업무 활용성을 강화한 '지도 기반 업무 허브(HUB)' 구축의 초석 마련

▶(사업 기간·예산) '25. 6. 10. ~ '26. 1. 6. (210일), 7.6억원

▶(주요 내용) ①챗봇 도입(직관적 분석 환경 구축), ②피싱·마약·실종 등 특화 분석 기능 확대 ③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기능 개발, ④디지털 증거물 촬영 위치 지도 시각화 기능 개발, ⑤핫스팟 속도 개선 등

-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과학수사 자료관리 3종 시스템(지문 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구축 사업 추진(2차년도) 및 '26년 3차 재구축 사업 예산 확보(23.3억원)

▶(주요 추진내용) △지문 검색속도 개선 △AI 활용, 지문분류 정확도 개선 △최신 지문 매칭 알고리즘 도입, △이중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장애 대응성 강화 △AI 기반 종합 장애대응시스템 도입 예산 확보(12.4억원)

- (수사지원포털) 수사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사기법·행정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

▶①手記 행정업무 전산화(△범인검거 보상금 관리 기능 △민간 통역요원 관리 기능 △마약류 간이시약기 관리대장) ②산재된 수사기법·교육자료 통합(LLM 적용 기반 구축)

- (AI 적용 감정·분석) △지문분석 △얼굴인식 △족적검색 등 감정·분석 시스템에 AI 적용 등 고도화

▶(지문분석시스템) AI 적용 △지문 이미지 개선 △자동검색 의뢰 △순위 재정렬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기여 886건('25년 3~9월), AI 적용 겹친지문분리시스템 시범운영(10식)

▶(얼굴인식) 수사 지원 신속성 제고를 위해 간이 얼굴검색(10분 이내 확인) 및 검색 결과 자동알림 기능 개발

▶(족적검색) AI 족적 이미지 선명화 및 유사족적 자동검색 개발로 검색 발견율 향상 기반 구축, 신규기능 실증

- (첨단 과학수사 R&D) AI 등 첨단기술 활용성 제고, 현장 적용성 높은 연구개발 성과 도출을 위해 △과제발굴 다각화,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소 주기 관리체계 확립(11개 R&D 과제 300억원)

▶(과제발굴 다각화) AI 도입 아이디어 중심의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6월) 전년 대비 접수 54% 증가, 산·학·연 전문가 대상 기술 수요조사 등

▶(협력 네트워크) ①'25. 5월부터 경찰(치안과학연구소 포함)-국과수 間 R&D 협의체 운영, ②ISS World Europe 2025 콘퍼런스 참가, 과학수사에 접목가능한 기술장비기법 사례 수집, ③KAIST와 로봇기술 도입 논의

▶(R&D 운영) △유해기체 포집·분석 통합운영시스템('25~'27, 6억원), △현장감식 효율성/정확성 증대 기술개발('25~'27, 10억원),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21~'25, 10억원) 등 첨단기술 접목 연구개발 지속 추진

▶(신규 R&D) '27년 R&D 수요 제출 ⇨ 2개 과제 선정(△재난안전 신속 신원확인 3년 30억원, △AI 기반 시산 표류속도 추정 솔루션 3년 50억원)

② 과학수사 전문성 강화

- (감정 인프라) 감정관 평가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교육, 첨단 장비 보급 등 감정 역량 제고 추진

- ▶ (감정관 평가제도 및 인력풀 운영) 평가제도 개선(△ 평가 주기 2년 1회로 통일, △ 감정 경력 인정 유형 다양화, △ 평가결과 활용 확대 등), 감정분야별 인력풀 선발(폴리그래프29, 법치면4, 영상분석5)
- ▶ (전문인력 양성교육) 문서감정(3·6·9월) 법심리(9~11월), 뇌파검사(8월), 폴리그래프 국제자격 취득 국외(9~11월)
- ▶ (감정장비 확대 보급) 뇌파검사 시스템(장비) 3대^{부산·인천·전북}, 영상분석 분석 장비(MD-Video 4대, SketchUp 전국 19대^{시도청별1대}), 고해상도 문서감정 촬영장비(1대) 보급, 인영감정 프로그램 개선 및 도입 추진(11월)

- (DNA) DNA 감정 수요 지속 증가('22년 267,036건 → '24년 301,908건)에 대응한 신속한 감정·결과 회신을 위해 국과수 감정 예산·장비 확충 및 DB 활용 수사 지원 강화

- ▶ (감정 지원) 국과수에 상반기 DNA 감정시약 27종(152.1억), 자동 DNA 분석기 등 감정 장비 79대(16.8억) 구매보급
- ▶ (첨단 장비) DNA 감정·분석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신속 DNA 분석기 구매·보급(2대, 5.4억원, 누적 총 10대)
- ▶ (예산 증액) DNA 수사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DNA 시약·장비 등 '26년도 예산 증액 추진(+19.43억원, +8.8%)
- ▶ (DNA DB) 경찰·대검·국과수 등 기관 간 상호 DNA DB 검색을 통해 '25년 3,714건의 DNA 검색 일치 등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
- ▶ (사건 해결)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179명^{DNA 32명 지문 147명}, 경북 대형산불 희생자 31명^{DNA 14명 지문 등 17명} 등 신원확인 기여
- ▶ (신속DNA가이드라인 제작) 신속 DNA 분석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으로 객관성·신뢰성 확보 및 분석기법 표준화

- (뇌파검사) 채용·R&D 등 전문성 제고, 분석 프로토콜 정립 등 「뇌파검사 운영 종합계획」 체계적 이행

- ▶ (전문성 제고) △ 뇌파분석관 채용(2명, 6월), △ 뇌파검사 최신 기술 동향 조사(4월) △ 허위진술 판별을 위한 폴리그래프, 시선추적기술, 뇌파를 융합한 뇌파활용 진술진위 판별 기법장비 개발 R&D 수행('22~'25, KAIST, 15억원)
- ▶ (분석 프로토콜 정립) △ 실무 데이터·자료 축적·분석('24.11.~ '25.10. 총 91건) △ 실무사례 분석회의(3회) 실시

- (법곤충) 국내 최초 개소한 「법곤충감정실」 운영 활성화 및 기법 고도화로 점증하는 변사사건 대응역량 강화

- ▶ (교육) 현장 과학수사관 대상 법곤충 감정기법 교육(5월), 시도청 감정기법 세미나 개최(4회)로 법곤충 감정 기법 활용도 제고
- ▶ (기법 고도화) 법곤충 DB 확대(現 3종 → 10종) 및 사후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 고도화 등 R&D 수행('22~'27, 61억원)
- ▶ (인력 확충) 임기제공무원 2명 배치(6월), 국제공인인정 기준 충족을 위해 감정 인력 정규화·증원 추진(+2명)

③ 과학수사 객관성·신뢰성 및 증거중심 환류체계 구축

- (PCSC^{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정 이행 대응}) 美 측은 '08년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조건으로 PCSC 협정 이행을 요구, '22년에는 VWP 연장조건으로 EBSP^{강화된국경보안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추가 요구
- (국제표준^{ISO}·국제공인^{KOLAS}) 과학수사 기초자료(지문 및 범죄·수사경력) 관련 업무체계에 대한 국제표준ISO과 증거 감정·분석 국제공인KOLAS 유지·운영,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개최 등 경찰 과학수사의 공신력·신뢰성 제고

- ▶ (ISO) 표준화된 업무체계 구축 및 과학수사 자료관리의 국제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25년 기록경영·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유지심사 결과(10월) 인증 유지
- ▶ (KOLAS) '25년 제2회 공인숙련도 시험 실시(6~8월, 31개국 17개 기관, 개인 285명 국내88, 해외197 참가)
- ▶ (인터폴 공동개최'25년 최초, 제2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인터폴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 경찰의 세계최고 수준 지문감정 역량을 결합하여 공신력 있는 국제대회로 자리매김(총 58개국 299명 참가 성과)

- (범죄경력 회보 정확성 제고) △ 전국 범죄경력 회보 담당자 교육(4월), △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범죄경력회보 비상대응체계 운영(5월), △ 업무편람 개정·제작(6월) 등 회보 정확성 강화
- (과학수사 결과타당성) 감정·분석 결과 법정증명력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감정관 전문성 강화

구분	주요 내용
국내위탁	법심리 분석 전문인력 양성(9~11월) ^{진행 중} , 뇌파검사 역량 강화(8월) ^{완료}
국외위탁	폴리그래프 검사 국제자격 취득(9~11월) ^{진행 중}
KOLAS	KS Q ISO/IEC 운영 실무(3·7월) ^{완료} , 측정불확도(3~8월) ^{완료} , KOAS 감정·분석관 능력평가(9~10월) ^{완료}
워크숍	영상분석관 정기 워크숍(3월) ^{완료} KOLAS 감정·분석관 정기 워크숍(5월) ^{완료}
집체교육	지문감정관 심화 교육(2·6월) ^{완료} , 문서 감정 실무교육(5~6월) ^{완료} , 즉윤적 감정기법 교육(5월)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보도자료와 내부홍보를 넘어 더 폭넓은 채널을 통해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과 최신 기법 등 우수성과 홍보 필요
 - (내부)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해 내부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직원의 참여 등 입체적인 홍보방안 마련에 다소 미흡
 - (외부) 언론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등을 통한 홍보를 넘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널 활용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내부)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GeoProsX 공모전, 과학수사 기법·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수사기법 경진대회 수상작 현장 공유 등 과학수사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 병행
- (외부) 공모전·경진대회 홍보 시 유관기관·기업 현장설명회, 국제 지문감정경연대회 국제 홍보 등을 통해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 적극 홍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경찰청 지문감정 분야 KOLAS 숙련도시험 결과보고서 수립	11월	○ 경찰청 지문감정 숙련도시험 최종 결과보고서 보고(10.21.)	정상추진
○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 중간 보고	12월	○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 중간 보고회 개최(10.30.)	정상추진
○ '25년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보고	12월	○ '25년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보고(11.10.)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955	▶ (대표성) 과학수사분석과는 凡 수사기능 지원 및 수사현장 문제해결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I 등 첨단기술 도입·적용을 통한 첨단 과학수사로의 도약을 부서 정책 목표로 설정함 ▶ (연계성) '25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및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와 연계 ▶ (적절성) 수사인프라 확충 지수와 법과학 감정분석 역량 강화 지수는 課 핵심 업무인 凡 수사기능 지원 및 수사기법 연구개발, 증거 감정분석, 지문범죄경력 자료 관리 등 과학수사를 넘어 수사 全 기능을 지원하는 과학수사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지표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373	▶ ①AI-Digital 도입 등 과학수사시스템 고도화 ②과학수사 전문성 강화 ③과학수사 객관성·신뢰성 및 증거중심 환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첨단 기술 선제적 도입 △적극적 예산 확보 △전문 교육훈련 수행 △업무절차 개선 △국제인정 획득 △인적 전문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현장수사관들이 만족하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GeoProsX '24년 1~9월 66만건 → '25년 1~9월 124만건 / 3D얼굴인식 '24년 1~12월 1,560건 → '25년 1~9월 2,093건 등), 수사 인프라 확충 지수('22년 101점 → '25년 1~10월 241점)과 법과학 감정분석 역량 강화 지수('22년 66.5점 → '25년 1~10월 82.5점)를 지속 개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2.818	▶ 모든 과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일정을 준수하여 정상 추진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636	▶ (협업도) 행안부(침수흔적도 데이터 연계), KAIST(로봇기술 연계), 정보화기반과(데이터 연계, 시스템 고도화), KAIT(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예산 공동 대응) 등과 협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 (적극행정 노력도) 수사관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견, 해결하기 위해 수사협조기관 연락처 관리기능을 직접 개발하였고(기존에는 엑셀 파일로 관리), 현장 수사관과 112 상황요원이 불편을 호소했던 WASS 의뢰서 작성 절차를 개선하였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027	▶ 全 성과지표 초과 달성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①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R&D 등 수사 인프라 확충 지수(50%)</td><td>235점</td><td>241점(103%) 초과 달성</td></tr> <tr> <td>② 법과학 감정분석 역량 강화 지수(50%)</td><td>81점</td><td>93.5점(115%) 초과 달성 예상</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①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R&D 등 수사 인프라 확충 지수(50%)	235점	241점(103%) 초과 달성	② 법과학 감정분석 역량 강화 지수(50%)	81점	93.5점(115%) 초과 달성 예상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①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R&D 등 수사 인프라 확충 지수(50%)	235점	241점(103%) 초과 달성									
② 법과학 감정분석 역량 강화 지수(50%)	81점	93.5점(115%) 초과 달성 예상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645	▶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R&D 등 수사 인프라 확충 지수('24년 177점 → '25년 289점) 및 법과학 감정분석 역량 강화 지수('24년 75.5점 → '25년 99점) 등 성과를 거양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455	▶ 정책수립·시행에 앞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 근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음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636	▶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 및 다양한 최신 기법·시스템 소개 등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경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경찰 외부 홍보가 필요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7	○ 보도자료와 내부홍보를 넘어 더 폭넓은 채널을 통해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과 최신 기법 등 우수성과 홍보 필요	○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GeoProsX 공모전, 과학수사 기법·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수사기법 경진대회 수상작 현장 공유 등 과학수사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 병행(연중) ○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대외 홍보 시 유관기관·기업 현장설명회, 국제지문감정경연대회 국제 홍보 등을 통해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 적극 홍보(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캄보디아 납치·감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역량 총 결집

- 캄보디아 사건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 사태 조기 해결 및 초국가 범죄 대응·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인프라를 총 동원

- ▶ (해외파견) '코리아 전담반' 설치(7명), 협력관(1→4명)·주재관(1→2명) 증원
- ▶ (고위급 회담) △ IPS 시 차장급 회담(10.20.) △ 캄 청장·내무부장관 등 회담(11.10.)
- ▶ (ODA) '26년 신규 프로젝트 ODA 발굴 추진(사이버 분야, 총 25억원 규모)

② 제5차 국제경찰청장회의(IPS) 성공적 개최, 실질적 치안연대 구축

- '25.10.20.~24.간 총 27개 국가·기관 초청,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 치안연대 구축 계기 마련

※ 최초로 '공동선언문' 채택을 도입, 회의 결과에 대한 합의 이행력을 강화

③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치안협력 인적 네트워크 강화

- △ 치안 ODA △ 초청행사·방한지원 △ 치안협력 MOU △ 주한공관 협력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 전개, 치안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 ▶ (교류협력 활동) △ 청장 출장 1건 △ 초청행사 2건 △ 방한지원 12건 △ MOU 4건 등
- ▶ (ODA) 주요국 중심 ODA 12건 면밀 추진, '26년 ODA 예산 대폭 확대(30→43억원)

④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적 기획·조정·지원 확대

- 각 기능·기관이 개별 추진 중인 국제협력 업무가 청 차원의 통일된 전략하에 추진되고 시너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칙 등 정비

※ △ 경찰청 국제협력 운영규칙(제정 추진 중) △ 쏘 기능 합동,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등

⑤ 초국가범죄 대응·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조직개편) <본청> 국 격상, 1과·4계 확충 및 인원 확대(56→110명)
< 시도청> 시도청 국제공조계(반) 신설 및 공조인력 확대(22→64명)
- (해외파견) 경찰주재관 11명(69→80명), 경찰협력관 14명(11→25명)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주요 활동이 ‘행사 개최·MOU 체결’ 등 외형적 확장에 머물러 있어 보이며, 민생 치안에 미친 효과성 입증이 부족함
- 성과지표 중 ‘홍보지수’가 있는데 ‘폴넷 게시판’ 등 내부 홍보에 치중된 경향(경찰주재관 선발 공고문 게시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 연계성 강화) 작년 한해 캄보디아 등 초국가범죄 대응에 만전, 이와 같이 '26년에도 각종 국제협력 활동(국제행사, MOU, ODA 등)을 면밀히 기획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 노력
- (홍보 활동 다변화) 한인경찰 등 정보예산 사업의 경우 홍보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ODA를 비롯한 일반예산 사업은 ‘보도 자료 적극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소집회의	11월	○ 제5차 국제경찰청장회의(IPS) 시기(10. 20.~24.)에 맞춰 경찰주재관 11명 소집하여 회의 개최	정상추진
○ 제18회 해외 한인경찰 초청행사 개최	11월	○ '25. 11. 9.~14.간 서울·충주 등에서 5개국 한인경찰 13명 초청하여 행사 진행	정상추진
○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참석	12월	○ '25. 12. 7.~9.간 국제협력관 일본 출장, 한일 경찰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초국가범죄 정보 교환 및 국제공조 필요 사건 논의 ※ '25년은 중일 관계 악화로 중국 측 불참	정상추진
○ 주한 외국 공관장 치안간담회 개최	12월	○ '25. 12. 23. 경찰청 등에서 8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5명 초청, 경찰청 주요 치안정책 설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상추진
○ UNDP 디지털성범죄 ODA 사업 사업비 편당	12월	○ '25. 11월 UNDP 대상 ODA 사업 편당비 납부 ※ 납부금액 : 13억 3,200만원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182	▶ 지표가 행사·면담 건수 중심으로 설정, 협력 활동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55	▶ 개별 활동이 많지만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된 서술이 부족
2-2. 추진계획 준수도	2.909	▶ 일부 지연 추진된 과제 있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091	▶ 적극행정 관련, 워크숍 등은 일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318	▶ 홍보 관련, 내부 홍보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측면 있으며, 폴넷 게시판에 공고문 올린 것 등은 홍보로 판단 어려움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545	▶ 캄보디아 사태 등 언론화 된 이후 대처한 점은 아쉬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	▶ 대외 기관 방문 이외 간담회, 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182	▶ 방송 언론 등 보도 성과는 저조해 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8	○ 국제협력 업무의 성과 연계성 강화	○ 쉼 기능 합동, '26년 경찰청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2월), 이에 따라 연중 국제협력 활동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 성과 도출
	○ 홍보활동의 다변화 필요	○ 국제협력 업무 전반에 있어 적극적인 언론보도 배포 등을 추진하고, 대변인실과 협업하여 기획 홍보 등을 적극 실시 (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송환 강화) 전략적 공조체계 운영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 견고한 치안협력망 구축, '25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작년 대비 20% 증가 (691 → 828명) ⇨ 4년 연속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 신기록 달성

<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국내 송환	828	691	470	403	373
국외 도피	1,249	951	512	549	953

-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송환 작전」 ('25. 4. 1. ~ 11. 30.)

⇨ 국내·외 결집된 공조 역량을 바탕으로 집중검거 대상자 203명에 대한 범부처 집중추적 전개, 총 69명 소재확인, 46명 검거, 31명 송환

- ▶ (베트남) 경찰주재관·공안부 등 합동작전을 통해,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총 104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현지 검거 (5. 14.) 및 강제송환 (5. 22.)
- ▶ (태국) 국제협력관 명의 서한문 발송 및 한·태 합동작전 등 양국 간 지속 공조로 다국적 마약 조직 ('준기파') 부총책 현지 검거 (5. 13.) 및 강제송환 (8. 8.)
- ▶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필리핀 경찰·해군정보국 등 합동작전을 통해, 5조 원대 사이버도박 조직원 9명 현지 검거 (6. 25.), 전세기 송환으로 강제송환 (9. 3.)

- ('국제공조협의회' 발족) 국제기구·주요국들과 스캠단지 단속을 협의하는 플랫폼인 「국제공조협의회」(10.23. 서울, 의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족

※ △ 국제경찰기구(인터폴·아세아나폴) △ 한국, 아세안 주요국(태국·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필리핀), 미국, 카타르, UAE 9개국 참여

- △ 피의자 추적·검거 △ 피해자 구출 △ 범죄자금 동결·환수 등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개최(11.11.~12. 서울)

※ △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 UNODC) △ 韓, 태, 캄, 라오스, 말련, 베, 필, 인니, 브루나이, 캐나다, 호주, 美, 英, 中, 日, UAE 등 16개국 참여

- ('코리아 전담반' 출범) 한-캄 정상회담(10. 27.) 및 한-캄 경찰청 간 MOU 체결(11. 10.) 후, 「코리아 전담반」 개소(한국측 7명, 캄측 12명)

- △ 재외국민 피해신고 신속 대응 △ 스캠단지 등 피의자 검거·피해자 구출 △ 범죄정보 수집 강화 ⇨ 피해자 3명 구출, 피의자 94명 검거 성과

- (국제사회 대응 촉구) 경찰청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가국들에게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대응을 촉구,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왔음

- ▶ (인터폴 아시아지역회의, 9월 싱가포르)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국제공조담당관 인터폴 아시아위원회 초대위원으로 선출
- ▶ (국제경찰청장회의, 10월 서울) '초국가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주제 공동선언문 만장일치 채택 / 국제공조협약체 발족식 개최(10.23.)
- ▶ (아세아나폴 총회, 11월 방콕) 한국 제안 '브레이킹 체인즈' 공동성명 만장일치 채택
⇒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펀딩 프로젝트('27~'29 19.7억원 규모) 추진 중
- ▶ (인터폴 총회, 11월 모로코) 한국 발의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대응' 결의안 압도적 찬성 표결

- (아세아나폴 펀딩) 경찰청-아세아나폴 간 초국가 스캠단지 와해 · 합동 단속 등 공동 대응을 위한 펀딩 사업 및 MOU 체결 추진

- 외교부와 협의, 韓-아세안 협력기금*(3년간 약 20억원) 예산 확보 노력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제고를 위해 외교부에서 운영 중인 2,800만불 규모의 기금

- (인터폴 펀딩) 경찰청 주도로 진행 중인 인터폴 펀딩 사업*(△경제범죄 △도피사범 추적)을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에 집중, 피의자 검거에 주력

* '20년부터 ①경제범죄 ②도피사범 ③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年 15억원 규모의 펀딩·작전 중

- 인터폴 은색수배서 · I-GRIP 등 활용, 범죄수익 추적 · 동결 추진

- ▶ (은색수배서) 해외 유출 범죄자금 추적 · 환수를 위한 은색수배서 시범운영 ⇒ 8대 발부
- ▶ (I-GRIP) 인터폴 사무총국 지원을 받아 범죄수익의 신속한 동결 · 환수를 도모

- (인터폴 NCB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공조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적근거 강화를 위한 경직법 개정 ⇒ '25. 12월 본회의 통과, '26. 1. 6. 공포

- 또한, 범정부 공동 활용을 목표로 '국제협력포털' 시스템 고도화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 '25년 발족한 '국제공조협약체'를 제도화, △초국가 합동작전 확대 △안티 스캠센터 설립 지원 △스캠단지 범죄 정보 공유·관리 △우수전문가 현지 파견, 역량강화 · 교육훈련 등 추진

- '26년은 인터폴 3기 펀딩 시작 첫 해로, 스캠단지와 연계한 계획 수립 및 인터폴 外 유로폴 등 국제기구 · 주요 공조국 작전 참여 확대

- (정보 수집 · 분석 강화) 신설되는 '해외안전정책계' 활용, 초국가 범죄 · 해외 사건사고 등 관련 첩보 수집 · 분석,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준수 여부 확인되도록 간략히 기재)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범부처·초국경 국외도피사범 합동검거」 운영성과 보고	11월	○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송환 작전' 운영성과(4.1.~11.30.) 보고('25. 12. 8.)	정상추진
○ '25년 시도청 국제공조 운영성과 보고	11월	○ '25년 시도청 국제공조 운영성과(1.1.~12.8.) 보고('25. 12. 24.)	정상추진
○ 제93차 인터폴 총회 참석	11월	○ 제93차 인터폴 모로코 마라케시 총회 참석	정상추진
○ 인터폴 3기 펀딩 로드맵 수립 및 MOU 체결	12월	○ 인터폴 사무총국과 기존 2기 사업(HAECHE, MAYAG, INFRA-SEAF) 연장 합의('25. 10월) ⇒ '26.3월 체결식 예정	정상추진
○ 인터폴 전산망 광주 이전	12월	○ 인터폴 전산장비 광주 이전 승인('25. 12. 29.)	정상추진
○ 마약 관련 지역공조 작전 개시	12월	○ 국내 마약유통사건 관련 공조작전회의 개최('25. 12. 10.)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페이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2-2. 추진계획 준수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9	○ 초국가범죄 스캠단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국제공조협의체' 제도화 계획 수립('26.1월) - 국제기구·주요 공조국 참여,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개최(2월, 서울) 및 작전 개시(수시 회의) - 협의체 총회 개최 추진(6~7월)
		○ 인터폴 3기 펀딩 운영 계획 수립('26.1월) - 인터폴 사무총국과 MOU 체결 및 운영(3월~)
	○ 해외 파견 경찰주재관 및 관계기관의 현지 정보수집·의견수렴 필요	○ 국제공조2과 소속 해외안전정책계 신설('26.2월) - 해외 파견 경찰주재관·협력관의 첩보 수집·분석 및 해외 사건사고·초국가범죄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강화

□ 주요성과

- 인권·안전에 유의한 집회·시위 대응으로, 전년 대비 경력배치 집회는 8.6%^{10,287 → 11,167건} 증가하였으나, 불법·폭력시위는 43.3%^{30 → 17건} 감소
-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양질의 헌법교육으로 집회·시위현장에서 인권 보장 및 국민 안전 확보
- 필수 경비업무를 제외한 가용 경력을 △범죄예방 △교통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최대한 지원,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에도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 평가지표에서 배점 기준 대비 90%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지표 점수는 85% 수준으로 낮게 평가
 - ▶ (외부위원 A) 엄정 대응 방침 보도자료 배포 등 경직된 홍보에 치중됨. 일반 시민의 불편 해소 사례 홍보 부족
 - ▶ (내부위원 F) 평가대상 타 부서 대비 홍보실적이 매우 부족하나, 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질서유지라는 집회·시위 대응 업무 특성상 SNS 등을 통한 홍보가 어려워 보도자료 배포에 집중, 정책홍보 노력이 다소 낮게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집회·시위 대응, 민생치안 지원, 재난복구 지원 등 근무 중 미답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경비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
- 홍보기능과 협업을 통해 경비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획 홍보 검토
 - ※ 주요 집회·시위 현장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내활동 및 조치사항 등
- 내부 만족도 조사, 기동대 수사·정기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사 접수·개선하는 등 내부 홍보도 강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APEC 정상회의 투입 장비 현장점검	10월	○ 10.13.~10.24. 특수차량, 차단장비 등 일제점검 실시	정상 추진
○ 기동대 보유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하반기)	10월	○ 9.22.~10.24. 137개 기동대 대상 방패· 경찰봉·이격용분사기 안전점검	정상 추진
○ 방송조명차·안전펜스 등 안전 관리장비 구매 및 현장 보급	12월	○ 이동형 안전펜스, 방송조명차, 위생차, 다목적 LED전광판차 도입 완료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136	▶ 경찰 특수성이 가장 드러나는 업무분야로, 현장감 있는 지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636	▶ 대규모·장기 집회 상황에서 법질서 유지와 인권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교육·지침 하달 등 노력
2-2. 추진계획 준수도	2.909	▶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455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셨습니다. 경비 업무가 변화가 힘들고 업무난이도나 위험도가 높다고 익히 알고 있으나, 경비 경찰업무의 혁신이나 규제 완화 등 적극행정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다른 관점의 접근도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909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목표치 설정은 적절하였으며, 이에 대한 달성도 우수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455	▶ 엄격한 집회 소음 관리 및 현장 소요 장비 확충을 통한 집회· 시위 대응력 제고가 기대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636	▶ 현장 경찰관(기동대) 만족도 조사 및 장비 개선 반영 노력은 우수. 외부 의견수렴구조는 더 체계화가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27	▶ 집회시위 개최 전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홍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0	○ 현장 경찰관(기동대) 만족도 조사 및 장비 개선 반영 노력은 우수, 외부 의견 수렴구조는 더 체계화가 필요	○ 11월초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 집회시위 문화 △ 경찰 대응에 관한 인식 등 전화조사 실시
	○ 경비 경찰업무의 혁신이나 규제 완화 등 적극행정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다른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집회시위·경호 등 필수 경비수요 외 가용 기동대를 민생치안에 적극지원하기 위해 '경찰기동대 민생 치안 활용TF'를 구성하고 과제를 발굴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5년도는 사회적 이슈와 국민불편이 컸던 탄핵 찬반 집회, 도심권 대규모 집회와 APEC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치안 부담 가중
 - 집회시위의 자유·국민의 평온권 등 기본권과 공공질서와의 조화와 균형에 방점을 두되, 불법 무질서 징후를 보일 경우 엄정하게 관리
 - 광역정보 운영을 통해 정보수집 출처 다각화·광역화로 예고정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위험요인을 조기 발굴, 유관기관과 신속 공유하는 한편,
 - ‘합법집회는 적극 보장, 불법에는 엄정대응’ 기조下에 관련 기능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질서 확립·시민불편 최소화에 총력, 변수 없이 관리
- ※ 대화경찰을 집회시위 현장에 적극 배치(배치율 95.5%), 인권보호·안전확보에도 만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3개 모두 목표치 초과달성(평균 104.1%)하였으며, 내외부 위원 평가 총점(원점수) 94점을 획득하는 등 뚜렷한 미흡 사례는 없었음
- 다만, 집회·시위 관련,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 필요성 등 일부 위원의 의견에 상응한 지표변경 검토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화경찰 활동 평가지표 개선)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화경찰 활동의 효과성 등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공공갈등관리 전문교육 강화) △비폭력 대화기법 △대안적 분쟁 해결 △공공갈등 심리분석 등 다양한 교육^{자격증 취득 연계} 이수를 통해 평화적 집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정보교육 협의체 회의	12월	○'26년 정보교육 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교육협의체 회의 계획(11.20.)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727	▶ 집회·시위 정보활동 전 과정을 지표로 세분화(선제적 예방·협력·대화경찰·전문교육)하고, 가중치까지 부여해 정책과제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음. ▶ '대화경찰' 활동을 정량화(배치율, 활동건수)하여 관리 지표로 설정한 점이 적절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636	▶ 대화경찰 확대, 법률지원, 현장 상황관리 강화 등 집회·시위 갈등관리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탄핵 선고 등 민감 시기에 대화경찰을 62.3% 증원 운영하고, 시도청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임
2-1-2. 추진계획 준수도	3.0	▶ 추진계획은 적절히 이루어짐
2-2. 업무추진 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636	▶ 정보협의체, 자문위원회, 관계기관 협업 등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공공갈등·집회 대응역량을 강화함. 서 상황정보관제' 도입, '동원 운영 프로세스'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돋보임 ▶ 정부부처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과 시도청 유관부서와의 대내·외 협업을 바탕으로 국제행사 및 다중운집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대응태세 유지의 노력이 확인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454	▶ 목표 초과달성, 집회유형·지역별로 갈등 감소율·민원 감소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더 제시되면 결과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음 ▶ 다양한 세부성과지표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치에서 성과달성이 잘 이루어졌다 사료됨
3-2.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23.636	▶ 집회 인원은 폭증(125%↑)했으나, 불법 폭력 행위는 감소(30건→16건)한 것은 대화경찰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임 ▶ 사전 예고정보활동 강화 및 대화경찰 현장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경찰 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3.636	▶ 국민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자체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활용해 정책과 지표를 조정하는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음.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75	▶ 중재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언론에 부각하여 경찰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
21	○ 대화경찰 활동관련,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에 대한 설문조사 혹은 전문가에 의한 자문위의 평가에 대한 지표설계 검토 ○ 갈등관리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어떤 기법으로 현장에서의 평화적 집회 정착에 효과를 낼수 있는지 방안 필요	○ 집회·시위자문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화경찰 활동의 필요성·효과성 등에 관한 여론조사 문항 구성, 매년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긍정답변(매우만족·만족) 비율을 정량 지표화하여 자체평가에 반영 ○ △비폭력 대화기법 △대안적 분쟁해결 △공공갈등 심리분석 등 다양한 교육 자격증 취득 연계 이수를 통해 평화적 집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직자비리 등 부패범죄 대응역량 강화) '25년 공직자 등 부패범죄, 선거·집회, 각종 특별법위반 등 주요사건에 대해 수사의 적정성, 절차적 적법성 등 수사착수 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지휘·지도 관리

※ △공직자의 금품수수·직무범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리베이트 범죄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부동산 범죄 등 테마별 부패비리 기획수사를 통해 부패범죄 근절

'25년 특별단속 성과

- ▶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4. 9. 2. ~ '25. 3. 31.) ⇨ 1,394명 송치(구속 42)
- ▶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부패비리 1차 특별단속('25. 7. 1. ~ '25. 10. 31.) ⇨ 총 1,253명 송치(구속 31) ※ 2차 특별단속 추진 중, '25. 12. 31. 기준 총 266명 송치(구속 10)
- ▶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 10. 17. ~ '26. 3. 15.) ⇨ '26. 1. 9. 기준 137명 송치(구속 3명)

- 연간 약 7,000여건에 대한 실질적 수사 지도·감독을 통한 수사 완결성 제고, 균질한 수사결과 도출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도모

※ (보고·지휘 건수) '22년 ⇒ 6641건 ⇒ '23년 6530건 ⇒ '24년 6637건 ⇒ '25년 6,969건

- (선거사범 엄정 단속) '25년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 분위기 사전 억제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24시간 '수사 상황실' 운영, 엄정 단속 전개(4.9.~10.6.)하여 공명선거 확립
- 특히, 검사 선거사건 수사개시범위 축소에 따라, 선거사건 대폭 증가* 하였음에도 총력 대응을 통해 쏠 사건 면밀히 지도·관리 ⇨ 단기 공소 시효(12. 3.限) 內 사건 모두 종결(수사준칙 §7조 상 검사 협력절차 完)

'25년 선거사범 단속결과

- ▶ 제21대 대선 단속결과 ⇨ 총 3,180건·3,876명 단속, 송치 1,327명(구속11)
* 제20대 대선 1,792건·2,614명 대비, 1,409건(78.6%)·1,342명(51.3%) 증가
-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단속결과 ⇨ 총 150건·711명 단속, 송치 392명(구속8)
- ▶ 2025년 재·보궐선거 단속결과 ⇨ 총 92건·136명 단속, 송치 42명(구속 1)

- (집단불법행위 엄정 수사) 대규모·중대 불법행위 발생 시 시도청·

경찰서 수사전담팀 구성하여 수사역량 집중·관련 기능(경비·정보) 협업 ⇨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준법 집회 문화 정착 노력

※ (집시법 위반 검거인원) '23년 614명 ⇨ '24년 662명 ⇨ '25년 662명(잠정)

주요 집단불법행위 수사결과

- ▶ 서울서부지법 집단불법행위('25. 1. 18. ~ 1. 19) 수사 총괄 ⇨ 총 143명 송치(95명 구속)
- ▶ 의대 정원 확대 반발 의사 집단행동 수사 기획·관리·수사지도 ⇨ 총 63명 송치(2명 구속)
- ※ (관련 회의)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 10회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7회 참석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성과달성도 목표치) 일부 평가위원의 “수사완결도 목표치는 좀 더 높여 달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음
- '25년 수사 완결도 목표점수(50%)는 26.7점으로, 80점 만점 대비 다소 낮은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 이는 부패범죄 특성상 공무원 등에 대한 남고소·고발, 다수 민원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검거율·구속율이 민생 범죄 대비 낮게 도출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임
 - * 수사완결도(80점 만점) = 책임지휘건수(20점) + 검거율 송치인원/검거인원(50점) + 구속율 구속인원/송치인원(10점) - 장기사건비율(5점) - 요구요청비율(5점)
- 복잡한 지표 산식 구조로 인해 목표점수를 달성하였음에도 가시적으로 우수한 성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사완결도 지표 산식 개선 검토) 절대적 점수 목표치가 다소 낮아 보일 수 있는 점 및 부패범죄 특성 고려, 검거율·구속율 비율을 낮추고
- 부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사 지휘·지도 성과 지표인 책임지휘건수 점수(20점 만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 검토
 - * △책임지휘건수 점수를 50점, 검거율을 20점으로 비중 조절하는 방안 △‘검거율’을 ‘송치인원 / 검거인원’이 아닌 ‘검거건수 / 발생건수’로 조정하는 방안 등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연간 반부패·공공범죄 분야별 우수 수사사례 및 착안사안 제작·공유	11월	○ 월별 우수사례, 특진 사건 우수 사례 등 우수 공적 사례분석서 취합	정상추진
○ 연말 반부패·공공범죄 수사 분야 평가 및 포상 실시	11~12월	○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분야 특별승진 및 수사비·표창·장려장 지급	정상추진
○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회의 (경찰청-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합동)	12월	○ '25. 11.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합동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워크숍 실시	정상추진
○ 202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사건 협력절차 이행 지시·점검	12월	○ 선거사건 협력절차 필수 이행대상 사건 전건 협력절차 이행 완료	정상추진
○ KICS 집회시위 카드 신설 추진	12월	○ 집회 사건의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 KICS 「집회카드」 개발 완료	정상추진
○ 각 테마별 단속 결과 등 현황 분석 및 개선점 검토	12월	○ 부패비리,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대통령 선거사건 단속 등 결과통계 분석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 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 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2-2. 추진계획 준수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 과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 류 노력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2	○ 성과지표 중 수사완결도 지표의 측정 산식 및 목표달성도 수정 검토	○ '26년 자체평가 시행계획 작성시 성과지표 측정 산식 등 개선 검토('26. 3.)
	○ 지연, 미비되었던 추진 계획 점검 및 보완사항 검토	○ 25년 지연, 미비된 추진 계획 점검 및 사유 검토하여 '26년 자체평가 시행계획 반영('26. 3.)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수사역량 강화>

- **(전문성 강화)** 과·팀장의 지휘역량 검증을 내실화하고 역량기반 인사기준 확립, 신입교육 개선 등을 통해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 － <인사기준 확립> △과·팀장 역량평가 지표개선, 다면평가 확대(6월) △변호사 경채자 임용·보임 개선(7월) △수사부서 보임기준 개선(8월) 등 시행
 - ▶(과팀장평가) △다면평가 횟수·대상 확대 △평가지표 신설 △하위자 교육 의무화 등
 - ▶(변호사경채) △권역 통폐합(6→4) △치안수요 多권역 집중선발 △필수 현장보직 확대
 - ▶(보 임 기 준) △책임·전문수사관·변호사 자격자 보임 우대 △후순위자 선발 유연화 등
 - － <신입교육 개선> 수사역량을 갖춘 신입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 단계별 확대* 추진 및 인프라 구축('26년 교육운영비 +6.1억 확보)
 - * '25년 2주(시도청) → '26년 6주(+수사연수원 4주) → '27년 이후 2개월 이상 교육(인력 추가 확보 병행)
-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관들이 본연의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구분	'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수사 공정성 확보	▶(범죄정보 처리시 공정성 제고) 범죄정보에 대해 입건전조사 개시 시 관서장에게 보고 하도록 절차 개선(8월) ▶(재배당 시 승인절차 마련)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개선(10월)
수사 업무 효율화	▶(국민신문고 개선) 내용불충분사안 비사건화·경범죄처벌법소관 조정 → 기타 사건처리에 수사력 집중(1월) ▶(즉결심판·훈방 활성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부서를 국가 수사본부로 이관, 즉심·훈방 절차 간소화(2월) ▶(수사실무지침 개정) '25. 10월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에 따라 수사절차 관련 종합 지침 개정(10월) ▶(외국인 수배자 검거 효율화) 폴리폰으로 외국인을 조회하는 경우 대상자의 사진까지 현출되도록 기능 개선(12월)

- **(인프라 확충)** 전문수사 강화 및 현장수사여건 개선을 위한 수사인력 증원, 현장수사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 확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사건처리기간은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이 개선 중이나,
 - － 최근 검찰개혁 등 수사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높아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초국가·온라인화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능 대응으로 한계, 경찰내 타기능·타부처와 협업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3년 11월 반려 폐지 이후 사건접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현장 수사관의 업무부담이 증대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인력 증원 필요
 - － '25. 12월 자체 재배치·수시직제요구를 통해 1,300여명의 수사인력을 증원하였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 증원 추진
- 이와 함께, 부패·경제사범, 특별법 위반 등 위법성 판단에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의 영역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 '26년에는 변호사 경력채용 인원을 확대(30명→40명)하는 등 법률 전문가 수급을 확대하고 내부 법률전문가 양성 방안도 검토 추진
- 수사국·국제치안협력·홍보 등 타 국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초국가범죄 종합대응단'을 설치하여 초국가범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초국가범죄 종합대응단 설치) 수사·국제치안협력·홍보 등 경찰청 각 기능을 총괄,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및 추가 피해 예방 등 대응체계 구축('25.11.3.)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범정부 합동기구, '25.12.29.~) 출범

- － 기획조정관(조직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재배치 등 인력 증원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 － 생활안전교통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주체를 생안에서 수사기획으로 이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 － 앞으로도 국정원·외교부 등 타부처 및 경찰청 내 타 국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음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제5회 전임수사관 선발 계획 수립	11월	- '25년 전임수사관 선발계획 수립(11.10) - '25년 전임수사관 3.952명 추가선발(12.19.)	완료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11월	- 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10.24)	완료
2025년 관서장 추천 수사경과 선발계획 수립·실시	12월	- '25년 관서장 추천 수사경과 선발 계획수립 (11.20), 전국 890명 수사경과 선발 완료	완료
하반기 장기 미처리사건 점검	12월	- 장기 미처리 요구·요청 사건 특별점검 시행, 개선 사항 발굴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실시	완료
장기사건 현황 통계 분석	12월	- '22~25년 장기사건 통계 분석 실시, 시·도청/경찰서/수사기능별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완료
변협, 지방변회, 법조인 등 대상 우수 추진 정책 등 홍보	12월	- 법조계·학계 대상 간담회 개최(12회)	완료
특별검거 보상금 심사·지급(3차)	12월	- 7건/8명 심사(11.18)·지급(12.1, 2억5800만원) - 3건/3명 심사(12.18)·지급(12.18, 6500만원)	완료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545	▶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연계성이 구체적이며, 지표 설계가 적절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182	▶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수사시스템 구축 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인력 조정, 보강 등 노력 매우 우수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2.955	▶ 추진계획 모두 준수 ▶ 국수본 이외의 경찰청의 다른 국관(생안, 교통 등)과의 협업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364	▶ 기능 및 현장과의 협업 성과 매우 우수함. '끝장 토론회' 등 창의적,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인정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545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모두 우수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455	▶ 그간의 방식을 넘어 경찰의 수사역량이 한층 높아질 필요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455	▶ 경찰청 내 다른 국관의 의견 수렴도 필요해보이며, 대외 의견수렴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91	▶ 보도자료 이외 SNS 등 신규 플랫폼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4	○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	○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현장 배치 완료('26년 상반기)
		○ 법률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 확대(30명 → 40명, '26년 상반기)
	○ 타 국관 협력 체계 구축	○ 초국가범죄, 인력증원 등 주요 현안 처리시 타 국관과의 원만한 협력하에 진행(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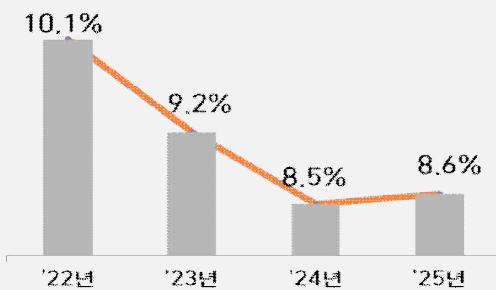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사의 완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수사서류의 완전전자화, 수사지원AI 구축 등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노력으로, 관련 지표 개선

- ① (결정 대비 검사 요구·요청 비율 향상) 수사완결성 제고 노력에 따른 오류 없는 수사로 국민 만족도 향상, 수사신뢰도 기여

전체 결정 대비 검사 요구·요청 비율



■ '22년 대비 요구·요청 비율 1.5%p 감소

- ①중요사건 검토 ②알기쉬운 수사 교육자료 작성 배포 ③수사지식 공유 플랫폼 활성화 ④보완수사요구 유형별 분석 등 노력

※ '25. 12월 형사절차전자화 전국 시행으로 전자화 관련 보완수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율 상승하였으나, '25. 11월까지 8.4% 유지

- ② (사건 처리기간 감소) 사건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 하고, 안전한 사회 기여

[사건 처리기간]

	'22년	'23년	'24년	'25년
처리기간	67.7일	63일	56.2일	54.5일
증감	-	-4.7일	-6.8일	-1.7일

■ '22년 대비 사건처리 기간 13.2일 감소

- ③ (검사 요구·요청 처리기간 및 보유건수 감소) 요구·요청 사건의 신속 처리로 검찰과의 협력체계 강화하여 국가 전체 수사역량 향상

[요구요청 기한내 처리비율, 처리 기간]

	3개월 내 처리비율	처리 기간
'23년	57.2%	110.1일
'24년	69%	83.6일
'25년	77.8%	71.2일

■ '23년 대비 3개월 내 처리비율 19.9%p 상승 요구요청 처리기간 38.9일 감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 성과)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언론, 학계 등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찰수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 (원인 분석) 그간 성과 등 각종 업무 평가시 수사의 신속성과 사건 처리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사의 완결성에 대한 평가·포상 미흡
 - － 경찰 수사 사건을 송치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일차적으로 완결성 있는 수사 후 검찰 사건 송치하고, 송치한 사건은 법원의 최종 처분 시까지 검찰과 적극 협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반영) △팀장 지휘역량 평가 △특진 평가 △치안종합성과 평가에 수사완결성 지표 및 노력도 대폭 반영
 - － 송치 사건에 대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경찰 결정과 검찰 결정이 상이한 사건을 수사팀에 환류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 실시
 - ※ 검찰 처분 외에도 법원의 판결까지 점차 확대
- (정책 반영) △팀장 지휘역량 평가 △특진 평가 △치안종합성과 평가에 수사완결성 지표 및 노력도 대폭 반영
- (지도·점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지적 위주 점검 → 수사의 완결성 강화 목적 관서별 컨설팅 중심 지도점검
- (수사지원AI 고도화 추진)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지원AI」 기능 신설·고도화

<'26년 과제(案)>

▲신종범죄 탐지 및 조기경보 ▲결정서 및 수사 결과통지서 작성 ▲피산·진술조서 질문 추천 ▲범죄일람표·타임테이블 작성 ▲비정형 멀티미디어(이미지(OCR), 음성) 수사자료 인식·추출 기능 구축 ▲경찰 수사환류체계를 통한 학습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과제 구축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KICS 관리자 교육 및 현장점검	11월	○ KICS 관리자 교육(9. 4. ~ 9. 12.), 현장점검(8. 18. ~ 9. 12.) 실시	정상 추진
○ 수사 핵심 쟁점 교육자료 발간	11월	○ 오픈톡 사례, 요구요청 사례 등 종합하여 KICS 게시판 공지 완료(11. 19.)	정상 추진
○ 요구·요청 사건 점검(2차)	12월	○ 수사인권담당관실 협업하여 점검 완료(11. 25.)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409	▶ 정책과제의 연계성과 지표설계의 적정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55	▶ 중요사건 검토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여 수사의 완결성이 제고되었다고 보기 곤란해 보임. 좀 더 발전적인 시스템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3.000	▶ 없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2.927	▶ 업무 추진의 협업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대외 협력 관련 사항이 부족함 ▶ 생성형AI로 인한 환각정보 등 논란 문제 발생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000	▶ 절대값 중심의 목표치는 조정 필요 ▶ 생성형AI로 인한 환각정보 등 논란 문제 발생 ▶ 수사심의신청 조치 비율, 형사사법포털 조회 건수 비율에 대한 목표치는 소극적으로 설정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500	▶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 수사권 확보에 따른 변수 관리에 만전이 필요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2.727	▶ 대외적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다소 미흡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182	▶ 정책홍보 노력이 다소 미흡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4	○ 홍보 강화	○ 수사점검, 수사지원AI 고도화 등 언론홍보(수시)
	○ 의견 수렴 및 환류 노력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자문 활성화(수시) ○ 시도청, 경찰서 담당자 워크숍, 화상회의 실시(수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적법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체계 구축

- － (도구 보급) 현장에서 직접 증거물 분석·선별이 가능한 분석관·수사관용 증거분석 도구·장비 보급

▶ (현장용 분석장비) 현장에서 증거분석·압수 완료하기 위한 「현장용 증거분석 프로그램(5종, 82식)」, 「현장분석용 노트북 및 장비키트(14세트)」 보급하는 등 현장 분석 인프라 확충
 ※ ▲현장용 증거분석 프로그램(5월) ▲현장분석용 노트북 및 장비키트(10월) 보급완료
 ▶ (수사관용 프로그램) 현장 수사관용 모바일 증거분석 프로그램 보급(8월)
 ▶ (복제·봉인용품) 증거의 연계보관성 확보를 위한 봉인용품 및 현장복제 보급(10월)

- － (교육 신설) 「현장수사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기초·심화과정」을 수사연수원에 신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디지털증거 대응 역량 제고

※ '25년 內 기초 교육과정 82명, 심화 교육과정 24명 등 총 106명 교육 수료

- － (규칙·매뉴얼 개정)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10월}」, 「현장경찰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매뉴얼^{8월}」 개정

○ 최신 IT 기술에 대응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성 강화

- － (분석기법 연구) 他기관 협업 및 자체 R&D 통한 기법·기술 개발

▶ (물리복구) 아이폰 전용 물리복구 장비 및 기법개발, '25년 2월 경찰청 명의 특허 등록 완료
 ▶ (차세대 운송수단) 중장기 로드맵 수립 △1차 자동차포렌식(EDR 등) 분석체계 구축완료 △2차 드론포렌식 분석체계 구축 및 자동차포렌식 장비 고도화 △3차 자율주행차 장비 도입 추진
 ▶ (PC메신저 뷰어 프로그램) 'PC메신저 분석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분석 결과에 대해 사용자 정보 및 대화내용 등을 빠르게 탐색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배포
 ▶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교차분석 장비(안랩 TIP)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으로 분석기능 강화하여, 암호화·난독화 된 악성앱 분석 성공률 98.4%까지 제고 → 총 4,873건 분석결과 도출

- － (장비보급 확대) 최신 사용의 디지털증거 분석장비 적기적소 보급

▶ (필수장비 보급) 디지털증거 필수장비(워크스테이션 17대, 디스크 복제장비 37대) 노후교체, 증거분석 프로그램(S/W) ①디스크(3종, 522식) ②모바일(3종, 180식) ③영상분석 프로그램(2종, 52식) 보급
 ※ ▲디스크 S/W(6월), ▲모바일 S/W(8월), ▲워크스테이션·복제장비(7월), 영상 S/W(11월) 보급완료

○ 디지털포렌식 역량 고도화를 통한 전문적인 증거확보 기반 마련

- (교육 설계) 신입부터 전문 분석관까지 「기초→필수→전문화→자격취득」으로 이어지는 체계적·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 (내부교육) 수사연수원과 협업, 디지털포렌식 기초·전문(디스크·모바일·영상포렌식) 과정 설계(4개, 80명)
- ▶ (전문화 위탁교육)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교육 시행계획' 수립, 연내 10개 과정 210명 수료
- ▶ (국외교육) AI 컨퍼런스(5월, 캐나다), SANS(6월, 싱가포르), National SOC·ICDDF(6월, 영국), DFRWS(7월, 미국), 인터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그룹(DFEG)'(7월, 홍콩), 블랙햇 USA(8월, 미국) 등 6개 과정 총 19명 참석
- ▶ (자격취득 지원) 윈도우포렌식(MCFE), 해킹포렌식(CHFI) 등 디지털포렌식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36명)

- (지식공유) 디지털포렌식연구회* 및 분석기법 지식 공유시스템 활성화

* '21. 4월 신설, 現 회원 196명으로 경찰청 최우수 학습모임 선정('22, '23, '25년)

- ▶ (연구발표회) '25년 디지털포렌식 연구발표회 10회 실시, 18개 주제로 발표·토론 진행(644명 참여)
- ▶ (포렌식위키) 분석관이 발굴한 최신 분석기법을 단일 시스템에서 검색·갱신·공유할 수 있는 「포렌식 위키피디아」를 개발·운영 중 ※ 전년 대비 '25년 기준 △ 가입자 42명 ↑ (269→311명)
△ 작성건수 76건 ↑ (514→590), △ 페이지수 754 페이지 ↑ (3567→4321)

- (현장질의 대응 확대) ▲ 최신판례 등 분석한 카드뉴스 게시(총 8편)
▲ 현장 경찰관 질의 대응을 위한 '실무 수습 변호사' 배치('25. 6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협력 강화) 경찰 내부 및 他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정책 기획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력 강화) △ 他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대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회 확대
-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분석팀」 등 신설, 현장부서에 대한 지원 확대
- 디지털포렌식연구회 등 확대 개편, 대내외 포렌식 기능 간 협력 강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11월	-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완료(11.28.)	정상추진
○ 디지털포렌식 4기 자문단 4분기 간담회	12월	-자문단 4분기 간담회(11.20.)	정상추진
○ 학회 동계 학술대회 및 챌린지대회	12월	-동계 학술대회 및 챌린지대회(11.10.)	정상추진
○ 무관정보 자동제외 시스템 개발 고도화	12월	-시스템 고도화 완료(12.15.)	정상추진
○ 차세대 운송수단 분석도구 도입	12월	-운송수단 분석장비 등 도입(12. 15.)	정상추진
○ 하드웨어 기반 암호기술(TPM) 해독 연구 및 정보은닉 앱 암호해제 연구	12월	-하드웨어 기반 암호기술(TPM) 해독 등 연구보고(12.30.)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점수 확인 불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	-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	-
2-2. 추진계획 준수도	-	-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	-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	-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	-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	-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5	○ 경찰 내부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분석팀」 신설 추진('26. 3월) ○ 디지털포렌식 연구회 등 확대 개편('26. 6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위험·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 －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진단을 위한 VR·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도입
 - ※ '25년 예산 총 20.9억원, 실차 1개, VR 19개 시험장 등 배치
 - ※ 고령운전자가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 의무교육(2시간)을 대체하도록 하여 참여 유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5. 12. 2.)
 - － (운전면허 자진반납) 단순 면허 소지자보다 상시 운전하는 고령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개편 추진('26년 예산 33억원 확보)
 - ※ <현행> 일률적으로 10만원 교부 → <개선> 단순 소지자 10만원, 운전사실 증명 시 20만원으로 우대
- 국민 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속도규제 시행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대각선 횡단보도(2,455개소) 및 동시 보행신호(3,222개소) △ 교차로－횡단보도 이격(118개소)
 - － (국민 불편 해소) △ 스쿨존 시간제(70개소) △ 도시부 탄력적 속도 제한(162개소) 등을 확대
-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 대응
 - － 초보운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운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 개선
 - ※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차종으로 △보다 저렴하게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25. 12. 2.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위험·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 － 운전이 위험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받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위험·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 단순 면허 소지자보다 상시 운전하는 고령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개편 추진('26년 예산 33억원 확보)

※ <현행> 일률적으로 10만원 교부 → <개선> 단순 소지자 10만원, 운전사실 증명 시 20만원으로 우대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2차 사업 시행	12월	○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2차 사업 지자체 선정 완료(6월)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4	▶ 과제가 국정과제 '주민 밀착형 교통안전 체계고도화'와 연계 되고 대표적인 과제로 구성됨. ▶ 정책과제의 연계성이 높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7	▶ 도로교통법 관리 주무 부서로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였고,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보행자 사망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행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9	▶ VR/실차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이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 ▶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추진함. 특히 고령운전자 문제가 심각한데 적극적으로 대응 ▶ 도로교통 주무기관으로서 경찰청이 주도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업 추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7	▶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목표치는 최근 사망추이와 고령운전자 비율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2	▶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 시행 등으로 교통환경을 안전하게 개선 ▶ 고령운전자·보행자 등 교통약자 사고 감소,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신설, 속도관리 고도화 등 일정 수준의 성과 발생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5	▶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대내외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 ▶ 보도자료, 캠페인,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법령 개정사항과 안전대책 홍보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6	▶ 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6	○ 적극적인 대외 정책 홍보 필요	○ 분기별 홍보 추진계획 수립 후 △보도자료 △ 캠페인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추진

[1] 평가결과 (1~2페이지)

□ 주요성과

- 사고 취약요인 중심 안전활동으로 음주운전·고령보행자 등 주요 위험 유형 사망자 감소
 - － 대국민 홍보 및 지속적 단속을 병행한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 전년 대비 28.3% 감소(잠정통계치)
 - － 화물차,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각각 1.5%, 1.6% 감소
- 첨단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 기반 마련
 - － 실시간 신호정보 시스템 확대하여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가 신호를 인식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 자율주행 다부처 R&D 사업 성과물의 경찰업무 연계 강화를 통해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경찰의 교통안전 관리 업무역량 향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전년대비 교통사고 및 부상자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 사망자가 1.1% 증가(잠정통계치)
 - －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에 기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10.1%)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에 대비, 고령자 대상 교육·홍보 등 안전정책 전개
 - － 페달오조작 장치 보급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정책 강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준수 여부 확인되도록 간략히 기재)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시행	11월	○ '25~'26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계획 수립·시행 ※ 경찰청 보도자료 배포(11.28. 조건)	정상추진
○ 교통사고 분석 및 전망 예측 자료 시·도경찰청 공유	12월	○ 25년 3분기 교통사고 현황 분석(10월) ○ 25년 교통사고 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11월)	정상추진
○ 보행신호시간 개선 신호기 업무편람 개정	12월	○ 신호기 업무편람 개정 및 배포 완료(5월)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페이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2-2. 추진계획 준수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7	○ 정책과제 지표 개선·보완	○ 신규 지표 개발(3월)
	○ 고령자 대상 안전정책 추진	○ 고령자 대상 교육·홍보활동 전개(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췁 단위 안보조직을 광역으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旣 시행 중인 인력운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책임안보수사 체계 구축**
 - ▶ **(광역안보체계 구축)** '24년 인력조정에 따른 경찰서 인원 감소로 새로운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광역시급 10개청을 광역안보체계로 개편, △팀장(경정) 정원 16명 등 인력 279명 이관(경찰서→시도청) △중심거점서 사무공간 등 예산 3억 7천만원 확보 △업무용 차량 24대 확보
 - ⇒ **(성과)** △1인당 신변보호 인원 21.9명 → 20.8명 감소(-3.7%) △서별 탈북민보호인원 편차 감소 △안보상황 발생 건수가 70% 증가했음에도 신속·유연한 대비로 국민안전 확보
 - ▶ **(제도 재정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인사운영·자격체계 전면 재검토 ⇒ 「안보경찰 조직개편 및 인적역량 강화방안」 수립 △안보수사팀장 역량평가 △대·팀장 자격제도 및 안보수사경과 제도 개선 △사·도청 정기 사건평가 도입 △안보수사부서 장기근무 방안 수립 등
 - ⇒ **(성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사범 검거 : '24년 33명 → '25년 37명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

□ 미흡 원인분석

-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지표설계와 노력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정책홍보가 다소 부족
 - 안보수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책 환류 및 대국민 홍보가 어려워 높은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국민 체감도와 연결되지 않아 저조한 평가로 이어짐

※ 내·외부 평가위원 주요지적사항

▲성과 달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한 것은 인정되나,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홍보 분야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 ▲정책홍보가 대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달성되었는지 의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환류)** △국내외 안보유관기관 △타기능 △외부 주요 매체 등으로 세분화하여 대내·외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환류 실시
- **(정책홍보)** 대국민 홍보가 어려운 전통적 안보사범 외에 산업기술 유출과 방첩 수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
 - ※ SNS 등 대국민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활동 진행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유관기관(특공대) 초청 근접보안요원 모의훈련	11월	○ 근접보안요원 38명 모의훈련 실시(11.19.~11.21.)	정상추진
○ 교수요원강의역량강화과정 위탁교육	11월	○ 20명 교육 완료(12.1~5.)	정상추진
○ The Best 안보경찰 선발	12월	○ 2개팀, 개인 11명 선발 완료(12.1.)	정상추진
○ 광역안보팀 운영성과 및 전국 시행 계획 수립	12월	○ 광역안보팀 성과보고회 실시(11.19.~12.4.)	정상추진
○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유관기관 회의	12월	○ 통일부 안전지원과 정례회의 참석(12.10.)	정상추진
○ 경찰책임 취약지 판단서 발간계획 수립	12월	○ 취약지 판단서 발간 계획 수립·배포(12.22.)	정상추진
○ 전임 안보수사관 선발(추가)	12월	○ 전임수사관 30명 선발 완료(12.30.)	정상추진
○ 안보경찰 직무교육훈련 시행	상시	○ 직무교육 시행계획 하달(1.31)	정상추진
○ 광역안보팀 시행 관련 직제 개정	상시	○ 부령·훈령 개정 완료(5.27)	정상추진
○ (상황발생시)합동정보조사 분석대응	상시	○ 합동정보조사로 대공혐의점 판단(818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	▶ 안보역량 강화 및 보안수사권 이전에 따른 협업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제선정의 적절성 인정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318	▶ 4개의 과제에 대한 달성 노력 인정
2-2. 추진계획 준수도	2.909	▶ 일부 일정 연기되어 준수 미흡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091	▶ 내외부 기관과 다방면으로 협업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협업의 경우 그에 따른 성과가 확인되지 않음 적극행정 노력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182	▶ 목표치에 도달한 점이 우수 ▶ 신설지표로 과거 추세치 확인이 불가한 점은 다소 아쉽다는 언급 → 이의신청을 통해, 안보환경 변화로 업무난의도·중요도에 따라 과제 및 지표점수를 전면 재정비한 난이도 있는 성과 지표인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평균 +0.727점 상향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한 점 인정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	▶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를 다변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3.818	▶ 정책홍보노력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홍보노력"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할때, 조금 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8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지표 추가발굴	○안보수사국 자체 성과회의 개최 ('25. 2월) ○안보상황 종합적 대응체계 지속 추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안보사범 수사활동 및 역량 강화 지수([40%]) 경찰이 안보 수사 책임기관으로서 수사활동 강화를 통해 목표치 270점 대비 114.9% 초과 달성(310.4점)
 - 안보사범 특성상 밀행성으로 인해 수사 난이도가 높고, 장기수사가 필요한 안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전년대비 14.9%↑)을 통해 총 47명 검거
 - ▶ 중국에서 北 해커와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회합·통신 피의자 구속 송치('25. 5.)
 - ▶ 북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민 신상정보를 탐자수집하여 전달한 간첩 송치('25. 8.)
 - 안보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상시 법률지원 △안보수사 솔루션 회의 운영 등 현장지원 정책과 수사관 실무 현장압수수색 FTX △핵심 증거확보를 위한 해외수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12.3 비상계엄 관련 신속한 국회 대응(요구자료 400여회) 및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대응으로 내란 사태 실체 규명에 기여
- (안보사이버 대응활동 지수[30%]) 안보사이버수사 활성화 및 선제적인 피해 예방조치로 목표치 1,048점 대비 104% 초과 달성(1,090점)
 - 온라인상 단순 불법행위* 대응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고도화된 사이버공격 대응 중심으로 업무 패러다임 전환
 - * △北 찬양글 게시 △게임핵 유포 사건 △단순 악성프로그램 매매 등
 - 공공·민간 핵심인프라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국가배후 해킹사건을 다수 개척하고 침해사고 원인규명 및 보안조치·피해예방 등의 성과 도출

구 분	계	수사착수	안보사업 개척	loC지표* 수집
'24년	282	279	3건	4,488개
'25년	345	341	4건	8,110개
전년 대비	+63(22.3%↑)	+62(22.2%↑)	+1(33.3%↑)	+3,622(80.7%↑)

- △ 암호 분석 도구 연구·개발 △ 전문인력 확보 △ 교육·훈련을 통해 안보사범의 고도화된 암호·은닉 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

▶ ‘안보수사의 암호화 증거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으로 ’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 한국인 특성 반영한 AI 암호예측 모델 개발 성공, ’25년 치안 AI·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경제안보·테러·방첩 사업 실적[30%]) ’25년 36건의 방첩·대테러 안보사업 진행 ※ 방첩·대테러 사업 개척 44% 증가(25→36건)
- ’25년 19건의 방첩사범 및 36건의 테러사범 수사 진행
 - 군사시설 무단촬영 혐의 외국인에 대해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적용하여 구속(2명) 및 테러단체 가입·자금지원 혐의 외국인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등 수사
 - 법무부 협업을 통해 국내 체류 테러위험 외국인 12명 강제 퇴거 및 853명 입국금지
-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 등 방첩 법제 개선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부분 평가요소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 달성도(20점 만점에 18.97점으로 94.8% 득점) △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15점 만점에 13.95점으로 93% 득점)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5점 만점에 4.66점으로 93.2% 득점) 등 3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 목표치 산정에 있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정책환류 노력도와 산업보안 관련 협업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 △ 안보사건 관련 홍보 등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목표치 적극성) 높은 검거실적에 비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산정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26년 목표치 산정에 있어 ’25년 실적에 3년간 추세치를 반영하여 성과관리 인정기준 적극성 ‘상’에 맞춰 설정 추진
- (정책 환류 및 협업도) 효과적인 정책과제 수행 및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기존 협업기관 뿐만아니라 새로운 기관과 협업을 시도하는 등 성과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대국민 홍보가 어려운 전통적 안보사범 외에 산업기술유출사범 수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집중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대국민 경각심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SNS 등 대국민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5년 안보사이버수사팀 마일리지 평가	11월	○ '25년 안보사이버수사팀 평가 완료(11.7.)	완료
○ 사이버안보 해킹조직연구회 개최	11월	○ 11. 26.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 개최	완료
○ 하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12월	○ 시도청 대상 하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계획 수립 시행(9.17.~11.28.) 완료	완료
○ 포렌식 자격증 취득 및 포렌식 장비 등 예산 집행 결과 점검	12월	○ 포렌식 자격증 취득 예산 및 포렌식 장비 구매 사업 집행 완료(12.30.)	완료
○ 중기부 주관 중소기업 대상 범정부 설명회 참여	12월	○ 광주(4월), 부산(6월), 충청(7월), 서울(9월)에서 개최, 각 지역 시도청 산업보안협력관 참석(4회)	완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 활동 강화	○ 성과지표 설계시 검거성과 외 종합적 노력도가 반영 된 지표 필요 ○ 성과지표 측정 방법에 개선 필요	○ 검거성과 결과 중심 방식에서 수사의 과정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26년 정책과제 수립시) ○ 기존 산업기술안보수사계와 방첩테러수사계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경제안보·테러·방첩 사업실적' 하나로 묶어 성과 측정을 하였으나 각 계별 분리하여 성과지표 수립 검토 ('26년 정책과제 수립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보수집) △ ‘안보정보 전문요원’ 선발·운영(88명) △ 국내·외 첩보원천 발굴(222명) △ 안보정보 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 첩보수집비 지급기준 개선 등 고가치첩보 생산기반 마련

* '26년 안보정보의 집적·관리 및 융합·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예산 확보

- (현장지원) 이적성 분석 및 유가치 안보정보 제공 통해 현장수사 지원

- ▶ (이적성 분석) 북한원전, 대남선전·선동 문건 등 집적한 대북정보의 비교·분석 통해 이적성 문건·주장과 北 주의·주장과의 유사도 비교(분석서 5건, 25.10.~12월)
- ▶ (안보정보 생산) 다양한 안보정보 분석, 유가치정보(143건) 제공(분석서 51건, 25.1.~12월)
- 도출정보를 융합·분석, 정보분석서 생산 및 ‘정보분석 요청자 ↔ 첩보 제출자’간 연결

- (해외 협력망) 美·日 등 주요국 외에 유럽(英·佛·獨 등)·호주 등 해외망 적극 확대(12개국 18개 기관), 국가(기관)별 정보·수사 공조체계 구축

- ▶ (美 HSI·FBI 등 법집행기관) HSI는 출입국·범죄경력 등 사실확인 중심 대공사건 수사공조, FBI는 테러 및 해킹 등 사이버 수사·정보 공조 20건
- ▶ (日 경찰청) 사실확인 외 北 동향 등 정·첩보 공유, 수사 24건·정보 11건 공조
- ▶ (OSI·USFK 등 美 군기관) 외국인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美측 위험성 평가 및 군사기밀 여부 등 대공·방첩 사안 관련 수사공조 7건
- ▶ (美·英·佛 등 안보정보기관) 국가(기관)별 정보처리 프로토콜 합의 및 체계 마련('25. 5월), 北 해킹그룹의 사이버위협 등 역내 안보위협 정·첩보 공유 7건

- (협력 세미나) 경찰청 주관 안보분야 최초 국제세미나로 국내·외 43개 기관 110명 참석, ‘글로벌 협력의 장’ 마련 성과(25.11월)

- (해외역량) 안보수사관 해외수사 역량육성을 위해 해외기관·국제기구와 협력, 실무 중심 신규 교육 과정 발굴·운영(4개 과정 28명)

- ▶ (美 OSI^{신규}) 안보수사 분야 추적·감시 관련 전문성 향상 교육('25.6월, 10명)
- ▶ (美 DHS C3) 사이버침해사고 등 사이버안보 분야 위탁교육('25.9월, 6명)
- ▶ (日 니혼대^{신규}) 韓日 안보협력 연구·반국가단체 조사 등 위탁교육('25.8월~'26.2월, 2명)
- ▶ (UNODC^{신규}) 테러자금추적·포렌식 기법·국제테러 동향 및 대응방안 교육('25.11월, 10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지표설계 및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평가, 다만, 보안성을 위해 일부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점은 보완 요청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증빙 대체방안 마련 및 과 특성상 정량화가 용이하지 않더라도 정량·정성을 포함한 지표개선 노력
- ※ 2·3급비밀, 대외비 등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업무설명회 등 추가설명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 분기별 전 계획 정상추진

추진계획	일정	추진실적	준수
○ 안보수사 유관기관 협력 세미나 개최	10월	○ 개최 계획 수립(10월) / 개최(11월)	정상추진
○ '안보첩보 심의위원회' 점검(하반기)	11월	○ 정보예산 감사와 병행 점검(6.18.~9.19.)	정상추진
○ 하반기 첩보수집 우수 유공 자체 포상	12월	○ 하반기 안보첩보 분야 포상(12.16.)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등	8.455	▶ 안보이슈에 대한 선제적 관리 우수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136	▶ 대상별 적정한 계획을 수립, 추진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계획대로 추진 완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등	13.182	▶ 국내외를 넘나드는 협업역량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7.682	▶ 신설지표로 적극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언급 → 이의신청을 통해, 시기별 달성해야 할 과업과 장기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과업 등 모든 과제가 1회성이 아닌,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성과지표인 점을 설명, +0.591점 상향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091	▶ 정책효과성이 명확하고 안보위협 대응에 효과적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2.736	▶ 대내외 정책환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을 통해, 교육과정 신설(대내)과 해외기관 협력(대외) 등 충분히 설명, +0.191점 상향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0	▶ 업무특성상 홍보실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 → 이의신청을 통해, 보안성 및 기밀성을 담보하면서도 '안보 정보분석 신청방법' 등 대공 특화 정책홍보 피력, +0.445점 상향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0	○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지표 추가 발굴	○ 안보범죄분석과 자체 성과회의 개최('26.1월)
	○ 안보정보 분석체계 고도화	○ 안보첩보시스템 성능 고도화 사업('26.하반기)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KT부정결제·알뜰폰 부정개통 사건 등 대국민 다중피해 해킹 사건 신속 해결, 피해 최소화

- (검거율 초과달성 : 체감안전도▲) 전문인력풀 관리 및 면밀한 수사 지휘로 국가배후 사이버공격 사건수사 및 가상자산 추적 등 고난도 사이버테러사건 검거율(23.6%)을 견인

분류	'24년 기준	'25년 기준	전년동기 대비	검거율
정보통신망 침입범죄	4,526건 발생 985건 검거	4,765건 발생 1,265명 검거	발생건수 5.2% ▲ 검거인원 28.4% ▲	26.5% 4.7% ▲

- (랜섬웨어 수사 체계 마련) ‘서울보증보험’, ‘예스24’ 등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다수 발생 → 랜섬웨어 수사 강화 대책 수립·추진

② 북한·발 사이버테러 사건 규명,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사이버테러 수사 리더십 발휘

- (북한·발 사이버테러사건 규명)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를 통해 수사 기법 개발하고, 수사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이버테러대응 역량 강화 → 북한·발 사이버테러 다수 규명

- ▶ (북한·발 방첩사 사칭 악성메일 유포사건) ‘계엄문건 공개’ 제목의 전자우편은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 정보 탈취 목적임을 확인하고, 계정 탈취 피해 사실 등 언론보도(‘25. 4월 /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
- ▶ (북한·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업비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보관 중인 5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의 공격주체가 북한 소행임을 규명, 언론보도 (‘25. 1월 /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

- (韓·美·日 사이버안보 협의체 주도) 한·미·일 등 우방국 수사기관과 사이버위협 억지 역량 확보를 위한 공동협의체 참여 및 북한발 사이버테러사건 수사 주도

③ 가상자산 수사 총괄 컨트롤 타워 체계 확립, 가상자산 추적 분야 수사기관 선도

- (가상자산 수사·관리 표준모델 확립) 가상자산 압수·보관 절차의 위험을 경감하고 현장수사관이 안전·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가상자산 위탁보관 제도 도입 및 압수규칙·매뉴얼 작성 추진 중
- (가상자산 원천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 해커가 비트코인 전송시 IP를 직접 추적하는 비트코인 추적시스템 고도화('25. 12月 限) 및 이더리움 추적원천 기술 개발 완료('24. 12月)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이나, 보수적인 성과 목표치 설정, 홍보활동 미흡, 의견 수렴 과정 부족 등이 아쉽다는 평이 있었음
 - (내부평가) 목표 달성도를 고려할때 다소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예방·홍보활동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외부평가) 대내·외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전적 목표치 설정) 금년 성과 달성도(검거율 4.7↑, 시스템 활용도 20% 초과)와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26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예방 노력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지수 설정 추진
- (적극적 정책 환류)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특별단속, 시도청 테러수사대 모의훈련 등 정책 추진 시 시도청 의견 청취 및 환류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 실적	준수 여부
○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평가 및 포상	11월	○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범죄 집중단속 결과 분석 보고('25. 11. 20.)	정상추진
○ 다크웹 추적시스템 구축	12월	○ 다크웹 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 검사 결과 보고('25. 12. 23.)	정상추진
○ 가상자산 교차 분석 프로그램 구매	12월	○ 가상자산 교차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검사 결과 보고('25. 12. 23.)	정상추진
○ 악성메일 분석 시스템 구축	12월	○ 악성메일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검사 결과 보고('25. 11. 17.)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5 / 10	▶ (대표성) SKT해킹·KT부정결제·롯데카드 해킹사건 등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깊은 통신사·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 사건이 급증, 이로부터 안전한 사이버안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수사기관으로써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이 높은 정책과제임 ▶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과제와 성과평가 지표 설계 연계를 위한 노력 적정 반영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375 / 7	▶ (노력도) 해킹 등 집중단속, 사이버테러수사 예산 증액, 가상자산·다크웹 등 첨단기술 기반 추적수사인프라 고도화 ▶ (평정근거 및 제언) 시급한 내부적·기술적 장애요인(가상 자산 법적 절차 미비)을 TF 구성 및 제도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매우 우수하게 평가함									
2-1-2. 추진계획 준수도	2.833 / 3	▶ (준수도) 추진일정에 따라 기한 내 모두 완료 ▶ (평정근거) 추진일정 공문 근거 자료 일부 미비									
2-2. 업무 추진과정의 적극 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13.583 / 15	▶ (협업도 및 노력도) 해외 법집행기관과 사이버안보 실무 회의의 참여 및 국내 사이버테러 관계기관간 위협정보 공유 ▶ (평정근거 및 제언) 신종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함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19.667 / 20	▶ 전 성과 지표 초과 달성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율(60%)</td><td>22.3</td><td>검거율 실적 23.6(1.3% 초과 달성) ※ 발생 3,541건 / 검거 835건</td></tr> <tr> <td>사이버수사지원 시스템 활용도(40%)</td><td>100</td><td>가상자산 분석 시스템 19,130건,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시스템 2,696건으로 실적 20% 초과 달성</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율(60%)	22.3	검거율 실적 23.6(1.3% 초과 달성) ※ 발생 3,541건 / 검거 835건	사이버수사지원 시스템 활용도(40%)	100	가상자산 분석 시스템 19,130건,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시스템 2,696건으로 실적 20% 초과 달성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율(60%)	22.3	검거율 실적 23.6(1.3% 초과 달성) ※ 발생 3,541건 / 검거 835건									
사이버수사지원 시스템 활용도(40%)	100	가상자산 분석 시스템 19,130건,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시스템 2,696건으로 실적 20% 초과 달성									
3-2.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667 / 25	▶ (효과성) KT기지국 해킹·알뜰폰 불법개통 등 신종 사이버 테러공격 사건에서도 사이버테러수사의 경쟁력을 입증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향상 ▶ (평정근거 및 제언) 북한발 사이버테러규명, NATO 훈련 1위 달성 등 성과가 탁월하며, 국내 최초 가상자산 위탁 보관 제도 도입 추진 등도 높게 평가함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3.583 / 15	▶ (환류 노력도) 가상자산 수사 사례 및 기법 개발 공유하고 각종 중요사건 발생시 수사관 지원 및 법률 검토 등 지원 ▶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수립을 위한 TF 구성, 전문가 회의 (11회), 현장 애로사항 수렴(사건 지도) 등 대내외 의견수렴 노력이 매우 활발함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5 / 5	▶ (정책홍보) 관계기관 합동,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수립 추진, 북한발 해킹 사건 대국민 피해주의 당부 보도자료 배포 등 ▶ (평정근거 및 제언) 통신사 해킹과 같은 대규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 대응 및 검거를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대국민 홍보하는 것이 중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1	○ 범죄검거와 함께 예방 또는 피해회복 관련 성과도 개발	○ '26년 정책과제에는 금년도 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피해회복과 범죄 예방 내용이 반영된 검거지수 도입을 검토하여 도전적 목표치 설정 예정('26. 3월)
	○ 사이버테러대응과 정책 추진 시, 내외부 의견 적극 수렴, 환류 실시	○ 특별단속 평가, 사이버테러초동대응 모의훈련 등 각종 정책 추진 시 시도청 의견 적극 반영(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재난·인파관리 분야]

- (인파관리) 도로·광장·공원 인파재난 주관기관 **행안부 공동**으로서
 △ 위기관리 매뉴얼 완비* △ 인파담당자 교육·합동훈련 등 실시
 * △ 위기경보 발령 △ 기관간 임무·역할 구분 등 규정 ⇨ 표준(1월)·실무(4월)·행동(7월) 제정
- 행안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주요 다중운집행사 대상 관계기관
 점검회의·사전 현장 합동점검 등 실시, 안전관리 총력 지원
 ⇨ 4,553건 239,029명 배치(전년 대비 666건<17.1%>·17,406명<7.9%>↑)
- (재난관리) △ 지역별 맞춤형 재난전문가 초빙교육(23회)* 등 교육
 (535회) △ 관계기관 합동훈련 중심 재난대비훈련(1,851회) 등 실시
 * △ 풍수해(부산·제주) △ 산불(강원·대전) △ 산사태(세종·충남) △ 화학사고(경기北·전북) 등
- △ 여객기사고 △ 대형산불 △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총력 대응
 ⇨ 2,455건 80,849명 지원(전년 대비 1,486건<153.4%>·39,936명<97.6%>↑)
- (사기진작) △ 재난업무 담당자 인력 증원(본청 3명) △ 재난업무
 수당 신설(600여명 대상, 월8만원) 등 사기진작책 추진

⇨ 각종 정부평가에서 경찰의 노력을 인정, 우수한 성과 거양

- (재난관리평가) 중앙부처(30개 기관) 분야 '2위(총리표창)' 및 2년 연속 '우수' ⇨ 역대 최고
- (긴급구조지원기관평가) 중앙단위(27개 중앙부처·공공기관) 분야 '3위'
- (국가핵심기반평가) 정부중요시설(6개 기관) 분야 '우수'

[대테러·작전 분야]

- (인프라 확충) '26년 18억 3,700만원 증액(총 357억 4,200만원 / 전년
 대비 5.4%↑)된 가운데, '울산특공대(임시청사)' 신축 기금 반영(248억원)
- △ 안티드론통합차량 △ 대테러훈련시뮬레이터 △ 화학물질·가스
 분석기 등 첨단 대테러장비 구매·활용(36종 149억원)

- (대응체계 고도화) △ ^{본청}테러대책본부훈련(9.18.) △ ^{시도청}현장지휘본부 훈련(35회) 주관 등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으로서 관계기관 통합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제고
 - － △충경^{'24.~}·경무관^{'25.~} 대상 ‘대테러 초동조치’ 교육(9회) △ 시도청·경찰서 대상 교육(593회 192,026명)·훈련(932회 51,779명) △ 국가대테러부대 연합훈련(3회) 등 테러대응역량 고도화
- (드론 테러 대비) △ 드론테러 공동대응 협의체(36회) △ 유관기관 합동훈련 △ 안티드론장비 운용 등 예방·대응체계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선진사례 도입·AI 기반 위험예측 등 혁신적 대책 마련’·‘시민단체·시설관리자 등 민간분야 협업 강화’ 등의 제언이 있었음
- 대테러·재난관리는 쏠 기관의 종합적·총력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경찰 단독이 아닌 국정원·대테러센터·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정책 수립·제도 개선 등을 추진중임
- 다만, 기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대테러 활동의 특성상 정보기관 등 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과의 협업은 한계가 존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보·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대테러·재난 관리활동에서의 첨단기술 도입 등 거시적 정책 수립 추진
- 보안의 테두리 내에서 민간 대상 대테러정책·활동사항 등을 적극 홍보,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제고 도모
 - ※ △주요인사 대상 테러 위협 △백화점·학교 등 불특정다수인 대상 폭파 협박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경찰의 예방·대응 활동을 적극 부각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11월	○ 계획 수립·실시(11.20.)	정상추진
○READY코리아 훈련 참여	12월	○ 행안부·문체부·부산시 등 참여, 체육관 인파사고 상황 훈련 실시(9.24. 조기실시)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227	▶ 대테러·재난관리는 국정과제 및 경찰청 핵심정책과제에 포함될 만큼 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로, 이와 연계하여 성과지표가 적절히 수립·시행되었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5	▶ 정부업무평가 우수 성과 달성 등 경찰의 노력이 돋보임 ▶ 선진사례 도입, AI 기반 위험예측 등 혁신적 대책 마련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모든 계획 수립·결과 창출이 일정에 맞게 이루어짐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4.045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우수. 특히 美 에너지부 협업을 통한 19억원 상당 장비 무상 도입은 예산 절감의 모범 사례 ▶ 시민단체·시설관리자 등 민간분야 협업 강화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136	▶ 다양한 세부 성과지표에 대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에도 빠짐없이 초과 달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 획득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818	▶ 대테러·재난관리 분야에 있어 정책수혜자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경찰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효과가 인정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4.318	▶ 설문·협의체 등을 통한 대내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제도개선, 정책과제 수행성과 등이 돋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5	▶ 대테러 훈련, 재난 현장 인명 구조, 인파 안전관리 노력 등 현장 경찰의 활약상이 적절히 홍보된 것으로 인정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2	○ 대테러·재난 분야 선진사례·첨단기술 도입 등 대책 고도화	○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연중)
	○ 대테러 분야 민간 협력 강화 및 대국민 수용도 제고	○ 테러협박 신고 대응 등 경찰의 대테러 활동사항 적극 홍보(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탄핵 심판, 조기 대선 상황 속 경호대상자에 대한 수많은 위협 등 유례없이 어려운 경호환경과 다수의 국가행사에도 한 건의 위해 사고 없이 국내·외 주요인사 완벽 경호
 - － (국내·외 주요인사) △ 대통령, 국회의장 등 4부요인 △ 제21대 대선후보자 △ 헌법재판관 △ 日 총리 등 국·외빈 등 안전 확보
 - － (국가 중요 행사) △ APEC 정상회의 △ 대통령 취임식 △ 광복절 경축식 등 국가 중요행사 안전확보로 치안강국 위상 정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경호업무의 특성상 대내외 홍보전략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경호수요에 영향을 받는 지표설정과 시민 편의 증진에 대한 효과성 입증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효율성 제고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혁신적 성과에 대한 보완 필요
- 경호수요 증가가 성과지표로 직결되지 않도록 지표 개선·연구
- 정책홍보 평가 관련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 접근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경호관련 법령집」 제작	11월	○「경호관련 법령집」 제작(11월)	정상추진
○하반기 경호행사 종합 평가 및 개선안 마련	12월	○하반기 경호행사 종합 평가 및 개선안 마련(12월)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727	▶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 적정 ▶ 경호 수요 증가 자체가 성과지표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55	▶ 안정적으로 정책과제가 수행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추진계획 준수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682	▶ 대내외 업무추진 과정의 협업노력 및 성과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364	▶ 도전적인 목표치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과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545	▶ 신형 장비 도입, 교육·평가체계 구축 등 향후 경호역량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장기적 경호문화 개선에 대한 분석 부족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636	▶ 대내외 현장컨설팅, 현장 회의 등 현장 수용 노력이 돋보이나, 경호행사에 수반되는 회의가 대부분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	▶ 정책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와 홍보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나, 경호업무 중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3	○ 경호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	○ 경호수요 증가가 성과지표로 직결되지 않도록 개선·연구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26.2월)
	○ 장기적 경호문화 개선에 대한 분석 강화	○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경호문화 개선 영향 분석을 위한 경호경찰 워크숍 개최('26. 상반기)
	○ 경호업무 중요성 정책홍보 노력 강화	○ 언론보도 적극 대응, 대내외 정책홍보 노력(수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방향 설계) 새정부 출범 관련 국정기조에 부응한 국정과제* 등 수립, 업무계획·평가체계의 긴밀한 연계로 정책 추동력 확보

* △(국정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국무총리·경찰청장 지시사항 관리, 추진실적·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각종 지시사항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 철저

※ △대통령 30건 △국무총리 2건 △경찰청장 직무대행 60건(1.28.기준)

- (국회대응) △업무보고 △국정감사 △예산 및 법률심사 △주요 현안의 체계적 정리 및 요구자료 종합검토 등 각종 국회현안 대응 총괄

※ △행안위 국정감사(10월) △정보위 국정감사(10월) △기타(법사위·예결위) 전체회의(20여회)

▶ (쟁점자료) △의원 관심사항 △요구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예상질의 작성

▶ (요구자료) 자료를 최종 검토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답변 제출, 불필요한 오해 사전 차단

▶ (외근활동) 상임위 동향 등 전반적인 상황 능동적 파악, 의원실 교감을 통해 쟁점 최소화

- (조직운용) 행정관리인력 등 감축→민생범죄 대응(수사·지역경찰 등) 역량 강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직·정원 전환 배치

▶ (인력증원) 책임수사·국제공조역량 강화를 위해 총 280명 인력증원

▶ (정원조정, ±5,869명) △수사1,907명 △지역경찰±517명 △국제공조·외사정보 514명 등

- (정부혁신·적극행정) △기본계획 수립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적극적 조직문화 정착

▶ (정부혁신) 「국민체감형 스마트 교통안전 대응 플랫폼 구축」 행안부장관상 수상

▶ (우수부서 가점) △정부혁신 경진대회 수상 관서·부서에 최대 0.3점 △정부혁신 전략에 부합하는 치안 R&D 연구과제 발굴·운영 부서에 최대 0.1점

▶ (적극행정) △특별승진(22명) △특별승급(35명)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0명 선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청 차원의 정책 발표 이후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 등

배포를 통해 국민들의 치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도모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경찰청 자체평가·치안종합성과 평가 최종평가 실시	11월	○ 경찰청 각 부서(課)와 순 경찰관서·부서(課)의 최종 추진성과와 개인기여도 측정을 위한 최종평가 완료(11.1~12.30.)	완료
○ 정부업무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및 최종 평정회의	12월	○ 국정과제·역점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최종 실적 점검(12.8.)	
○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배포	12월	○ 경찰활동과 치안행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하기 위한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2-2. 추진계획 준수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예산확보) 새 정부의 재정 혁신 및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효율화 속에서도 전년 대비 7,342억원(5.4%) 예산 증액

구 분(단위 : 억원)	'25년 예산(A)	'26년 예산		증감액 (B-A)	증감율 (%)
		정부안	최종(B)		
총지출(①+②+③)	13조 5,280	14조 2,442	14조 2,621	7,342	5.4%
① 인건비	10조 5,082	11조 1,285	11조 1,258	6,176	5.9%
② 기본경비	4,215	4,300	4,318	103	2.4%
③ 사업비	2조 5,983	2조 6,857	2조 7,046	1,063	4.1%

- 기획예산처는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경찰청 지출 구조조정 목표로 당초 2,174억원을 설정하였으나 1,204억원(55.4%) 수준으로 방어
- 2~4차 심의 시 공약·국정과제 등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 정책사업 예산 대부분 반영(전년 대비 '26정부안 +874억원, +3.4%)
- 특히, 인건비는 쏠 부처 수당 감축 기조 속에서도 현장순찰 강화 등 우리청 특수성 적극 설득하여, 역대 최고 증액(+6,176억원, +5.9%) 달성
-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은 정부안(728조원)으로 동결, 우리청은 정부안 대비 +179억원 증액하여 최근 5년 최고 성과 달성

* (전년 대비 증가율) : ('22년) 2.7 → ('23년) 1.4 → ('24년) 4.3 → ('25년) 4.1 → ('26년) 5.4%

- (예산집행)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
 - '25년 신속집행 예산현액 1조 2,412억원 중 상반기 5,919억원 (47.7%) 집행하여 '22~'24년 평균(45.5%)보다 높은 집행을 달성
 -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일조

< 신속집행 상반기 집행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	10,639	9,342	10,075	12,412
집행액(률)	10,639(45.9)	4,125(45.0)	4,591(45.6)	5,919(47.7)

- (국유기금 확보수준) 국민과 현장경찰들의 치안인프라를 위한 국유기금을 최대 확보, '25년 국유기금 확보 목표치(31.7%) 초과 달성

국유기금 확보 수준	'22년	'23년	'24년	'25년
	30.4%	30.8%	31.7%	34.4%

- (정부안 심의결과) 291개소 3,436억원 반영(전년 대비 10.3% 증액)
※ △'24년: 211개소(2,794억원) △'25년: 276개소(3,115억원) △'26년: 291개소(3,436억원)
- (정책 수요)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수사역량 제고' 등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정책사업 상당수 반영

<수사> (형사)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안보) 경찰청 세검정 별관동 (과수) 충남청 법과학감정실
 <경비> 서울청 1기동단·경북청 1기동대, 울산청 경찰특공대, 강원청 항공대
 <범예> 울산청·충북청 기동순찰대

- (경찰서 신·증축^{요구안 모두 수용}) 경기남부 원미서(33년 경과)·대구 수성서(41년 경과)·강원 화천서(33년 경과) 등 5개소
- (지역관서) △인근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다기능 통합청사** 등 신축사업 방식 다각화 추진으로 국유재산 효율화

*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 서울 중부서 신당

** 서울 광진서 화양·서울 성북서 성북+교통센터 / 서울 영등포서 대림+유실물센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등급
▶ 예산확보수준(40%)	54.1%	54.3%(101%)	SS
▶ 예산집행률(30%)	45.7%	47.7%(104.8%)	SS
▶ 국유기금 확보규모(30%)	31.7%	34.4%(108.5%)	SS

- 모든 성과지표 목표치 초과 달성하였으나, 더 적극적인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홍보 노력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 극대화 도모
 - (예산확보) 새 정부 국정철학 본격 실현을 위한 핵심 아젠다 발굴 필요
 - (예산집행)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대한 내부 홍보 강화 및 집행 독려
 - (국유기금 확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전문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현장컨설팅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내외 홍보 강화 및 전략적 예산확보 노력 경주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예산 국회 심사 대응	11월	○ 국회 예산안 심사 대응 - 행안위 : 전체회의(11.12.), 소위(11.14. / 18.) - 예결위 : 종합정책질의(11.6.~7.), 부별심사(11.12.~13.), 소위(11.20.)	정상추진
○ 예산집행심의회 등	11월~12월	○ 11월 예산집행심의회(11.28.) ○ 12월 예산집행심의회(12.31.)	정상추진
○ 국유기금 확보 수준	11월~12월	○ '26~'30년 국유기금 중기사업계획 제출 - 수요파악(11.20.), 기재부 제출(12.10.)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045	▶ 국정과제나 주요업무 계획과의 연계 인정되며,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도 우수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609	▶ 최근 수년간 최대 예산 증액과 효율적 국유재산 관련 예산 증액이 인상적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2.955	▶ '25년도 3분기 집행 결과 분석 및 계획'의 세부 실적은 '소비투자 집행현황 보고'만 확인되는데, '계획'에 관한 실적은 포함되지 않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909	▶ 국회/기재부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우수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236	▶ 전 성과 지표에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273	▶ 지자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인상적임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664	▶ 대내외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컨설팅, 유관기관 설명회등 노력 높음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182	▶ 정책홍보가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홍보 강화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5	○ (예산집행률) 연례적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예산 항목에 대해 연중 관리하여 신속한 정책 집행 도모	○ 26년 신속집행 계획 수립('26.2월)
		○ 27년도 국유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 수립·제출(3월)
	○ (국유기금 확보 수준) 국민과 현장경찰들의 치안인프라를 위한 국유기금 최대 확보 노력	○ 27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협의·조정(4~5월)
		○ 예산 이월·불용 실태 점검(10~11월)
		○ '26~'30년 국유기금 중기사업계획 제출(12월)

□ 주요성과

- <경찰청 소관 법안> 국민안전과 관련된 「경직법」·「도교법」(약물운전 처벌), 국민편익에 관한 「경비업법」·「도교법」(운전면허 갱신) 등 총 19건 국회 통과

▶경직법: 위해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억류·피난 요건 개선, 위험 원인 제공자 퇴거·접근금지 명시
 ▶도교법(약물운전 처벌): 약물 운전 처벌수준 강화, 약물복용 여부 측정 근거 및 측정불응죄 마련 등
 ▶경비업법: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종사 금지 개선 및 파산자의 경비원 취업 허가 등 규제 완화
 ▶도교법(운전면허 갱신): 면허 갱신기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1.1.~12.31. → 생일 전후 6개월)

- <타 부처 소관 법안> 「형사소송법」(전자증거 보전요청), 「형법」(공공장소 흥기소지죄) 등 국회, 타 부처와도 협업하여 민생범죄 대응 관련 법안 의결

- <경찰청 소관 규제> △「모두의 경찰관」(대국민 AI 서비스) 사업 추진
 △「치안산업입법추진·기금조성 등」 육성 등 범정부 신산업 규제정비 적극 동참

- <현장지원> △손실보상 법령 개정 △직무상 분쟁지원 확대 △법률 교육 자료 제공 등으로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 현장 법률지원 만족도* 상승

* (21~25년) 전 직원 설문조사: 79.5점 → 80.2점 → 81.0점 → 81.3점 → 81.6점 → 90.5점

- <손실보상> 경미·명백한 사안의 심의절차 간소화^{연 1,400만 원 위원회 예산 절감}
 민원 처리기간 명시^{보상 결정기간 10일 단축} 등 신속·편리성을 높여 국민편익 증진

- <직무상 분쟁지원> △경찰 법률보험 보장확대^{최대 5억 → 5.1억} △공무원 책임
 보험 보장횟수 상향^{연간 최대 3회 → 4회} △소송지원단 신청요건 완화^{최대 180일 → 3년}

- <현장지원> 「현장법률 365 상담사례집(민사편)」,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사례집」 등 현장 법집행력을 뒷받침할 유용한 교육자료 제작·발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매년 100% 달성 중인 입법대응 노력도에 대한 성과지표 내실화 필요, 목표 상향설정이나 신규 평가항목 발굴 등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선
- 법률지원 만족도는 집중적인 정책홍보 노력의 결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자인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25년 상반기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11월	○ 손실보상 심사자료 국가경찰위 보고(25.10.)	정상추진
'25년 하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분석	12월	○ 경찰청 소송관리 현황 분석·보고 (25.7. / 25.8. / 25.9. / 25.10. / 25.11. / 25.12.)	
'25년 경찰청 규제혁신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실적보고	12월	○ 경찰청 규제혁신 실적 국무조정실 보고(25.12.)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0	▶ 정책과제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지표설계로 평가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44	▶ 정책과제 수행 노력이 보고서에 잘 나타남
2-2. 추진계획 준수도	2.9	▶ 시기별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4.278	▶ 적극 행정과 협업이 가장 필요한 분야인데 경찰청 소관 및 관련 입법 전반에 대하여 협업하는 등 '매우 우수'로 평가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24	▶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한 실적도 인정되나, 목표치가 100%이고 이를 수년째 달성하고 있는 지표는 산출 방식 변경 또는 신규 항목 발굴 등을 검토해 볼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5	▶ 주요 정책별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4.2	▶ 다양한 경로로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환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478	▶ 전문성이 높은 업무인데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돋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6	○ 입법대응 노력도 지표 정비	○ 외부 성과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재설계(25. 2.)
	○ 법률지원 서비스 내부 만족도 제고	○ 정책 홍보 및 제도 의견홍보 활성화(연중 계속)

□ 주요성과

- (인사제도 개선) 급변하는 인력 여건을 반영하여 △성과·역량 중심의 보직인사지침 개정 △대민접점부서 부적격자 배치 제한 등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적시성 있는 인사제도 개선 추진

- ▶ 경감 현원 급증으로 인한 보직 경쟁 심화 및 명확한 자격·절차 기준 등을 통한 인사 예측성 제공 필요성 증가 ⇒ 인사 前 관서별 보직인사지침 가이드라인 개정, 경찰서별 지침 정비 및 사전공지 강조
- ▶ 성범죄 등 주요 징계처분자가 대민접점부서에 배치될 수 없도록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개정 추진
- ▶ 치안업무상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전문가 수요 증가 ⇒ 변호사 경채 필수현장보직 조정
- ▶ 저출산, 출산·양육 관련 지원제도 정비 ⇒ 첫째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인정기간 (1년→3년) 확대
- ▶ 「경찰공무원법」 개정(25.1.7.시행), 임용결격 사유 내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등 유포죄, 스토킹범죄 추가 등

- (대내외 소통 활성화)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4.11) △전국 인사담당자 간담회(4.25) △인사정책 현장자문단 간담회(9.16) 등을 통해 주요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 운영

- ▶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 특정직공무원 간 인사혁신 방향 및 추진전략 등 공유
- ▶ 전국 인사담당자 간담회 : 근속승진 개선방안 등 인사제도 개선과제 논의 및 현장 건의사항 등 청취
- ▶ 인사정책 현장자문단 간담회 : △업무발전기여도 개선 △객관근평요소 재설계 등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 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 △객관근평요소 개편 △다면평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설문조사(폴메일) 실시

- (현장중심 포상제도 운영) 현장 중심 포상 활성화를 통한 일선의 우수성과에 대한 표창 비율을 높여감으로써 현장의 활력 제고

- ▶ 특진·승급 : 현장경찰관이 직관적으로 성과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별 필수·중요업무 실적을 계량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적마일리지」 제도운영 본격화
- ▶ 표창 제도 운영 : 국가적 행사 등 유공자 표창은 총량에서 제외토록 하는 「경찰 표창 업무지침」 개정 ⇒ 금년 탄핵·산불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동원된 현장 경찰관 적극 포상(24년 대비 현장경찰 표창배정율 13%p ↑)

- (성별 균형 인사) '27년까지 여성 경찰관 비율 17% 달성을 위해 매년 0.4%씩 점진적 향상 추진, '25년 16.3% 달성

- ▶ 여성경찰관 확대 :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上 '27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7% 달성을 위해 '24년 충원계획 수립 시 채용인원 목표치 반영을 통해, '25 기준 여성경찰관 비율 16.3% 목표 달성
※ '26년부터 경찰공무원 수 채용분야에서 남녀통합선발 시행 → 여성경찰 인력확대 기반 조성
- ▶ 여성관리자 확대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上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달성을 위해 고위직 승진 시 에도 여성관리자 적극 선발 및 '25.9월 말 기준 경정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8.3% 목표 달성
※ 총경→경무관 승진 시 女 비율 : '21년2.7%→'22년4.2%→'23년4.5%→'24년3.2%→'25년6.7%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5년은 부서 성과목표를 모두 안정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특히
△순환인사 강화 △충원체계 개선 △직무적성검사 개편 등 현장
직무와 직결되는 인사제도 개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다만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 노력이 다소 부족,
소통 방식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홍보 등 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도개선 항목에 대한 인트라넷 홍보 등과 더불어, △대내외 간담회
△현장자문단 등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정책 환류 노력 적극 추진
- ※ 「HR 컨퍼런스(인사정책 플랫폼)」 운영을 위한 '27년 중기사업 예산 신청 예정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5년도 연말 정기표창 계획 수립	12월	○ 연말 표창 1,000매를 각 국관 및 시도청에 배정수여	정상추진
○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연중	○ '25년 한해동안 1,646명 선정하여 포상 추진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042	▶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이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042	▶ 정책과제 수행노력도가 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2.875	▶ 추진계획이 정상 이행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5	▶ 적극행정 및 협업 노력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417	▶ 목표치 달성 인정. 다만, 지표 설정이 다소 보수적인 측면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417	▶ 정책효과 및 기대효과 인정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708	▶ 의견수렴 양호, 방식 다양화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3.833	▶ 정책홍보 노력 양호하나,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7	○ 현장소통 중심 인사제도 개선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지표 개선점 검토('26년 2월) ○ 실무자, 현장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환류 노력(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하기 위해 △직업윤리교육 강화
△현장대응력 강화 △채용 제도개선 △교육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추진
- －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공정한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 >

- ▲(직업윤리교육 강화) 인성 등 기본소양 내재화를 위해 직업윤리 교육 시간 확대 편성
- ▲(현장대응력 강화) 신입 경찰 충원·교육 확대, XR·VR 기반 교육훈련 본격 도입 준비
- ▲(채용 제도개선)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 무도 단체 정비 등 제도개선
- ▲(교육인프라 확충) △제2중앙경찰학교 △제주교육기관 △수도권 현장대응 훈련센터 설립 추진

-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인 ‘직업윤리 교육활성도 (139.9%)’와 ‘교육 현장활용도(103.8%)’ 모두 목표치 초과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표설계 적절성) 실질적인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업윤리 교육활성도보다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표로 보완 필요
- (정책홍보 노력도) 교육정책의 개선 등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AI 교육 확대 필요) AI 주도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AI 이해·활용 교육을 확대 편성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표설계 변경) 고도화된 전문성과 실전 대응능력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중점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정책홍보 활성화) 대내·외 홍보 실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 (AI 전문인력 양성) AI 이해 및 활용역량 확보를 위해 신입·기본 교육 내 AI 교육을 확대·의무화하여 ‘치안 AI 전문인력’ 양성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현장학습모임 우수학습과제 선발	12월	○ 2025년 현장학습모임 최종평가 결과 알림(12.18.)	정상추진
○ 2026년도 경찰청 위탁교육 과정 선정	12월	○ '26년 경찰청 자체 위탁교육 선정 결과 보고(11.24.)	정상추진
○ 제주 경찰교육기관 설립 관련 기본설계	12월	○ 선행절차인 부지교환 지연, 후속절차 기본 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결 신청(1. 5.)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583	▶ 정책과제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향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167	▶ 항상 발전하고 시야가 넓어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신임경찰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과 인성교육 강화 부분이 인상적
2-2. 추진계획 준수도	3	▶ 추진계획이 모두 준수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167	▶ 경찰의 인재 양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대외 협업은 우수하나, 타 국관 등 대내 협업을 보다 강화 필요 ▶ AI 시대에 맞춘 고민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792	▶ 성과 달성도는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추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 난이도와 질을 고려 중간 평가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75	▶ XR VR 기반 훈련의 혁신성이 인상적이나 해당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반복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333	▶ 외국 훈련기관 위탁교육과 체력검정 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이 돋보임 ▶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이 인정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08	▶ 정책홍보 매체 및 방식의 다양화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경찰 채용제도 혁신과 변화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8	○ 교육과 중점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신규지표 설계	○ 직업윤리 교육활성도 지표를 대체할 신규지표 신설('26. 3월)
	○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다양한 홍보의 매체 및 방식을 모색('26. 10월)
	○ AI 시대에 맞춘 핵심 역량 확보 필요	○ AI 이해 및 활용역량 확보를 위해 신임·기본교육 내 AI 교육을 확대·의무화('26. 10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현장이 체감하는 미래치안 인프라 구축

- ▶ (차세대통신망) 시도청 ↔ 경찰서 대용량·지능형(AI)·보안 네트워크 구축, △통신사 이원화 △재해복구망 신설 △양자암호 통신망 시범 구축 등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
- ▶ (슈퍼컴퓨터) 국가슈퍼컴퓨터 경찰청 전용자원(GPU 24장) 최초 확보에 이어 '26년 GPU 임차 예산 2배 확충(2억→4억), 최신 GPU 자원 사용 기반 마련
- ▶ (재난관리체계) 정보시스템 재난 총괄 부서로서 장애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작·모의훈련 등 추진, 재난 시 대국민 치안 연속성 확보

○ 대국민·치안 현장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 ▶ (국민신고플랫폼 통합)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 행안부(안전신문고) 국민 안전 신고 플랫폼 통합, 업무 일원화에 따른 국민편의성 증대 및 예산 효율화(48억 절감)
- ▶ (모바일오피스) 실종수색시스템 연계 등 현장 요청 반영으로 '모바일오피스' 활성화('24년 대비 사용자 36.8% 증가),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국민 밀접 치안 서비스 제공
- ▶ (모바일장비) 신형 모바일 장비 12,186대 교체, 폴리폰 기능* 13건 개발·적용
* 경범 단속 시 18세 미만 통고서 발부 제한, 교통단속 시 외국인 국적 검색 등 13건

○ 경찰청 소 기능을 지원, 지능정보화책임관(CIO) 역할 수행

- ▶ (사업관리체계) 경찰청 전체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구축('24년 22개 → '25년 75개 사업관리), 기능별 사업관리 체계를 정보화기반과 사업관리 체계로 전환, 사업 결과물 관리 등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사업 지연 및 부실화 가능성 차단
- ▶ (PMO) '21년 PMO 운영 이후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21년 6개→'25년 25개), △예산 산출 △제안요청서 검토 등 사업 절차별 실질적 지원으로 정보화사업 완성도 제고
- ▶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확대(39→50개)하고 헬프데스크 도입(3명, 월평균 상담 1,200건), 공통 개발팀(4명) 운영으로 예산 없이 기능개발 지원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구현 등 개발비 3억원 상당의 5개 개발사업을 별도 예산 없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행

○ AI 서비스 보급 및 교육 확대

- ▶ (AI 워크숍) 업무에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전문기업(MS, LG CNS)과 경찰청 합동 AI 워크숍 개최, 12개 과제에 대해 3단계 합동 AI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경찰 코칭 AI' 과제를 선정하고 기재부 설명을 추진하여 64억 구축 예산 확보
- ▶ (AI 챗봇 보급) 경찰청 국·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대한 자료 검색·분석이 가능한 AI 챗봇(MS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교육
- ▶ (AI 통·번역 솔루션 개발·보급) 자료 유출 없이 AI 노트북에서 온디바이스 구동 가능한 AI 통·번역 솔루션을 개발, 안보·수사 기능에 보급
- ▶ (석사과정 위탁교육) AI 등 첨단기술을 치안과 연계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 & 빅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연세대 정보대학원에 석사과정 위탁교육 개설

○ '26년 정보화예산 확보 및 예산 절감

- ▶ (예산 증액)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에 경찰청 정보화 주요 정책 및 신규·고도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 추진·협의, 경찰청 정보화예산 총괄부서로서 80억 증액
※ '25년 정보화예산 1,318억 → '26년 정보화예산 1,398억 (6.1%↑)
- ▶ (모바일전자고지) 과태료 고지서 등 경찰우편물(연간 5천만 건, 약 500억)에 대해 수신 편의 및 즉시 수납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운영하여 '25년 종이 우편 발송 요금 11.2억 절감 ('21년 시범운영부터 '25.12월까지 총 77.2억 절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하고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난이도·적정성 등이 평가자의 눈높이에 미달
- (정책홍보) 정보화기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업무와 성과평가 간 괴리 발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정책목표가 달성된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정부 정책 기조와 課 특성에 맞는 신규 성과지표 발굴
- (정책홍보) AI, 클라우드, 위성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규 정책을 발굴·추진·홍보하여 課 이미지 쇄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완료	11월	○ 노후 장비 교체 완료(10.28.)	정상추진
○ '25년 경찰청 정보화 사업관리(PMO) 성과 보고	12월	○ 성과 보고 완료(12.30.)	정상추진
○ 정보화사업 단계별 표준 지침 개정	12월	○ 표준 지침 개정(12.29.)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182	▶ 부서 핵심 업무를 국정과제,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였고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산출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273	▶ 경찰 정보화를 고도화하기 위해 △미래치안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 정보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소 기능의 정보화 사업 관리·지원 △주요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등 다각적 노력 전개
2-1. 추진계획 준수도	3.0	▶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 정상 추진
2-2.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982	▶ 국가·공공기관 등 협업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지원 △슈퍼 컴퓨터 자원 확보·활용 △석사과정 위탁교육 개설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618	▶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치 초과 달성
3-2.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22.545	▶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치안 연속성 확보 △통신망·자원 등 차세대 인프라 구축으로 AI 서비스 기반 마련 △모바일 근무환경 마련으로 국민 밀접 치안 서비스 제공 △정보화 사업 관리·지원 강화로 사업 지연·부실 최소화 등 정책효과 우수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591	▶ 타 부처, 내·외부 전문가, 현장 근무자 등 대내·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보시스템 구축·기능개선 등에 반영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409	▶ △언론보도 △국제치안산업대전 △차량·게시판·SNS 등에 경찰 정보화 우수성 홍보, 소관 예산 증액·절감 등 성과 창출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9	○ 정책과제 성과지표 개선 ○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규 정책 발굴	○ 26년 자체평가 관리과제 수립('26.3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장경찰관 안전을 위한 장비 지원

- (저위험권총) 저위험권총 운용기준 수립, 도입절차 착수 ⇒ 서울, 부산 경찰서 훈련용 1,410정 구매
- (경찰무기 소형·경량화) △ 38권총 3인치형으로 25.2. 1,210정 계약 (교체율 83.2% 예상) △ 신형 전자충격기(2연발 이상) 25.12. 1,980정 계약 후 절차 진행(교체율 30.9% 예상)
- (차세대 외근조끼) 혁신제품 지정(25.6.) ⇒ '25~'30년 53,824개 보급 목표
※ 1차 2,787개 구매(25.7.), 2차 2221개 구매(25.10.)
- (신형 방탄복) '25.10. ~ 11. 초 기능 전수조사, 현장직원 간담회 ⇒ 보급기준 마련, 수량 책정

○ 현장경찰관 행정편의·업무효율성 제고 혁신

- 스마트 물류시스템 확대 진행 ⇒ 평균 물류 시간 : 4h → 1h / 업무 효율성 4배 향상(KPI 분석)
- 정보보호장비(VPN)와 112신속출동시스템 통합 ⇒ 1.37억 예산절감(기재부우수사례)
- 저장시설용 유류 계약방식 전환(1년 → 3년, 26.7.) ⇒ 업체간 경쟁 유도, 1.4억 예산절감 효과
- BC카드社 협업, 유류비 결제정보 연계(25.2.~5.) ⇒ 수기입력 해소(年 770,000건)
- 노후 경찰 규격 306개 폐기(25.2.), 2차 정비사업 추진(26.7.~12.) ⇒ 장비 품질관리 체계 정립

○ 현장경찰관 활동 역량, 자긍심 지원 노력

- 창경 80주년, 2025 경찰복제개선 착수 ⇒ 제복 경찰관 품격 제고
※ 1차 품평회(2개 기초채택) → 시제품 제작(25.6.~7.) → 시도청 순회 평가(25.7.~8.) → 시민 품평회(25.8.) ⇒ 최종모델 공개행사(25.10. / 국제치안산업대전) * 모델: 17명(男 9, 女 8)

- 혹한기 피복체계(冬절기 3단계 레이어체계), 시범운용 : 2개청 등(1.24. ~3.3)
 - ※ △지역경찰 50,502 △기동순찰대 2,668 △교통외근 4,400 △경비경찰 12,159
- 혹서기 근무복 2차 시범운용 ⇒ '24년 1차 시범 의견 반영, 57,540벌 시범보급(25.7.)
- '아너박스'(25년 10월, 총 625건) 안착, '아너세트'(15,340개) 추가(25.5.)
 - ⇒ 제복 경찰의 품격과 자긍심 고취
 - ※ 아너박스 : 공무 중 훼손 피복장비 무상지원 / 아너세트 : 승진자 계급장 세트 제공
- 현장장비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
 - E-순찰차설계·도입 추진 → 기아차 협업(25.4.), 미래기술 설계 진행
 - ⇒ 시범 제작, 전시(25.10. / 국제치안산업대전)
 - AI반도체 칩 탑재 드론 카메라 R&D(과기부) 응모(25.6.) ⇒ 채택(25.6.)
 - ※ 실종자 추적, 흉기 식별, 이상행동 감지, 번호판 인식 기술 탑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홍보 노력) 폴넷 카드뉴스 게시 등 대내적 정책홍보 우수, 우수 현장장비 보급의 대국민 정책홍보가 다소 부족함
- (대내·외 의견수렴 노력) 쏠경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노력이 우수, 다만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설문 조사 방식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내·외 홍보) E-순찰차, 신형 전자충격기,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영향 범위와 효과가 큰 개선사항들은 대내적으로 홍보 추진
- (의견수렴) 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이외 소통창구(장비포털, 제복의품격) 활용 쏠 경찰관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문조사 방식 등 적극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 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 실적	준수 여부
○ (복제개선) 복제개선사업 결과물 발표	12월	○ 2025 경찰복제개선 최종결과 보고회 개최(25.12.) ※ 미래치안정책국장, 자문위원(6), 수행팀(9)	완료
○ (스마트물류시스템) 대전청 등 9개 시도청 대상 서버 설치	12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달청 서버 중단으로 지연	진행중
○ 38권총 보급 및 불용 계획 수립·시행	12월	○ 38권총(3인치) 1,1210정 시도청별 보급 계획 수립 ※ 시도청 38권총(4인치) 보유 비율 대비 보급량 산정	완료
○ 저위험권총 탄 시제품 배정계획 수립	12월	○ '26년부터 지역별 사전훈련 후 단계적 도입 계획 수립 ※ 서울·부산(46개서), 인천 등(7개청 112개서), 대구 등(9개청 102개서) 순 단계적 보급(총 28,826정)	완료
○ E순찰차 시범모델 설계 완성	12월	○ PV5 기반 조감도 설계 완성 ※ 시드론·드론스테이션·시순찰카메라·다중모니터 등 사무환경 구축	완료
○ '26년 위탁관리 업체 계약 추진	12월	○ '2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계획 수립(25.11.)	완료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273	▶ 전문가와 현장의견 반영,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직접·직관적인 성과지표 ▶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정성이 적절히 설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73	▶ 현장경찰관 안전·편의·업무효율성 등 제고를 위한 노력 우수 ▶ 장비지원, 업무효율성, 경찰복제개선, 장비첨단화 등 노력 우수 ▶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 기술 개발 및 현장 경찰관 설득 노력 우수 ▶ 현장 중심 장비 보급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우수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계획대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909	▶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이 우수 ▶ 시도청, 정부, 연구소, 민간과 협업, 적극행정 노력도 높음 ▶ 다양한 기관과 협업으로 많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우수 ▶ 다양한 장비의 현장 활용도 분석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818	▶ 장비성능 개선 및 신규장비 도입 목표치 상향 설정, 초과 달성 ▶ 장비만족도 미달성, 소통화·설문 등 현장의견 반영을 통한 개선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23.364	▶ 현장경찰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점 우수 ▶ 현장경찰관 설득과 근무복의 고품질 개선 등 장비 개선에 대한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높음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4.273	▶ 대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통한 정책환류 노력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636	▶ 전시회, 품평회, 국제치안산업대전 부스운영 등을 통한 언론홍보 우수 ▶ 경찰 드론 범죄예방 및 실종자 수색 홍보, 등 대외적 홍보 노력 우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0	○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 현장경찰관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26.7)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 경찰장비 만족도 평가 방법 개선('26.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역대 최대규모(4전, 707억) 수당 신설·인상
 - － 인사처·기재부 주관 공무원 수당조정요구절차를 거쳐 △ 112출동 수당 인상(3→4천원, 178억) △ 재난업무수당(8만원, 5.8억) 신설 반영
 - ※ 우리청 요구안 1순위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상향(55→60%)’은 소 공무원 공통으로 8급(경장, 20,273명) 인상 반영(총 163억 소요)
 - － 경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안(1→4만원, 360억)을 국정과제에 반영, 단계적 인상 방침 결정(’26년은 1→2만원 인상 반영, 120억)
- 아산경찰병원 건립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체계 기반 마련
 - － (아산경찰병원 건립) 아산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적극 대응(’24.5~’25.8)하여 경찰청 사업 최초 예타 조사 최종 통과(’25.8.20.) → 예타 통과 직후, 아산경찰병원 건립 확정 및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비 확보(34.5억)
 - － (특수건강검진 항목 확대)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개선을 위해 기존 ‘야간·교대근무’ 외 위해 환경 고려, 교통경찰 대상 호흡기 질환 예방 검진* 예산확보
 - * 교통경찰(50대 이상) 대상 저선량 폐 CT(단가 152,140원 상당) 예산, 1.78억 확보
 - － (마음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충분한 심리상담 기회 제공 및 거리적 제약 해소를 위해 경찰 전문 심리상담·지원 기관인 ‘경찰 마음동행센터’ 증설(6개소) 및 상담사 증원(11명) 추진 → ’26년 예산 13.8억 증액
 - ※ <상담사 1인 센터> 세종 <상담사 2인 센터> 경기남부·강원·전남·경북·경남
- 제복공무원 예우 및 지원 강화로 자긍심·사명감 제고
 - － (국립묘지법 개정)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관들에게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자격 부여(’25.12월 기준, 총 107명 호국원 안장)
 - ※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해 정무위 의원실 방문하여 적극 설명·설득, ‘정년퇴직자 제한’ 삭제를 포함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다수 발의(’25.11.18. 정무위 강준현 의원 등)

- (특별위로금 지급기간 확대)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기간을 “공무상 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서 “공무상 요양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 「경찰복지법 시행령」 시행('25. 1. 1.)
- (순직·공상경찰관 자녀 장학금 지원) 순직·공상 자녀 대상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총 19개 재단 / 총 27억 8,500만원 지원)
 - ※ '25. 12. 29, 경찰청-빙그레공익재단 업무협약 체결(매년 4천만원 지원)
- 법 개정·예산확보 등을 통해 조직 규모에 걸맞은 복지시설 확충·개선
 - (경찰수련원) △수련원(강릉·신안·남해·대구) 신·증축비용(약 128억) 확정 △중부서해권(남원보령) 대규모 수련원으로 남원(400억원), 보령(435억원) 신축 사업 반영
 -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총 80개소(1~4차) 시설임대료·운영비 등 정부지급금(229억)·운영비(587억) 확보 △5차 어린이집(18개소) 착공 완료, '25년 하반기 순차 준공·개원 진행 중('25. 12월말, 4개소 개원 完)
 - (경찰관사 확충·개선) △전국 노후관사 보수예산 지원(총 81건, 14.1억) 및 리모델링 예산 지원(81개소, 14억) △'26년 임차예산(월세) 증액(1.1억원) △'26년 노후관사 재건축 등 신규사업 총 6개소(진도·정선 등) 36.9억 반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한 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 중이나, 수요 대비 지원 가능한 인프라(마음동행센터, 상담사)가 부족하고 여전히 타 공무원에 비해 자살률이 높은 실정
- (원인분석) 경찰은 트라우마 등 대표적인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리상담과 조기발견·개입을 통한 대안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마음동행센터 확충 △경찰 맞춤형 심리검사 △야간교대근무자 대상자 정신건강검진(우울증 검사) 도입 등 경찰 정신건강 관리·지원 인프라 체계화 노력 지속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5년 퇴직예정경찰관 가이드북 제작	12월	○ 계획 수립·시행(10.23.)	정상추진
○ 경찰관서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 점검계획 수립	12월	○ 계획 수립·시행(11.10.)	정상추진
○ '25년 경찰관 전직지원 교육사업 용역계획 수립	12월	○ 계획 수립·시행(12.23.)	정상추진
○ '26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	12월	○ 계획 수립(12.23.)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917	▶ 성과지표가 정책과제 전반을 보다 아우를 수 있도록 추가되거나 변경하는 것을 향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상담사 역량 강화 부분이 단순 교육 이수율만으로 상담사 역량 강화를 수치화한다는 것이 빈약해 보임 ▶ 정책과제의 대표성 및 지표설계 모두 우수하다고 판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25	▶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적극적인 조치 등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에 높은 평가를 드림 ▶ 다양한 시책 및 계획으로 과제 수행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추진계획이 모두 준수됨 ▶ 실적이 우수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75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업 노력과 적극행정 노력이 높이 평가됨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로 경찰복지 향상에 기여한 부분에 공감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75	▶ 복지수준 향상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목표치 대비 성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417	▶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가 인정됨 ▶ 구성원의 복지향상이 기대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4.0	▶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환류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333	▶ 정책홍보 노력과 성과가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1	○ 성과지표가 정책과제 전반을 보다 아우를 수 있도록 추가되거나 변경 검토가 필요함	○ '25년 복지제도 만족도 조사 시범 실시('25. 10월) ○ 설문결과를 토대로 5개 정책과제 내용 전반을 포괄하는 '26년 신규 성과지표 개발·도입 예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창경 80주년을 맞아 경찰의 역사와 미래비전 조망, 사명의식 제고
 - <경찰의 날 기념행사>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역사를 조명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복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를 담은 프로그램 구성
 - <한국경찰사 7권 편찬> 전국에서 수집한 사료를 바탕으로 10년간의 경찰사 기술(초고 완료), 다양한 테마의 인터뷰·게시글·이벤트를 통해 경찰역사 홍보, 관심도 제고
 - ※ △역사 홍보물 제작(8회) △신임경찰 역사골든벨 △참전경찰 작품사진 촬영(리미 작가 협업)
- 격려와 소통을 통해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 <치안현장방문> 주요 이슈 등 관련, 경찰청장 현장 행보·행사 추진, 안정적 조직 관리 기여
 - ※ △설·추석 귀성 현장방문 점검(1월, 10월) △경북지역 산불 현장 점검(3월)
 - △청년경찰 간담회(9월) △음주단속 중 부상, 흥기피습 공상경찰 위문(5월)
 - △종교행사(트리·참수리 점등식)
 - <‘상사 모시는 날’ 근절> △자체 실태조사 △카드뉴스 △조직 문화진단 설문 등을 통해 조직내 부적절한 관행 등 발굴, 개선 노력
- 편리·쾌적한 근무시설, 완벽한 방호·보안으로 근무환경 개선
 - <청사 개선> 1층 로비·현관 등 노후된 청사시설 및 휴게공간 개선
 - <보안 강화> △안내실 보안검색대 동선·구조 개선 △방문객 무인키오스크 도입 △전국 방호인력·보안검색대 설치예산 확보
- 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실화로 중대재해 제로화, 산업재해 감축
 -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대상 대폭 확대(23개소→254개 관서)

△ 위해요인 조치(2,097개) △ 관리자 교육 대면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

○ 직협·노조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적 관계 구축

－ 전국 직협 분쟁에 따라 시도청 단위 기관별 직협대표와 간담회 실시,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창구를 통해 갈등 요소 사전 조율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경감·6급이사 연가사용 실적 목표 소폭 미달성

<결과 실적치> 목표치 66.4% 대비 66.0% 달성으로 목표치 99.4% 달성 ('25.10.31 기준)

－ 전반적인 연가사용률은 전년(64.6%) 대비 상승하였으나, 국가 중요 행사(탄핵·대선·APEC) 및 국가적 재난·재해(집중호우·산불 등)로 인한 비상 동원 근무 증가로 목표치 달성이 곤란(갑호·을호 비상근무 발령 시 연가사용 중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가활용률 달성 목표치를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상세하게 설정하고, 다른 구체적 지표도 추가 개발하여 전반적인 복무문화 반영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5년 주무관 노조 임금 및 단체 교섭 체결	10~12월	○ 경찰청-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25년 임금협약 체결(12.30.)	정상추진
○ 경찰청-전국경찰직협 협의	10~12월	○ 전국경찰직협 내부 갈등·분쟁으로 협의 불가, 기관별 직협 현장간담회로 대체	정상추진
○ 직협 협의 및 근무혁신 우수관서 포상계획 수립	10~12월	○ 직협 제도 활성화 유공자 포상 계획 하달 (12.16.)	정상추진
○ 하반기 초과근무 부담수령 현장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10~12월	○ 본청·시도청·부속기관 초과수당 실태 점검 (10.17~31.)	정상추진
○ 경찰청 특수기록관 기록물 국가 기록원 이관 실시	10~12월	○ 전자(209,641건)·문서기록물(2,974권) 이관 완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근무환경 조성 및 연계하는 등 정책과제의 지표설계 적절 ▶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성과지표가 정책과제 전반을 보다 아우를 수 있도록 추가·변경 검토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 노조, 직장협의회 등과의 협업이 난이도 있는 업무임에도 노력도가 돋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업 노력이 높이 평가됨 ▶ 본청, 시도청, 현장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행정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 노력이 확인됨 ▶ 타 부서 협업도는 우수하나, 적극행정 노력도는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있음 ▶ 노사간 건전한 협의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과정 개설 협의하는 점이 훌륭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 치안정책 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상향 의견반영이 가능한 업무·회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호응받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 최근 4년간 평균 실적치인 86.2점과 실적 추세치를 적극 상향하는 점수인 88.0점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하였고 목표를 달성한 점이 훌륭함 ▶ 만족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재난 등 특수상황 고려,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 경찰영웅들의 생전 활약상 및 후배들에 대한 당부 내용이 담긴 AI 복원 영상이 신선하고 좋았음 ▶ 청사 내 환경 정비 등 정책 추진의 효과가 명확함 ▶ 부서업무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와중에도 세세히 노력한 점이 돋보임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 대외 의견수렴을 위한 학술행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복무, 후생 분야의 개선안을 환류하는 등 피드백 기반 조정 기능이 잘 작동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행정 지원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조직 전반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임 ▶ 영리업무 금지의무 및 겸직허가 대상·방법 및 관련 절차·준수사항 등 안내하여 큰 도움이 되었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2	○ 연가활용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안 강구	○ 부서원 대상, 각 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 가능한 대책 마련(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효율적 지역경찰 운영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인프라 구축
 - △ 4조3교대 및 5조3교대 근무체계 시범운영 △ 지역관서별 112신고 건수에 비례한 시도청 간 정원조정(±517명) △ 자원근무 지정제 도입
 - '25년 중심지역관서 및 서단위 지역관서 집중운영 확대, 그간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 수립 등 안착 노력
 - ※ 현재 총 754개소(중심327, 공동체427) 대상 중심·공동체, 서단위 집중운영 8개서 운영 중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바디캠 등 장비보급
 - △ 무선통신형 바디캠 보급(총 14,000대) △ 경찰바디캠 운영 및 기록물 관리지침' 수립 △ 현장 사용자 전수 교육 등 현장지원 병행
 - 대형산불 발생(3~4월) 등 국가적 재난상황시, 방염장갑·방진마스크 등 안전장비 신속 보급, 경찰관의 안전확보 및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
 - 예방중심 경찰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실시로 112신고처리에 치중하기 쉬운 현장 근무자들 대상 예방활동의 중요성 각인
 - ※ 시도청 우수사례 보고 '24년 월 605.3건→'25년 759.3건(25.4%↑) / 경찰청장 표창 1,169건 발굴·포상
 - 지역경찰 대상 수시 특별승진 실시 등 현장 노고에 대한 적시성 있는 포상으로 지역경찰 사기증진에 기여
 - ※ 상반기 수시특진 3명 발굴 : 인질강도범, 살인미수범 현장검거 등 2명, 산불화재 인명구조 1명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평가위원 의견 바탕으로 작성)

- 내·외부 평가위원 대부분 25년 지역경찰운영과 추진 정책과제에 대해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하였음
- 5만 지역경찰 운영 업무의 난이도·중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분석

- 다만, 지난해 지역경찰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현황·블라인드 상 비판이 지속된 것이 평가단에게는 부서의 소통 노력 부족으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

* ① 바디캠 보급 관련 홍보 ② 4조3교대 시범운영 관련 현장 근무자 불만 대응 등

- 실제 일부 평가위원의 경우 지역경찰운영 분야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대내외 홍보 및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아쉬움 언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대내외 홍보 및 소통 강화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현장경찰 바디캠 보급	11월	○ 14,000대 지역경찰·교통·기순대 순차 보급(11월)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총 89.254점(원점수)

- ‘평정 근거 및 제언’ 세부 내용은 시스템 미공개로 총괄부서(성과계) 작성 예정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182	▶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8.727	▶
2-2.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273	▶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709	▶
3-2.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1.909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3.409	▶
4-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045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3	○ 대내외 정책 홍보 강화	○ 향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대내외 홍보 및 소통 강화(계속)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총기·흉기사건 대응) 9월 계획 수립 이후 ①방탄방패 예산^{8.1억원} 국회 증액 ②총기사건 대응 FTX 방안 마련^{12월} 등 성과 창출
 - ① 예산 8억910만원=전국 261개 경찰서×서별 2개×155만원
 - ② 서대문경찰서에서 상황관리관·지역경찰·형사·초동대응팀 대상 FTX 시범실시 후 계획 수립 → '26. 1. 14. ~ 2. 13. 전국 경찰서에서 FTX 실시 중
- <전문인력 양성> 실전훈련 교관요원 2,968명 양성·무기 통합 교관 인력풀 200명 확보, 지속 가능한 훈련 기반 마련
- (순찰팀장 역량 관리) 5월 최초 도입한 실무역량평가^{순찰팀장 자격요건}를 연말까지 총 3회 안정적으로 실시하여, 통과자 총 7,419명 확보
 - <우수팀장제 도입> 개인 역량·팀 실적, 동료평가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155명(현원 3%)의 우수 순찰팀장 최초 선발(1년간 팀장 보직공모 시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인사와 연계)
 - ※ 10월 계획 수립 → 경찰서 추천 → 시도청 심사·선발 → 본청 승인 → 12. 4. 공지 / 폴넷 게시글, 조회수 54,911명·댓글 1,398개로 호응 상당
- (교육훈련 개편·인프라 확충) ① 실전훈련을 반영한 교육훈련 개선 ②교육 콘텐츠로 활용 중인 '지역경찰 LIVE'를 '현장경찰 LIVE'로 확대 개편 ③현장맞춤형 시뮬레이션 사격훈련 장비 보급
 - ① 흉기(총기) 범죄·경찰무기 활용·전산업무역량 강화 등 교육과정 보강
 - ② 월 1회 배포, '25년 총 분량 210P·조회수 107,257회/섹션 다양화(5 → 7개) / 콘텐츠 보강(월 평균 20 → 40P) / 현장 기자단 22명 확보 등
 - ③ 스마트 사격훈련 장비 125대 보급('25. 12월) / 기존 장비 불편함 등 현장 의견 반영, △BB탄 → 레이저 방식 △실전훈련·기록관리 기능 추가 등 기능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과제·성과지표 적정성) '정책과제'가 국정과제·주요 업무계획 등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지표'는 교육인원·이수율 등 투입 요소에 집중되어 있어 효과성 특히 대국민 활동에 대한 평가 곤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했으나, 신규 지표여서 '목표치의 적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
- (홍보·소통) 순찰팀장 자격제 등 역량·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최초 시행하였으나, 정책 취지·성과에 대한 홍보 등은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제 개선) '26년 계획 수립 시 새롭게 마련된 국정과제·우리청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내용·지표 설정
- (성과지표 재설계) 대국민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내부 전문인력 양성 등 내외부 공감 가능한 성과지표·목표치 신설
- (정책 홍보) 역량강화과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폴넷 홍보자료·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서의 정책적 역할 가시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5년 교육훈련 현장 수요조사	11월	○ 시도청 교육과정 이수 지역경찰 10,159명 대상 직무교육 설문조사 시행	정상추진
○ 스마트 사격훈련 장비 도입	11월	○ 전국 125개 지역관서 등에 보급, 출동 대기 중 개인별 사격술 훈련 등에 활용	정상추진
○ 지역경찰 현장실습센터 구축	12월	○ 전국 20개소 구축, 지역경찰 상시교육훈련 등에 활용	정상추진
○ '26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	12월	○ 2026년 지역경찰 교육훈련 기본계획 보고	정상추진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4	○ 전문가 소통 창구 마련	○ 지역경찰 역량강화 분야 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26.2월)
	○ 성과지표 개선	○ 실무역량평가 응시통계·치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활용 개선 평가지표 마련 ('26.2월)
	○ 교육·훈련 효과성 분석	○ 시도청 교육센터 주관 교육 이수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 ('26.4월, 10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난현장, 대테러 훈련, 실종자 수색, 변사체 인양, 교통관리, 국제행사 지원(APEC 정상회의) 등 시·도청 관할 불문 치안현장 헬기 적극 운용
 - － 헬기 요청 간소·활성화 등 △대테러·재난관리 △실종자 수색 △변사자 인양·이송 △수사·교통 등 각종 치안현장 헬기 활용 확대
 - － 「경찰항공 3중 안전체계」의 안정적 구축·정착으로 32년 무사고 안전운항 목표 및 관리역량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외부위원(4명, 평균 92.75점), 내부위원(7명, 평균 86.298)의 평가점수 분석 결과, 조직 내부적 항공업무 인식개선 및 평가제고 방안 부족
- 항공업무 활동사항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대책 강구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공 업무상 대외·내 협력 및 지원 다각화 방안 지속 추진
- 경찰 내부적 인식 향상을 위한 헬기 요청 안내 및 주간업무보고 수시 발굴 기재 등 항공경찰 업무 적극 홍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신규헬기 도입 2대 최종검사 및 납품	11월~12월	○ 최종검사 완료 및 경남, 강원청 배치 완료	정상추진
○ 헬기 예방정비 분석 및 향후 개선 대책 등 계획 수립	11월~12월	○ '25년 경찰헬기 주요결함 및 분석	정상추진
○ 경찰항공 교육훈련 분석 및 교육 계획 수립	11월~12월	○ '25년 교육훈련 분석 후 '26년 교육계획 수립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2	▶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와 직결된 핵심과제에 정량화하기 어려웠음에도 지표가 적절히 설계된 것으로 평가 ▶ 지표가 운항시간, 지원횟수 등 투입중심으로 구조 성공률 등 연계된 결과 지표가 부재라는 의견도 있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091	▶ 치안.재난현장 헬기활용, 항공 안전관리 활동 수행이 원활히 추진됨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계획대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727	▶ 유관기관 통합 보험 계약을 통해 예산 80억 원을 절감한 것은 매우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임. 헬기운용기관 협업에 따른 약80억의 항공보험예산 절감 효과를 만들어내는 등 노후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와 모의비행훈련센터 확보에 따른 훈련까지 적극행정의 노력 확인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736	▶ 정책과제의 도전적 목표 설정 및 성과 달성이 예상됨 / 목표치 적극성 모두 인정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818	▶ 치안.재난현장 공중 지원을 통한 대응 역량 제고가 기대됨 / 전반적인 치안현장 영역에서 헬기지원의 빈도가 증가되고 지원준비상태를 유지 확인. 치안.재난현장 공중 지원을 통한 대응 역량 제고가 기대됨. / 정책노력 및 향후 기대 효과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정책 노력을 통한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드러지지 않아 보임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182	▶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의견 수렴 노력이 돋보이고 항공분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정책도 다양화 되는 만큼 직원 워크숍 외에도 해외교육 파견 및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mou 및 협업 등 더욱 적극적 이행 필요. 헬기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헬기지원 임무 완수 기대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3.955	▶ 단순 활동 보도 외에 항공 경찰의 전략적 가치를 알리는 홍보 부족. 경찰항공의 역량과 노고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할 대국민 콘텐츠 부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필요해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5	○ 치안현장 항공경찰 우수사례 등 업무 대내·외 홍보 강화	○ 치안현장 헬기 활용 우수사례 등 내부게시판 게시 및 경찰청 주요업무보고 발굴 기재(연중)
	○ 대내·외 협력·지원 강화로 항공경찰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 경찰인재개발원의 '헬기모의비행훈련센터' 개소로 타기관 조종사 교육·훈련 지원(연중) ○ 헬기 이용 만족도 조사 시, 타기관 만족도 조사 참여도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특정·종합감사 연계) 특정 직무에 국한된 감사를 넘어, 조직 전체를 진단하는 종합감사 활성화*, 취약분야는 특정감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
 - － 특히, 금년 4회 종합감사(23·24년 모두 1회 실시) 등을 통해 감찰 통보·징계요구 및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 － 경찰청 국·관(순찰차 구매사업 특정감사)과 산하단체(공제회, 도교공단) 채용 전반도 점검하는 등 촘촘한 감사활동 전개
- (실질적 비위예방) 관서별 비위경보 발령 권한 부여 등 비위경보 제도 실효성 강화('25.4월), 시도청별 자체 관리계획 수립 추진(5월)
 - ※ 실효성 제고방안 전·후 경보 발령 현황: (전) 특별경보 5회→(후) 일반경보 26회 특별경보 17회
 - － 취약시기 특별점검(3회, 82건 적발)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공직기강 점검TF'를 운영(10월) 등 공직기강 확립 도모
 - ⇒ 국조실,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 (현장 적극행정 지원) 112신고 출동 현장 등 현장 적극적 법 집행 관련 적극행정 면책 강화, 동기간 대비 22건 증가(26→48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추진 시 카드뉴스 등 대내·외 의견수렴·환류 및 홍보 강화 필요
- 적극행정 면책 실적 지표가 단순 양적인 점수 건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적 증가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다소 모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종 정책 추진 시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홍보 계획을 필히 수립
- 내실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위해 단순 양적 건수 외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경찰서장 직무관리 체크리스트 평가·환류	11월	○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운영성과 분석, 우수관서 선정 등 활성화 도모(全 경찰관서 양호)	정상추진
○ 관서별 비위 예방 컨설팅	11월	○ 최근 비위발생 현황·우수 사례 등을 고려해 경기· 경북권 관서 각각 현장 컨설팅 실시(11~12월)	정상추진
○ 경찰민원24 홈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12월	○ 22개 민원사이트 통합하는 「경찰민원24 홈서비스」 구축 위해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12월)	정상추진
○ 화해·조정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성과 분석	12월	○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운영성과 분석, 우수관서 선정 등 활성화 도모(18개 全 시도청 양호)	정상추진
○ 조직 관리를 위한 테마 감사·점검	12월	○ 연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2건) - △ 외청·타기관 근무자 복무실태 점검 △ 국민안전 치안시스템 점검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1	▶ 경찰청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관련 지표가 부합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1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가 인정. 특히, 적극행정 면책강화 실적 우수
2-2. 추진계획 준수도	3	▶ 계획대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5	▶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업하였다고 판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	▶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도 모두 우수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23.5	▶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높이 평가. 특히, 국조실 평가 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등 성과가 우수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6	▶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이 인정. 특히, 구체적 시행 방안 인상적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가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6	○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홍보 강화 필요	○ 각종 정책추진 시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홍보 계획을 필히 수립하여 추진('26.10월)
	○ 적극행정 면책 실적 지표 개선 검토	○ '26년 정책과제 수립 시 개선 조치('26.3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감찰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무가치·음해성 첩보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계급·구체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토록 평가체계 개선('25.4월)
- － 외근은 전담 지역에서 순도 높은 외근활동 수행하고, 종합분석반은 감찰정보심의회 운영(주1회)하여 정보를 상시 분석하고, 후속조치 추적
- <상시 대응>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사건·외근·종합반이 사건 진행경과에 따라 중첩적으로 대응하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
 - * ① 사건반은 중요 사안 보고 확행 ② 감찰외근은 지역별 주요 의무위반 사안 상시 확인 및 조정·지도 ③ 종합반은 주기적인 종합 점검 및 경향 분석 등
- － 사건 종결시까지 누수없이 쏠 사건을 관리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히 대응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안정적 여건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업무추진 협업도 관련, 타 기관·기능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 ▲ 공직기강 확립 ▲ 선발·포상·인사 행정 공정성 확보 ▲ 치안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 － 단순 협업보다 능동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추가 협업 방안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간 수집되는 감찰정보(약 9천건)를 분석 후 시사성 있는 감찰 정보는 해당 부서와 공유하여 소관 시책·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제공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시도경찰청 감찰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11월	○ 감찰정보활동(정량) 및 비위예방 노력도(정성) 관련된 시도청 평가 및 성과 우수사례는 쏘 시도청 감찰기능과 공유	정상추진
○ 감찰정보 제출 우수자 평가 및 포상(특별승급·포상 등)	12월	○ 감찰정보 제출 우수자 평가 및 포상 실시 - 특별승급 1명, 경찰청장 표창 11명	정상추진
○ 감찰정보심의위원회(정기·임시회의) 운영	연중	○ 감찰정보심의회 정기·임시회의 개최 - 11월 정기회의 3회, 임시회의 6회 - 12월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8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92.9점)

평가지표(100점)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10)	8.9	▶ 정책과제의 대표성·연계성 인정되며, 무가치·음해성 첩보 제출 시 패널티 부과 등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지표설계의 적절성이 있다고 평가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7)	6.4	▶ 감찰정보 평가체계 개편 등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3)	3.0	▶ 예정된 추진계획 모두 정상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15)	13.7	▶ 정부부처 등 대·내외 협업 노력도 인정되나, 단순 협업보다 능동적 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20)	19.2	▶ 감찰활동의 방향은 감찰첩보를 토대로 하는 바, 풍부하고 유가치한 감찰첩보 수집을 위해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 다는 점에 적극성을 평가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25)	23.7	▶ 사전조치와 함께 사후 발생 사건에도 빈틈없이 상시 대응 하는 점에서 대·내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한 조직관리의 건전성이 제고되었다 평가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15)	13.7	▶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민원에 대해 세심히 검토·처리 하는 등 적극적 소통 노력이 확인되나, 대내·외 의견 수렴방식의 다양화가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5)	4.2	▶ 지휘관 참고자료 제작·배포, 기능 화상회의 및 현장 워크숍, 일반경보 발령 등 예방중심 감찰활동 적극 홍보 노력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3- 47	○ 업무추진 과정의 협업도 강화	○ 시사성 있는 감찰정보는 해당 부서와 공유하여 소관 시책·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제공(연중)
	○ 고가치 감찰정보 비율 향상	○ 감찰관 교육 등 업무역량 상향 평준화 추진(연중)

(1) 평가결과 (1~2페이지)

□ 주요성과

- 「제3차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 제2차 기본계획('20-'24) 성과 및 대내외 정책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25-'29) 및 '25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 △'25년 시행계획 33개 세부과제 이행점검 결과, 33개 모두 정상추진 완료
 - － '25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축한 추진체계와 운영기반을 토대로 정책 이행의 연속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6년 시행계획 수립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경찰 정책의 성주류화 확립
 -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상 과제 범위와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시도청·부속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지원
 - － '19년 경찰청 행정규칙 일괄 점검 이후 처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91개 대상 일괄 점검 실시
 - ※ 32개 개선과제(△성별 구분·고정관념(4) △성별 특성(3) △성별균형참여(21) △성별 통계(1) △차별적 용어 등(3)) 및 개정안 도출
 - － 경찰 정책 콘텐츠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총 4,474건(전년 대비 330건↑) 실시, 성차별적 이미지·용어 사용 등 818건 개선 조치
 - ※ '24년 대비 △검토건수 4,144→4,474건(330건↑) △반영률 98.7→96.5%(2.2%p↓)
- 성평등·폭력예방 교육 체계 고도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 경찰업무 전반에 '성평등' 가치 체화 및 구성원 개개인의 성평등 직무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2025년 경찰청 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2.23.)하여 사례 중심의 참여형 성평등 교육 추진
 - － 경찰 직무 특성을 고려한 직급·직무·과정별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

- 조직 내 성평등 사각지대를 해소,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설문조사)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구성원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6.9.~6.24.)
 - (현장소통 간담회·젠더통합 간담회) 조직 내 소통 문화 개선과 성평등 조직문화 및 정책 제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실시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
 - 조직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관련 기능 합동 종합대책 수립,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예방 활동 실시
 - 현장 컨설팅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컨설팅 대상을 기존 경찰서 → 시도청 단위로 격상하여 현장 컨설팅 기능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승인을 본청으로 일원화·전담 하였으나, 본청 검토가 지연되면 긴급성을 요하는 성별영향평가 특성상 미검토 또는 자체 검토(미보고) 등 추진체계 사각지대 발생
- (성평등 교육) 현재 소 직원 대상 성평등 직무교육을 실시(年 5시간 의무)하나, 주로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하여 실질적 교육 체감효과 저조
- (성평등 수준 측정) 조직문화 성평등 수준 점수가 지속 하락하고, '25년 목표치(77.8점)도 미달성하였는데, 조직 내 성별·세대별 인식 차이 및 잠재적 갈등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별영향평가) '26년부터 시도청·부속기관 성평등정책 담당자를 활용하여 콘텐츠 검토·의견서 작성 기능은 기관별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 본청은 기획·지원·점검 기능에 집중
- (성평등 교육) 관리자 중심의 대면교육을 '26년부터 상반기 관리자, 하반기 중간직급(경감·경위·6·7급)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집중 교육 병행하여 성범죄 예방·근절 교육 실효성 확보
- (성평등 수준 측정) 조직 내 갈등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보완하고 심층 진단을 통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준수 여부 확인되도록 간략히 기재)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6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11-12월	- '25년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6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정상추진
○ '26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	11-12월	- '25년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6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	정상추진
○ 경찰청 성평등 수준 진단·관리 종합계획(가제) 수립	연중	- 「경찰 성평등 목표 이행·관리 종합계획('26~'28)」 수립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페이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942	▶ 조직문화에 있어 성평등 관점 제고는 중요한 과제이고, 성과 지표도 적정해보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4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가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3.0	▶ 계획대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583	▶ 협업은 우수하나 협업에 따른 구체적 성과는 부족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7.675	▶ 성평등 수준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조사내용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치 달성도 쉽지 않음 지표임도 노력 ※ 미달성 원인 유형 : 조직문화 성평등 점수는 부서 차원의 관리나 노력만으로 직접적인 성과 달성이 어려운 지표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2.167	▶ 경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167	▶ 대외적 의견수렴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 의견수렴 우수하나, 정책환류 노력도 강화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5	▶ 정책홍보를 위한 매체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8	○ 대·내외 의견수렴 방식을 다양화하고, 정책환류 노력도 강화 필요	○ 설문조사, 간담회 등 참여형 소통 채널을 확대 하고, 수렴된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체계 강화('26.3월)
	○ 정책 홍보 매체 다양화 필요	○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영상 제작,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대상별·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강화('26.4월)

(1) 평가결과 (1~2페이지)

□ 주요성과

- [보도대응] 실시간 모니터링(전담팀) 통해 감지 즉시 기능공조로 신속 대응, 총 643건의 기사수정·삭제 대응해 전년比 52%↑ / 정부부처 중 最多
- [위기관리] 부정이슈 발생시 단발성 대응에서 나아가, 기능간 협업 아래 △팩트체크팀 가동 △정제된 공보(문자폴설명자료 등) 등으로 종합적 대응
 - ※ '25년 주요 대응 이슈 : 캄보디아 피싱범죄조직 사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유언비어 유포, 서부지법 난동사태,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연이은 스토킹 살해사건 등 대형 이슈 多

▶[캄보디아 사태] 합동 대응단 통해 △총력대응 계획(10.12.), 신속·엄정수사 대책(10.14.), 자수 기간 운영(10.15.) 등 보도자료(3건) △사건통계(10.14.), 수사 계획(10.19.) 등 문자폴(11건)

- [언론 기획홍보] 언론 및 관련 기능과 협력, 주요 치안정책 정보와 메시지가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확산되도록 다수 기획보도·기고 등 추진

▶(기획연재) △「서민 올리는 민생범죄」(뉴시스·6~7월) △「보이스피싱 근절」 5부작(매경·7월) 등
 ▶(동행취재) △기초질서단속(7월) △마약유통단속(8월) △할로윈인파관리(10월) 기자단 동행 등
 ▶(기고) 『국경 넘는 범죄, 국제경찰공조가 답이다』(청장 직무대행, 동아·10월) 등 국장급 이상 6건
 ▶(보도자료) 주요정책·현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담아 총 228건 배포('25. 11월 현재)
 ※ 쏘 보도자료 대변인실 감수 확행, △적합한 형식·시기 컨설팅 △내용·제목 등 수정(총30건)

- [체감형 디지털 소통] 정부 부처 최다 구독자 수 등 디지털 소통 인프라 활용, 수요자 중심의 △현장 영상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에 집중

▶(친구수) 경찰청SNS 계정(8개) 친구수 241만명 달성 / 정부부처 最多
 ▶(100만뷰 콘텐츠) 최우수 콘텐츠 기준으로 여겨지는 100만뷰 이상 콘텐츠 총 6건 달성

- [지역별 맞춤형 정책홍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가장 확산력 높은 형태의 생활 밀착형 홍보를 전국 시도청 단위 전개

※ 매월 우수시책 선정 후 포상 및 전국 시도청 공유 통해 정책자료화, '25년 총 423건

△버스·택시·지하철 전광판 활용, 정책홍보 영상 송출 △B&F社 협업 상품 레벨지 등 이용 홍보
 △지역 유명 축제 계기, 부스설치·가두캠페인 △각급 학교 협업, 청소년 범죄 예방·선도 홍보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추진계획 준수도 일부 감점

－ 추진계획과 달리 지연된 항목이 발생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일부 감점

－ 정책홍보 매체·방식의 다양성 및 타 부처·기능과의 협업 다소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업무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계획에 따라 일정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계획과의 차이 최소화 필요

○ 타 부처 및 부처 내 정책 추진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참신한 방식과 형태의 정책홍보를 전개할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준수 여부 확인되도록 간략히 기재)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5년 방송·영화 제작진 교류지원 성과 및 '26년 활성화 계획 수립	12월	○ 서울영상위 PD·작가 등 미디어 제작진 대상 - ① 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 견학 및 특강(30명, 7.3.) - ② △과학수사 기법 시연 △치안한류 전파 사례(60명, 10.30.) ○ 서울영상위 의견 수렴, 26년 계획 수립 완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페이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9.583	▶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연계성, 지표설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 등 적정하게 지표 설계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667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가 인정됨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2.958	▶ 추진계획은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한 세부일정과 첨부된 실적상 실제추진사항은 일부가 불일치하는 등 미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외생적 요인이나 선행절차가 지연되었는지 등 합리적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85	▶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기능간 협업을 통한 정책 추진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9.083	▶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되며,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목표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달성도 매우우수로 평가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875	▶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가 제시된 바대로 인정 ▶ 경찰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75	▶ 국민과 현장직원 의견 수렴 노력 확인 ▶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등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5	▶ 정책홍보 매체·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해질 필요 있음 ▶ 정책홍보 실행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3개 항목 작성]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9	○ 정책홍보 매체·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해질 필요 있음	○ 국정과제 및 경찰청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홍보를 위하여 '기획홍보 전략회의체'를 중심으로 정책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관리('25.1~2월)
	○ 추진계획은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한 세부일정과 첨부된 실적상 실제추진사항은 일부가 불일치	○ 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추진절차 및 일정 감안해 준수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수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인권위 진정·권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인권위 권고 감소
 - －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가인권위 진정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필요
 - － 국가인권위 진정에 전략적 대응,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하는 한편, 정당한 法 집행은 법률지원으로 현장 경찰관 보호

▶ 국가인권위 권고 추이 : '23년 : 42건 → '24년 : 23건 → '25년 : 14건으로, 전년 대비 39.1% 감소

- 주요 법령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확대로 인권 침해요인 선제적 예방
 - － △ 국민 안전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주요 집회·시위에 대해 시·도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 경찰 활동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 －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통해 「범죄수사규칙」 등 22건 검토, 권고·의견 표명 결과를 정책에 반영(수용률 100%)하여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인권영향평가 인권위 상정 건수 : '23년 : 12건 → '24년 : 13건 → '25년 : 22건 (목표 달성)

- 인권진단 시스템구축 및 현장 중심 인권역량 강화
 - － 경찰청과 시·도청의 병행 진단을 통한 전국 단위 진단체계 활성화, 반복적인 인권침해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여 대응 강화
 - － 전국 18개 시·도청 인권 순회 교육('25. 9월~11월)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환류가 가능한 선순환 기반 마련

▶ 인권진단 건수 : '25년 : 14건 ('24. 10월 인권진단계 신설)

- 인권교육 인프라 강화 및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인권업무 심화 과정(1주, 4회) △인권교육강사 역량강화과정(1주) 신설, 인권강사 양성·관리시스템 구축 △인권강사 인력풀 확충(93명)
- 초 직원 인권교육을 위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6H)」 제작
- 다양한 참여형 채널로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
 - 기존 인권 영화제를 인권주간행사로 규모 및 기간을 확대 운영, 인권 선포식·인권 아카데미·인권영화제·인권팀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사회 각 분야 인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권 아카데미 개최하고, 인권에 대한 조직 내·외부 기고문을 활용하여 인권소식지 제작·배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경찰청 상대 진정 건수가 매년 1,500건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필요
- 기존 사이버 교육 중심의 인권교육은 교육 효과 및 실효성에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의 신뢰를 위해 중장기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찰 인권정책의 신뢰도 제고
 -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인권 감수성이 업무 수행과 의사 결정 과정에 자리 잡도록 유도
- 내·외부 인권 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교육 위주의 인권교육에서 대면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실효적 인권교육 시행
 -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반영, 法 집행 과정에서 「인권행동강령」이 구체적인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추진
 - ※ 조문별 구체적인 사례와 접목하여 교육자료 구성, 대상별 맞춤형 교육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 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 실적	준수 여부
○ 제14회 경찰청 인권문화제	12월	- 경찰청 인권주간 진행(12. 8. ~12. 12.)	정상추진
○ 인권위 협업 인권교육협의회 개최(하반기)	12월	- 제3차 인권교육 종합계획 일정에 맞춰 추진(3월)	지연추진
○ 인권아카데미(4차)	12월	- 4분기 인권 아카데미 개최(12. 10.)	정상추진
○ 인권교육 과정 운영	연중	- 경찰 인재개발원 내 교육 과정 운영	정상추진
○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점검	연중	-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교육자료 등재(매월)	정상추진
○ '26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6H) 제작	연중	- '26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완료	정상추진
○ 수시 인권진단 현장 방문	연중	- 시도청·경찰서 인권진단(14회), 결과보고 완료	정상추진
○ 정기 인권진단 계획 및 결과 보고	연중	- 정기 인권진단 계획수립(3.6.), 결과 보고(12.26.)	정상추진
○ 인권진단 우수사례 홍보	연중	- 월별·분기별 인권진단 우수사례 게시·홍보(8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8.5	▶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연계성, 국가인권위 경찰 권고 건수 감소율,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 상정건수, 인권진단 활성화라는 지표설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6.208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가 인정됨/업무체계 개편,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추진, 인권진단 활성화, 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노력 인정되어 '우수'/시기별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2.917	▶ 인권 교안 제작은 6월로 계획되었으나 10월로 지연 /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점검은 근거자료 불명확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13.5	▶ 정부부처, 시도경찰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업 노력이 높이 평가됨.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서 교육 외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642	▶ 성과지표의 특성상 목표치의 적극성이 두드러지기는 어려우며, 목표 달성도는 높게 나타남 / 인권위 상정 건수의 경우 2년간 실적치가 있음에도 전년도 실적치만 활용한 사유 / 목표치 설정이 적정하고 성과 달성 여부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3.083	▶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가 제시된 바대로 인정됨 / 대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적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심이 필요함. / 정책 효과성 관련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권위 권고 건수 감소, 국민참여 제도화, 인권위원회 실질화 등 성과의 우수함이 인정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3.333	▶ 대외는 훌륭하나 대내의 경우 고충 청취나 체계 마련으로 종료되어 실질적인 환류라 보기 어려움 / 대내외 의견 수렴 하고, 정책에 환류한 것을 확인 / 대내외 다양한 경로로 의견 수렴한 내역 및 정책에 환류한 노력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25	▶ 정책홍보 노력이 인정됨 / 대상 사건, 피해자 및 주요성과에 대해 적절한 홍보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50	○ 경찰청 상대 진정 건수는 매년 1,500건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인권 보호 노력 필요	○ '26년 정책과제 수립 시 반영(2월) (‘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보완 내용 반영)
	○ 인권 교육 효과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교육 위주의 인권교육에서 대면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26년 정책과제 수립 시 반영(2월) (「제3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에 대면 교육 반영)